

한국의 금융불평등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Finance & Service Ubuntu Fund

한국의 금융불평등

2023년 5월 15일

[공동연구진]

신광영(연구책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이 연구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발간사

2020년을 전후 3년여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으로 격변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IMF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매년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가진 것이 적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경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그 후유증으로 노동시장 지형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무금융 노사가 함께 만든 재단입니다. 2019년 창립된 이래 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노동자들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일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이를 가속화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노동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재단은 연구 조사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첫해는 우선적으로, 사무금융노조가 기반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인식, 당면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사무

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2020~21)는 디지털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 내부의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카드, 증권업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제도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1년여 동안 수차례의 연구 회의와 간담회,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조사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과 서울대 사회학과 강경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낳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은 가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구나 현행 제도하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세 번째의 연구(2022~23년)과제는 「한국의 금융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금융자산의 원활한 유통과 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역으로, 현재의 금융제도는 또 다른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조건 즉 금리나 수수료의 불평등은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은 금융 배제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쩔수 없이 고리사채에 의존하거나, 다중채무자,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파헤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 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일차적으로 오늘날의 금융 불평등의 현주소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연구주제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하는 여러 구조적 요인의 해명과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를 모색해보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증자료 수집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이끌고 총괄하신 신광영(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분야별 연구를 맡아주신 김상봉(한성대학교) 교수,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획에 참여해주신 우분투연구회 위원 모두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분투 재단은 2022년 정식으로 ‘우분투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신광영 대표와 이창곤 우분투 연구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노동과 경제, 복지, 사회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펴낼 우분투 연구보고서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간사를 마칩니다.

2023년 6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필균

목 차

서 문	1
제1장 금융화와 금융불평등_/ 신광영	5
제2장 금융불평등과 다극화_/ 김상봉	17
제3장 소득 계층과 금융부채_/ 신광영	57
제4장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부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및 부채상환 부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_/ 정준호	85
제5장 결론 및 제언_/ 신광영	151

표 목차

<표 1-1> 대출 종류와 연도별 부채 잔액 현황(2018-2022.6)	9
<표 1-2> 연령대별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 현황(은행권)	13
<표 1-3> 한국의 가구 대출 유형 분포(2022년)	14
<표 2-1>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2017~2021)	22
<표 2-2> 신용대출금액의 대출용도별 비중(평균)	23
<표 2-3> 변수별 전년대비증감	24
<표 2-4> 변수별 연평균증감 및 연평균증가율(2017~2021)	25
<표 2-5>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계수	27
<표 2-6> 소득, 순자산, 자산의 10분위배율	28
<표 2-7> 소득배율($Q(p_2=0.1)-Q(p_1=0.2)$)/($Q(p_4=0.9)-Q(p_3=0.8)$)	29
<표 2-8> 분위별 담보대출금액 및 신용대출금액(2017년과 2020년)	31
<표 2-9> 주요 변수의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치	33
<표 2-10>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 (전체기간의 경상소득과 순자산)	36
<표 2-11>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 (전체기간의 자산과 부채)	36
<표 2-12>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순위(전체기간)	37
<표 2-13> EGR의 양극화지수	40
<표 2-14> EGR의 다극화지수(3개)	40
<표 2-15> DER 극화지수	41
<표 2-16> 원천별 DER 분해($\alpha=1.0$)	42
<표 2-17> 직업별 DER 분해($\alpha=1.0$, 경상소득)	43
<표 2-18> 직업별 DER 분해($\alpha=1.0$, 순자산)	43
<표 2-19> 직업별 DER 분해($\alpha=1.0$, 자산)	44
<표 2-20> 직업별 DER 분해($\alpha=1.0$, 부채)	44

<표 2-21> Inaki 사회적 극화지수(alpha=0.5, 직업별 구분)	45
<표 2-22> 직업별 Inaki 사회적 극화지수 분해(alpha=0.5)	46
<표 3-1> 코로나-19 전후 부채 가구 비율과 금융부채 가구 비율의 추이 (2018-2022)	60
<표 3-2> 지니계수 비교(2021년, 2022년)	63
<표 3-3> 최근 5년간 소득수준별 DSR 및 1인당 평균 대출잔액	69
<표 3-4> 음의 소득 가구 비율 추이(2018-2022)	76
<표 4-1> 가계부채 위험의 평가 기준	106
<표 4-2> DSR과 DTA 등급별 결합 분포(%): 2010년과 2022년 비교 ·	120
<표 4-3>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30

그림 목차

[그림 1-1] 증시자금 추이(2020.1.-2023.3.)	11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12
[그림 1-3] 부채, 금융부채, 가구소득 추이	15
[그림 2-1]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2017~2021)	26
[그림 2-2] 주요 변수에 대한 로렌츠곡선(전체기간)	34
[그림 3-1] 가처분소득 20분위별 부채자 비율(2021 및 2022)	64
[그림 3-2] 가처분소득 분위별 부채자 평균 부채액	65
[그림 3-3] 가처분소득 분위별 금융부채자 비율	66
[그림 3-4] 가처분소득 분위별 부채자 평균 금융부채액	67
[그림 3-5] 소득 분위별 고위험 채무자 비율	70
[그림 3-6] 제2/3 금융권 금융부채 비율	71
[그림 3-7] 원리금 연체 비율	72
[그림 3-8-1] 연령별 부채자 비율	73

[그림 3-8-2] 연령 세대별 부채와 대출 형태(2022년)	74
[그림 3-9] 연령과 대출용도별 대출액수(2022)	75
[그림 3-10] 세대별 대출 위험 수준별 분포(2022년)	75
[그림 4-1]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비중($\times 100$, %) 추이	91
[그림 4-2]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지니계수 추이	93
[그림 4-3] 자산과 부채 항목별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times 100$, %) 추이	96
[그림 4-4] 자산과 부채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times 100$, %) 추이	98
[그림 4-5] 부채 보유 가구 비중(%) 추이: 2000~2022년	100
[그림 4-6]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 추이: 2000~2022년	103
[그림 4-7] DSR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 2000~2022년 ·	108
[그림 4-8] DTA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 2000~2022년 ·	112
[그림 4-9] LTI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 2000~2022년 ·	115
[그림 4-10] 과다채무(중위험 이상 등급) 가구 비중(%) : DSR과 DTA의 비교	118
[그림 4-11] 위험 가구 비중(%) : DTA 100%, DSR 40% 이상 가구	119
[그림 4-12] 가계대출 용도별 비중(%) 추이: 2010~2022년	121
[그림 4-13] 가처분소득 분위별 가계대출 용도 비중(%) 추이: 2000~2022년	123
[그림 4-14] 원리금 상환의 부담 정도에 따른 가구 비중(%) 추이: 2000~2022년	127
[그림 4-15] 조건부 한갯값: 가처분소득의 경우	134
[그림 4-16] 조건부 한갯값: 가계부채 위험 등급의 경우	135
[그림 4-17] 조건부 한갯값: 연도의 경우	138

서문

서문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불평등의 실태를 탐색적으로 다룬다.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도 금융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의해서 개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한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룬다.

오늘날 금융은 모든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었다. 과거 금융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들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저축을 전담하는 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금융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은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이제 주식, 은행 대출, 신용카드를 거의 모든 성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생활의 수단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대상으로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이 금융의 역할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가구 은행 대출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금융 불평등은 불평등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모든 경제 행위가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금융 불평등 그 자체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에 관한 논

의는 21세기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평등은 여전히 블랙 박스로 남아있다. 이제 금융은 더 이상 주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매개하는 중요한 제도의 핵심을 이룬다.

이 보고서는 금융 불평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금융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를 탐색적으로 다룬다. 금융자산은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이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게 빈곤이 더욱더 가중되는 현실을 야기한다. 신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 시장에서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금융 접근성은 부채를 통해서 부의 축적 기회를 확대시킨다든지 혹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부채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부채의 역설'이 존재한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부채를 이용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대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사채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시기는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출이 폭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되었다. 특히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을 매입하는 청년들도 나타

났다. 그 결과 새롭게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금융 불평등을 다룬다. 아직 금융 불평등과 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 실태 파악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은 추후 더 다양한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지원해 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감사を 드린다. 그리고 보고서에 여러 가지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제1장 금융화와 금융불평등

제1장 금융화와 금융불평등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친 후,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불평등과 빈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경제개방을 통해서 자본, 상품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저성장과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새로운 정책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 곳곳에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오히려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 금융화의 시대

-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변화는 금융화(financialization)이다. 금융화는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이 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생산과 거래도 금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금융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활동도 금융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금융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날로 더 중요해지고, 금융 엘리트가 국가정책이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Epstein, 2005). 이러한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이다.

○ 불안정과 유기적 위기

- 오늘날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조업 불황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 더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직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침체와 유동성 급증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 그 결과는 한국 사회는 경제 불평등, 빈곤 심화, 고용 위축, 노인 빈곤 지속, 저출산 추세 심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를 경험하고 있다. 유기적 위기는 위기가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마땅한 정책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 영역의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정치, 노동, 교육과 복지 등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주요 행위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보다 경제 수준은 훨씬 높아졌지만, 일상적인 국민의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사회불안과 갈등은 더 심해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현대 금융업은 금융기관이 화폐를 상품으로 하여 개인 가입자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요한 경제 영역이다. 제조업체들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구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인다던가 혹은

대출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 금융 불평등

- 오늘날 금융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삶의 편리함과 기회의 영역이 아니다. 금융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금융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인다. 부실 대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금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고, 현금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은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경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 상환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이것은 개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도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융의 제한을 받기도 한다.

○ 부채 문제

- 오늘날 개인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금융부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나라들이 화폐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극심한 실물경제의 위기 하에서도 금융시장은 초호황을 보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하였다. 실물경제의 침체 속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품경제가 형성된 것이다.
- 거품경제의 미시적인 토대는 개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단기적인 차

익을 추구하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발생하였다.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통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하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은행 대출을 통한 투기”가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 <표 1-1>은 2018년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대출 잔액 추이를 보여준다. 개인 총부채 잔액은 2019년 말부터 2년 반 사이인 2021년 6월 말 사이에 246조 증가하였다. 총부채 증가는 주로 신용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로 2019년 303조에서 2022년 6월 말 372조로 69조 증가하여 22.8%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액 증가는 37조 증가하여 증가율은 6.7%였다. 그러나 기간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시기에 많이 이루어져서 주로 2020년 말과 2021년 말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는 그보다 빠른 시기인 2019년 말과 2020년 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모두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하락이 낮아지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이후라는 점에서 저금리가 대출 급증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대출 종류와 연도별 부채 잔액 현황(2018-2022.6)(단위 : 조원, %)

구 분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6월말
총부채잔액 ¹⁾	1,567조	1,626조	1,755조	1,872조	1,876조
주택담보대출잔액 ²⁾	701조	684조	689조	722조	730조
신용대출잔액 ³⁾	279조	303조	356조	377조	372조
보험계약대출잔액 ⁴⁾	-	0.01조	0.17조	0.58조	0.86조
평균대출이자율 ⁵⁾	9.19%	8.56%	7.86%	7.56%	7.72%

- 1) 각 시점별 개인대출 및 카드대출 총 등록금액
- 2) 개인대출정보 중 주택담보대출 등록금액
- 3) 개인대출정보 중 신용대출 등록금액

4) 개인대출정보 중 보험계약대출* 등록금액

* '19.8월에 신규 신설되어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19년 말부터 통계 산출 가능

5) 각 시점별 DSR 산정대상 대출 보유자의 평균금리

자료: 신용정보원(2022.8.11.) 박용진 위원실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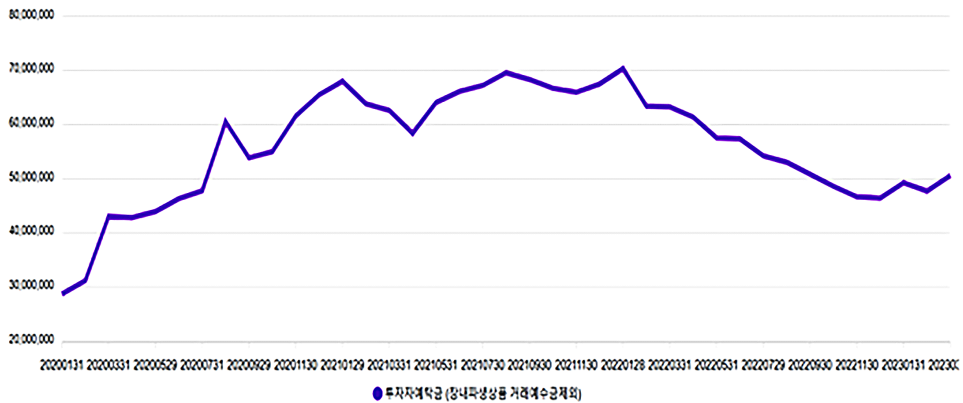
- 한국의 증권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폭락하였다. 코스피 지수는 종가기준으로 2020년 1월 4일 2065.26포인트에서 2020년 3월 19일 1457.64 포인트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을 추구하고, 소득하락으로 인한 가구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중에 대규모 통화량이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증권시장으로 몰렸다.

- 실물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맞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풀린 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급등하였다. 증시 자금이 2020년 초 30조대에서 2021년 70조대로 급증하였다. 코스피 지수는 2020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6일 3305.21 포인트로 종가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2020년 3월 코스피 종가 최저 지수에 비해서 무려 2.2675배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증시로 유동 자금이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가구소득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대출과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 아파트 가격 폭등과 부동산 버블

- 또 다른 유동성 증가의 결과는 아파트 가격 폭등이었다. 저금리 정책이 실시되면서, 시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 확대를 도모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아파트 가격 폭등은 시중에 유동성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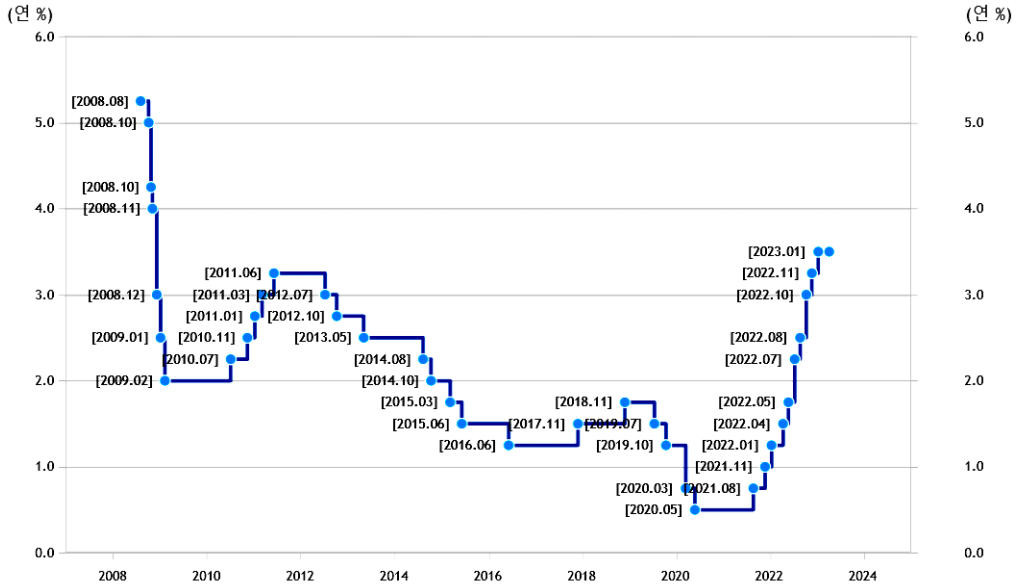
[그림 1-1] 증시자금 추이(2020.1.-2023.3.)



자료: 금융투자협회(2023) 증시자금추이(kofia.or.kr)(2023.4.19. 접속)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하되었다([그림 1-2] 참조). 기준금리는 2019년 10월 1.25%에서 2020년 3월 0.75%로 인하되었고, 또 다시 2020년 5월부터 0.5%로 더 낮아져서 2021년 8월까지 유지되었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곧바로 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금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코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 버블이 만들어졌다. 풀린 돈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단기적인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침체를 겪은 실물경제와는 대조적으로 금융시장은 투기적인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1) 1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2023.4.8. 접속)

○ 대출의 특징

- 그렇다면, 이 시기 대출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이 시기 주택담보 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연령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대출 증가는 3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9년 말부터 21년 말까지 30대가 38.9조 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였다. 그다음이 40대로 21.6조, 20대가 18.2조, 60대 17.3조, 50대 9.5조 순으로 연령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청년 세대 대출이 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른 영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20대와 20대 이하 세대에서는 대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나이가 적은 세대에서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

지 무려 2.28배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들에게서 폭발적인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표 1-2〉 연령대별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 현황(은행권)(단위 : 조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6월말
부동산 관련 대출 ¹⁾	20대이하	19.4	26	37.6	44.2	45.1
	30대	144.7	153.3	174.6	192.2	193.9
	40대	192.2	199.3	210.7	221.9	224.5
	50대	155.1	160.8	164.9	170.3	170.4
	60대이상	94.3	101.8	110	119.1	121.5

1)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의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록금액
 자료: 한국은행(2023), 연령대별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은행권)

- 이와 같은 거시적인 대출 추세는 금융시장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금융시장 불평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거시적인 추이를 통해서도 어떤 사회계층이나 계층 혹은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또한 대출과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영끌이라고 불리는 청년 대출도 모든 청년들의 금융행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도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고소득 전문직 청년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일자리로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도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대출은 대출자의 신용평가 기준이 되는 직업, 소득, 재산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이제 대부분 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경제행위가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부채 중에서 금융권 부채가 대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수집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부채 관련 금융행태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2022년 부채자 비율은 2020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부채를 안고 있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서 절대다수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유형 가운데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의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중대출 가구도 2021년 12.79%, 2022년 12.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 가지 이상의 대출을 동시에 하고 있다. 2021년 다중대출 가구는 약 274만 가구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다중대출 가구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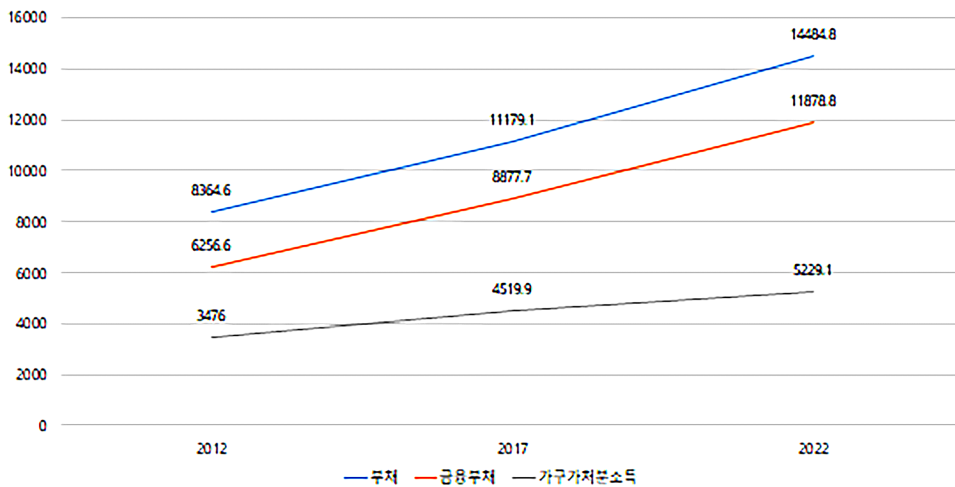
〈표 1-3〉 한국의 가구 대출 유형 분포(2022년)

가구 대출 유형	비율(%)		
	2012	2017	2022
가구 부채 없음	34.85	36.50	36.70
비금융권 부채	6.27	6.72	6.04
금융권 담보대출	24.18	27.40	26.39
금융권 신용대출	12.51	9.70	10.62
금융권 담보대출 + 신용대출	10.88	11.07	12.40
기타 대출	11.32	8.61	7.85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절대적인 대출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세 시기(2012년, 2017년과 2022년)를 비교하면, 대출자 1인당 부채액은 2012년 8,364.6만 원, 2017년 11,179.1만 원, 2022년 14,484.8만 원으로 대단히 빠르게 늘어났다. 연평균 부채액 증가율은 7.3%로 소득증가율 5.9%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중에서 금융권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2년 6526.5만 원에서 2017년 8877.7만 원, 2022년 11878.8만 원으로 연평균증가율 8.2%로 나타나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 [그림 1-3]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 금융부채와 가구 가치분소득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채와 가치분소득 간의 격차가 2012년 4,888.6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255.7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부채와 소득 간의 격차는 더 확대되어 2012년 2022년 사이 2,780.6만 원에서 6,649.7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2001.1만 원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부채 증가분 2,621.1만 원보다는 적었다. 이는 과도한 금융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대출이 둔화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림 1-3] 부채, 금융부채, 가구소득 추이



제2장 금융불평등과 다극화

제2장 금융불평등과 다극화

서론: 불평등과 극화에 대한 연구

□ 불평등 연구는 18세기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논쟁 시작

○ 불평등 연구는 18세기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논쟁 시작

-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은 홉스(Thomas Hobbes), 로크(John Locke),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강조¹⁾
- 반면 자유주의 논의의 비판으로 루소(Jean Jacques Rousseu)는 **평등주의 원리**를 지향²⁾

1) 홉스의 자연법 사상은 비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또 다른 원리인 정치권력의 제한에 위배된다. 로크에게서 정의는 소유권의 자연성에 근거하는 자연적 정의를 의미하며 소유의 확대에 의한 불평등 소유의 현실을 정당화한다. 스미스는 불평등한 소유를 정당화하는 분업론에서 노동에 반비례하는 소득분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모든 행위는 자유의 침해이며 동시에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2) 루소는 자연권이 상실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의 분석과 비판으로 자연권을 복원하고 유효화시키는 사회계약으로 역사발전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롤스(John Bordley Rawls)의 정의론³⁾, 드워킨(Ronald Dworkin)의 자원평등론⁴⁾, 센(Amartya Kumar Sen)의 능력이론⁵⁾ 등이 등장
-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 걸친 논쟁이나 연구들이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 주로 소득불평등이 많은 주제로 다루어졌고, 일부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 양극화 연구는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과 함께 시작

- 1929년 대공황 때까지 극심한 불평등을 겪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사회의 방향은 바뀜

-
- 3)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 및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제2원칙)으로 구성된다. 제1원칙은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이는 자존감의 기반으로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므로 제2원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의 능력과 권리에 따른 차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은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이다.
 -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사회구성원이 갖는 자원의 몫이 가능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단적 혹은 과정적 평등을 강조한다.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분배가 진정한 평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 5) 센은 자유의 개념을 기회(목적)와 과정(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기회로서 자유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또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과정으로서 자유는 선택의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센의 능력이론은 자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능력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평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합당한 평등과 합당한 불평등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능력의 평등을 지향하지만 능력의 평등 공간만이 유일하고 그 외의 다양한 평등공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1920~1950년대에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었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차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재편됨
- 그러나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부터 양극화나 극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

2. 경제에서의 불평등, 빈곤, 후생의 관계 및 기초통계량

□ 불평등도(inequality)는 빈곤(poverty)이나 후생(welfare)의 개념과 반드시 같지 않음

○ 범위로 보면 빈곤 \subset 불평등 \subset 후생

- 빈곤 \subset 불평등: 빈곤율의 의미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개인(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소득불평등도는 소득 전체의 분포를 정의하기 때문에 빈곤율보다 넓은 범위를 말함
 - 즉, 소득분포의 하위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나 상위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 있음
- 불평등 \subset 후생: 후생과 소득 불평등은 전체 분포에 초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소득불평등도는 분포의 퍼짐(dispersion)이나 분산만을 고려하지만, 후생은 분포의 퍼짐과 동시에 평균도 고려
- 이러한 불평등도, 빈곤, 후생의 개념은 서로 연관됨

- 극화는 불평등과 개념이 약간 다름
 - 사회의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한다면 상대적 불평등도는 같아지는 문제 발생
 -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지니계수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등을 활용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의 추세나 원인 분석을 하였고 분포의 변동 등으로 연구들이 다양화→이러한 원인은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이라는 시대적 문제가 발생 때문임
 - 양극화를 포함하는 극화(polarization)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등장
 - 극화 중에 n개의 집단(group)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다극화라고 하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극화를 양극화(bi-polarization)라고 함

□ 기초통계량

- 가구주 만연령, 순자산, 자산, 부채, 경상소득(소득) 등 증가 추세
 - 2017년 가구주 만연령 55.2세→2021년 58.1세
 - 2017년 순자산 3.1억 원→2021년 3.85억 원
 - 2017년 자산 3.77억 원→2021년 4.57억 원
 - 2017년 부채 6,627만 원→2021년 7,233만 원
 - 담보대출 2017년 3,853만 원→2021년 4,224만 원
 - 신용대출 2017년 633만 원→2021년 816만 원

〈표 2-1〉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2017~2021)

단위: 명, 만 원

구분	가구주 만연령	순자산	자산	부채	경상 소득	이전 소득	처분가능 소득	담보대출 금액	신용대 출금액
2017	관측치	18,497	18,497	18,497	18,497	18,497	18,497	18,497	18,497
	평균	55.2	31,083	37,709	6,627	5,231	454	4,305	3,853
	표준편차	14.9	53,487	65,492	21,201	5,653	779	4,341	14,451
	최소값	18	-116,460	1	0	0	0	-46,241	0
	최대값	106	1,995,400	2,670,200	1,150,000	161,310	9,358	95,422	800,000
2018	관측치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평균	56.0	33,660	40,611	6,951	5,363	492	4,379	4,049
	표준편차	14.8	57,498	68,201	19,463	5,815	820	4,332	14,085
	최소값	19	-122,423	1	0	0	0	-27,273	0
	최대값	107	1,746,200	2,346,200	750,000	239,335	8,782	147,561	690,000
2019	관측치	18,406	18,406	18,406	18,406	18,406	18,406	18,406	18,406
	평균	56.9	33,894	40,830	6,935	5,414	541	4,401	4,037
	표준편차	14.7	56,881	66,031	18,288	5,614	850	4,113	12,724
	최소값	19	-148,335	1	0	0	0	-31,419	0
	최대값	101	1,177,180	1,343,000	677,650	251,794	12,000	147,306	559,650
2020	관측치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평균	57.6	34,127	41,243	7,116	5,495	616	4,483	4,159
	표준편차	14.8	57,874	66,637	18,128	5,564	890	4,210	12,866
	최소값	20	-137,330	1	0	0	0	-37,375	0
	최대값	102	1,267,900	1,518,417	674,650	225,116	11,442	179,227	556,650
2021	관측치	18,187	18,187	18,187	18,187	18,187	18,187	18,187	18,187
	평균	58.1	38,503	45,736	7,233	5,538	771	4,551	4,224
	표준편차	15.0	64,205	73,088	18,329	5,574	892	4,254	12,814
	최소값	19	-63,427	1	0	40	0	-43,952	0
	최대값	103	1,626,255	1,674,255	674,650	219,905	11,600	174,576	556,65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출

○ 부채 중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관련 대출이 가장 높음

- 2021년 거주주택 구입금액+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구입금액+전월세보증금마련금액이 30.2%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2〉 신용대출금액의 대출용도별 비중(평균)

단위: 만 원

	신용대출 금액	사업자금 마련금액	거주주택 구입금액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구입금 액	전월세보 보증금마련 금액	부채상환 금액	생활비마 련금액	기타용 도금액
2017	633	176	83	75	53	49	132	64
	100%	27.9%	13.2%	11.8%	8.4%	7.8%	20.8%	10.1%
2018	700	194	70	124	57	38	127	90
	100%	27.7%	10.0%	17.7%	8.1%	5.4%	18.2%	12.9%
2019	689	210	59	87	63	36	136	99
	100%	30.4%	8.5%	12.6%	9.2%	5.2%	19.7%	14.4%
2020	757	215	55	109	67	40	160	111
	100%	28.4%	7.3%	14.5%	8.9%	5.3%	21.1%	14.6%
2021	816	211	82	99	65	48	174	136
	100%	25.9%	10.1%	12.1%	8.0%	5.9%	21.3%	16.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출

○ 변수별 전년대비증감에서 순자산, 자산, 부채의 증감의 원인은 주택 등의 부동산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 가구주연령: 매년 0.5~0.9세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감소
- 순자산: 전년대비로 2018년 2,577만 원 증가하였으나 2019년 235만 원, 2020년 233만 원으로 증가액수가 감소하다가 2021년 4,376만 원 증가
- 자산: 전년대비로 2018년 2,902만 원, 2019년 219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 414만 원, 2021년 4,493만 원으로 증가
- 부채: 전년대비로 2018년 325만 원 증가하였으나 2019년 16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 181만 원, 2021년 117만 원 증가

- 경상소득: 전년대비로 2018년 132만 원, 2019년 51만 원, 2020년 81만 원, 2021년 43만 원 증가
- 담보대출: 전년대비로 2018년 197만 원 증가하였다가 2019년 12만 원 감소하였고, 2020년 122만 원, 2021년 65만 원 증가
- 신용대출: 전년대비로 2018년 66만 원 증가하였다가 2019년 11만 원 감소하였고, 2020년 68만 원, 2021년 59만 원 증가
-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2018년과 2021년의 순자산, 자산, 부채의 변화는 거주주택금액과 거주주택이외의부동산금액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예상

〈표 2-3〉 변수별 전년대비증감

단위: 세, 만 원

구분	가구 만연령	순자산	자산	부채	경상소득	이전 소득	채권 소득	담보대출 금액	신용대출금액								
									총액	사업자금 대출금액	거주주택 대출금액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대출금액	전월세보 통년 금액	부채상환 금액	생활바 라 대출금액	기타 대출 금액	
2018	관측치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평균	0.8	2,577	2,902	325	132	38	74	197	66	17	-14	49	4	-11	-4	26
	표준편차	-0.1	4,011	2,709	-1,738	162	42	-9	-366	233	-83	-87	514	149	-162	-90	215
	최소값	1.0	-5,963	0	0	0	0	18,968	0	0	0	0	0	0	0	0	0
	최대값	1.0	-249,200	-324,000	-400,000	78,025	-576	52,139	-110,000	14,388	-23,000	26,000	23,902	25,800	0	-15,000	0
2019	관측치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평균	0.9	235	219	-16	51	49	22	-12	-11	16	-11	-37	6	-3	8	9
	표준편차	-0.1	-617	-2,170	-1,175	-200	30	-219	-1,361	-348	79	-171	-473	146	-115	75	-286
	최소값	0.0	-25,912	0	0	0	0	-4,146	0	0	0	0	0	0	0	0	0
	최대값	-6.0	-569,020	-1,003,200	-72,350	12,459	3,218	-255	-130,350	-84,388	-7,000	-24,800	-58,600	4,200	-10,000	4,200	-86,000
2020	관측치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평균	0.7	233	414	181	81	76	82	122	68	5	-3	22	4	4	24	11
	표준편차	0.1	994	605	-160	-51	40	97	142	366	96	-92	633	-4	-85	79	1
	최소값	1.0	11,005	0	0	0	0	-5,956	0	0	0	0	0	0	0	0	0
	최대값	1.0	90,720	175,417	-3,000	-26,678	-558	31,921	-3,000	30,000	6,000	-13,787	62,600	0	-24,000	5,800	-16,580
2021	관측치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평균	0.5	4,376	4,493	117	43	155	68	65	59	-4	27	-11	-2	8	14	26
	표준편차	0.2	6,330	6,451	202	11	2	45	-52	-59	-106	264	-331	-93	41	89	251
	최소값	-1.0	73,903	0	0	40	0	-6,577	0	0	0	0	0	0	0	0	0
	최대값	1.0	358,355	155,838	0	-5,211	158	-4,651	0	-20,000	4,000	5,587	-40,500	-18,000	-1,000	7,000	36,580

○ 2017년~2021년 4년간 연평균증가률:

신용대출>순자산>자산>>담보대출>부채>경상소득 순

- 연평균증감: 가구주연령은 평균 0.7세, 순자산은 1,855만 원, 자산은 2,077만 원, 부채는 152만 원, 경상소득은 77만 원, 담보대출금액은 93만 원, 신용대출 금액은 46만 원 증가
- 연평균증가율(CAGR): 신용대출 6.5%, 순자산은 5.5%, 자산 4.9%, 담보대출 2.3%, 부채 2.2%, 경상소득 1.4%

〈표 2-4〉 변수별 연평균증감 및 연평균증가율(2017~2021)

단위: 세,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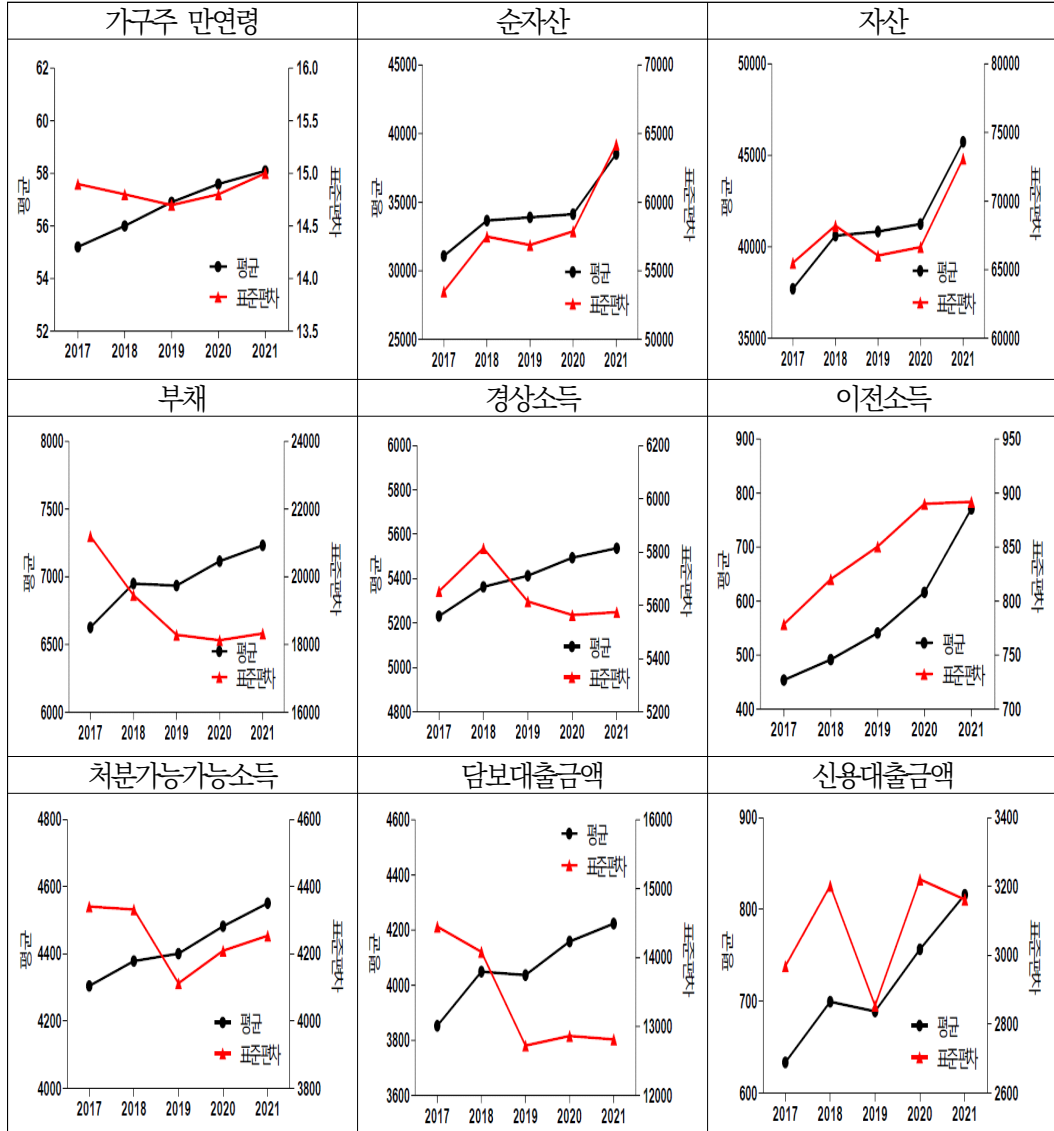
구분	가구주 만연령	순자 산	자산	부채	경상 소득	이전 소득	처분가 능소득	담보대 출금액	신용대출금액							
								총액	사업자 금마련 금액	거주주 택구입 금액	거주주택 이의 부동산구입 금액	전월세보 증금마련 금액	부채 상환 금액	생활 비마 련금 액	기타 용도 금액	
연평균증감	0.7	1,855	2,007	152	77	79	61	93	46	9	0	6	3	0	11	18
연평균증가율 (CAGR)	1.3%	5.5%	4.9%	2.2%	1.4%	14.1%	1.4%	2.3%	6.5%	4.6%	-0.4%	7.1%	5.4%	-0.6%	7.2%	20.8%

○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 순자산 및 자산: 평균은 증가, 표준편차는 2019년 감소
- 경상소득: 평균은 증가, 표준편차는 2018년 이후에 감소
- 담보대출: 평균은 2019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2019년 이후 감소
- 신용대출: 평균은 2019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
- 2018년에 부채, 순자산,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 2021년에 순자산,

자산,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

[그림 2-1]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2017~2021)



○ 주요 변수 상관관계

- 순자산은 자산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

- 자산은 부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
- 부채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부채, 자산, 순자산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표 2-5〉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계수

	가구주 만연령	경상소 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 출금액	신용대 출금액
가구주 만연령	1.0000						
(p-value)	0.0000						
경상소득	-0.2335	1.0000					
(p-value)	0.0000	0.0000					
순자산	0.0344	0.5129	1.0000				
(p-value)	0.0000	0.0000	0.0000				
자산	0.0010	0.5375	0.9660	1.0000			
(p-value)	0.7703	0.0000	0.0000	0.0000			
부채	-0.1011	0.3519	0.3949	0.6189	1.000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담보대출금액	-0.1065	0.2954	0.2931	0.4925	0.8600	1.000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신용대출금액	-0.1141	0.1993	0.0795	0.1589	0.3232	0.1568	1.000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3. 불평등도 추정 및 분해

□ 분위배율(quantile ratio)

- 10분위배율(quantile ratio): 소득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10분위: 전체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

- 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분위배율이 커지는 경우: 분모인 하위계층에 비해 분자인 상위계층의 상대적 소득이 증가→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등의 분배가 악화→상위계층의 소득이 매우 크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매우 작다면, 소득 분위 배율은 무한대에 가까워 값이 산출되지 않음
- 소득 등의 분배가 가장 균등한 경우: 10분위 배율의 경우 상위 10% 계층의 소득과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같아지므로 1이 됨

○ 10분위배율 추정결과

- 경상소득 10분위배율: 2018년~202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득분배는 개선
- 순자산의 10분위배율: 소득보다 매우 크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순자산분배는 악화
- 자산의 10분위배율: 소득보다 크지만 순자산보다 작게 나타나며, 2020년을 제외하고 악화
-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10분위배율은 2017년~2021년에 산출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 연도별로 증감을 비교할 수 없으나 이미 매우 불평등

〈표 2-6〉 소득, 순자산, 자산의 10분위배율

	소득	순자산	자산
2017	12.3464	77.6556	55.6887
2018	12.1132	78.0000	55.4294
2019	11.5898	87.0787	59.6401
2020	10.8825	92.8876	59.2405
2021	10.1002	99.6835	68.3755
전체	11.3043	87.4000	59.8212

주: 모든 추정치는 5% 이내에서 유의함

□ 배율(share ratio)

- 배율(share ratio): 분위 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에 대한 비율
 - 모든 가계의 소득수준을 최하위에서부터 최상위까지 모두 나열하고, 이를 순서에 따라 10%씩 계층으로 묶어(10분위배율) 두 개의 상위계층과 두 개의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를 비교
 - 값이 작을수록 분배 변화가 불평등한 구조
- 배율 추정결과
 - 소득배율: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이후 증가
 - 순자산배율: 2018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 자산배율은 2018년 감소, 2019년 증가, 2020년 증가, 2021년 감소로 계속 변화
 -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배율은 모든 기간 동안에 0으로 나타남

〈표 2-7〉 소득배율($Q(p2=0.1)-Q(p1=0.2)$)/($Q(p4=0.9)-Q(p3=0.8)$)

	소득	순자산	자산
2017	0.1444	0.0179	0.0248
2018	0.1351	0.0175	0.0240
2019	0.1439	0.0182	0.0257
2020	0.1497	0.0183	0.0261
2021	0.1678	0.0181	0.0239
전체	0.1444	0.0179	0.0248

주: 모든 추정치는 5% 이내에서 유의함

- 중앙값 이상에서 값이 분포하기 때문에,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무한대, 배율은 모두 0이 되는 이유
 - 아래의 표는 2017년과 2021년의 분위별 금액을 나타냄⁶⁾
 - 담보대출금액과 신용대출금액 모두 하위 75%(상위 25%) 정도에서 값이 나타남
 - 2017년부터 2021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액은 하위 65%에서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용대출금액은 하위 80%부터 나타남
 - 대출이 있는 경우의 담보대출금액의 하한선이 신용대출금액의 하한보다 낮은 이유는 담보가 신용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
 - 대출할 의도가 아예 없거나, 담보가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다 상위 분위로 이동→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담보대출금액은 35%가 받고 있으며, 신용대출금액은 상위 20% 정도만이 받고 있음

- 금리가 낮은 시기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정책적으로 분리할 필요
 -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에 대해 신용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가격변화에 대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더한 금액을 전체대출로 보고, 주택가격의 경기변동에 따른 2사이클을 계산하여 담보가액을 설정할 수 있음⁷⁾
 - 차주의 신용상태는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담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임
 - 반면에 신용대출의 기본이 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경우에 주택보유여부를 빼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변수로 활용할 필요

6) 2017년 이후의 전체기간에 대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분포는 비슷하다.

7)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장기부도율을 계산할 때 경기변동의 2사이클(약 7년)을 계산하는데, 김상봉 외(2009)를 참조하라.

〈표 2-8〉 분위별 담보대출금액 및 신용대출금액(2017년과 2020년)

단위: 만 원

퍼센트	2017				2021			
	담보대출금액		신용대출금액		담보대출금액		신용대출금액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1%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25%	0	0	0	0	0	0	0	0
50%	0	0	0	0	0	0	0	0
75%	3,000	500,000	0	79,886	3,500	284,462	0	59,500
90%	10,560	500,000	1,500	82,200	12,700	300,000	2,000	70,000
95%	18,000	690,000	3,283	100,000	20,000	300,000	4,700	74,000
99%	48,000	800,000	11,000	140,000	51,600	556,650	14,000	80,000

□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

- 상대적 지니계수는 절대적 지니계수를 평균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이므로, 절대적 지니계수는 상대적 지니계수에 평균을 곱한 값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전체평균소득이 증가→절대적 지니계수는 증가
 - 그러나 절대적 지니계수는 최빈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단점
- 상대적 지니계수는 이러한 절대적 지니계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빈층의 소득점유율 변화에 큰 가중치를 주게 됨
 - 상대적 지니계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 즉,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결과

- 상대적 지니계수에 따른 불평등 정도: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채 > 순자산 > 자산 > 경상소득 순
-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의 지니계수는 0.70 이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
- 주요 변수별 시간에 따른 상대적 지니계수 흐름
 - 경상소득: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기초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 소득 등의 증가가 경상소득의 증가보다 컸기 때문임
 - 순자산: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보다 크고 그 값도 계속 커지고 있어 불평등지수가 커짐
 - 자산: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
 - 부채: 2020년까지 작아지다가 2021년에 증가
 - 담보대출: 2020년까지 작아지다가 2021년에 증가
 - 신용대출에 대한 지니계수는 매우 불평등한 상태로 거의 1에 가까우며 2018년에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 2017년대비 2021년 상대적 지니계수 증감률: 순자산 > 자산 > 소득,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는 이미 높은 매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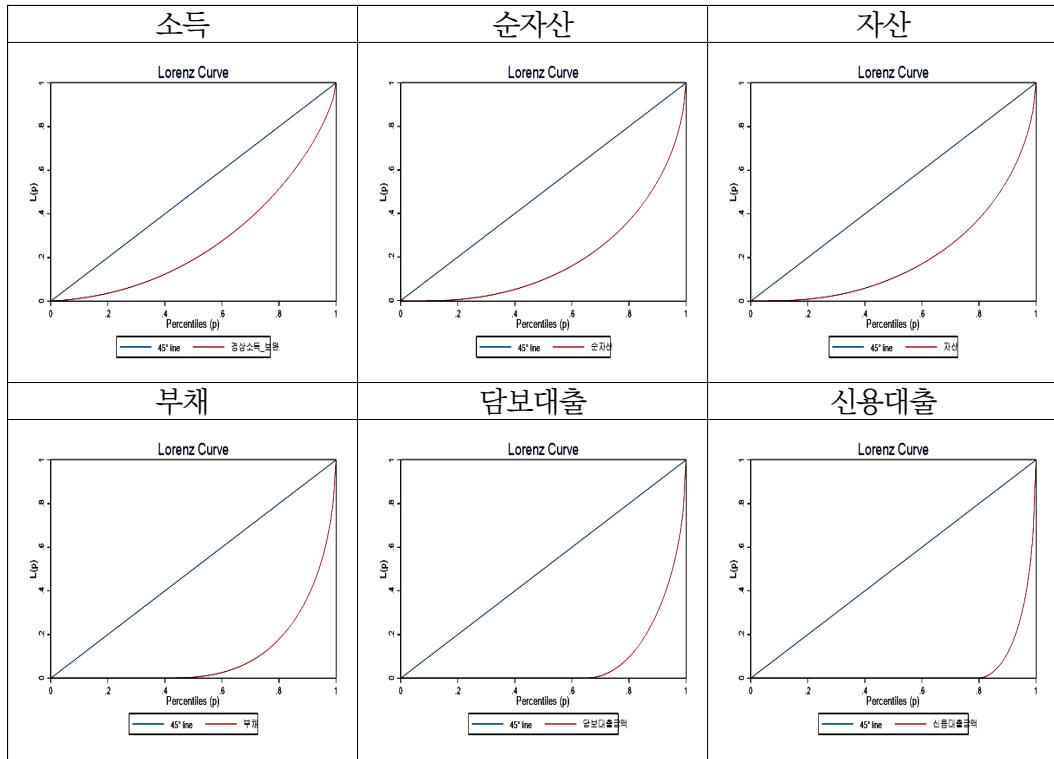
〈표 2-9〉 주요 변수의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치

상대적 지니계수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2017	0.4576	0.6100	0.5976	0.7985	0.8510	0.9234
2018	0.4587	0.6151	0.6008	0.7962	0.8504	0.9248
2019	0.4515	0.6204	0.6043	0.7960	0.8480	0.9210
2020	0.4445	0.6217	0.6023	0.7926	0.8460	0.9208
2021	0.4408	0.6261	0.6081	0.7942	0.8493	0.9158
전체	0.4508	0.6198	0.6035	0.7957	0.8491	0.9214
상대적 지니계수의 전년대비 증감						
2018	0.0011	0.0051	0.0032	-0.0023	-0.0006	0.0014
2019	-0.0072	0.0053	0.0035	-0.0002	-0.0024	-0.0038
2020	-0.0070	0.0013	-0.0020	-0.0034	-0.0020	-0.0002
2021	-0.0037	0.0044	0.0058	0.0016	0.0033	-0.0050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	-3.67%	2.64%	1.76%	-0.54%	-0.20%	-0.82%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 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득 등의 값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을 나타냄

[그림 2-2] 주요 변수에 대한 로렌츠곡선(전체기간)



□ 상대적 지니계수 분해⁸⁾

○ Lerman and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원천별 및 하위집단별)

- Lerman and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는 각 원천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
-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결과는 Rao의 분해결과와 유사
 -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는 Rao의 분해결과와 유사하며, 담보대출, 신용대출, 경상소득의 집중도지수가 지니계수보다 크고, 전체불평등도지수(자산에 가까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불평등을

8) 보다 다양한 모형의 이론은 김상봉(2022), 실증분석 결과는 김상봉 외(2023)를 참조하라.

줄일 필요가 있음

- 지니계수: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순자산 > 경상소득
- 순위상관계수(지니상관계수): 순자산 > 경상소득 > 담보대출 > 신용대출 순
-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 결과
 -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는 직업별로 불평등도가 다름
 - 집단내 변수별 불평등도가 전체 변수별 불평등에 약 10~13% 정도를 기여
→ 직업별로 인구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집단내 불평등도는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집단간 지니계수, 즉 각 직업집단의 변수평균으로 계산한 변수별 불평등도는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를 33%~39% 정도 설명하고 있어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직업 간 변수별 불평등도가 미치는 효과가 세 가지 요인 중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남 → 즉, 직업집단으로 계층을 구분했을 때, 변수별 불평등도가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직업집단 간의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순자산 > 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
 - 중첩 또는 나머지 요인은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 상태에 51%~55% 정도를 기여하고 있어 세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직업집단에 속한 가구들의 변수들의 수준이 직업집단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어떤 직업집단의 최고소득가구의 수준이 차상위 직업집단의 최저소득가구의 소득보다 더 커서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 →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구주의 다른 특성인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10〉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전체기간의 경상소득과 순자산)

경상소득	지니 계수	인구 비율	변수 비중 (S_k)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순자산	지니 계수	인구 비율	변수 비중 (S_k)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관리자	0.4008	0.0190	0.0420	0.0003	0.0007	관리자	0.5609	0.0190	0.0496	0.0005	0.0009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3939	0.1144	0.1882	0.0085	0.0188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5782	0.1144	0.1810	0.0120	0.0193
사무종사자	0.3466	0.1118	0.1737	0.0067	0.0149	사무종사자	0.5447	0.1118	0.1553	0.0095	0.0153
서비스종사자	0.3985	0.0651	0.0592	0.0015	0.0034	서비스종사자	0.6065	0.0651	0.0485	0.0019	0.0031
판매종사자	0.3682	0.0688	0.0750	0.0019	0.0042	판매종사자	0.5878	0.0688	0.0696	0.0028	0.004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4263	0.0671	0.0523	0.0015	0.003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5381	0.0671	0.0826	0.0030	0.004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3240	0.0830	0.0883	0.0024	0.005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5239	0.0830	0.0621	0.0027	0.0044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3116	0.1083	0.1215	0.0041	0.0091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5051	0.1083	0.0850	0.0046	0.0075
단순노무종사자	0.3865	0.1078	0.0720	0.0030	0.0067	단순노무종사자	0.6459	0.1078	0.0544	0.0038	0.0061
군인	0.1957	0.0018	0.0028	0.0000	0.0000	군인	0.4762	0.0018	0.0014	0.0000	0.0000
미관측	0.4983	0.2531	0.1249	0.0157	0.0349	미관측	0.6983	0.2531	0.2106	0.0372	0.0601
집단내				0.0457	0.1013	집단내				0.0780	0.1259
집단간				0.2444	0.5420	집단간				0.2019	0.3257
증첩(나머지)				0.1608	0.3566	증첩(나머지)				0.3399	0.5484
전체	0.4508	1.0000	1.0000	0.4508	1.0000	전체	0.6198	1.0000	1.0000	0.6198	1.0000

〈표 2-11〉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전체기간의 자산과 부채)

자산	지니 계수	인구 비율	변수 비중 (S_k)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부채	지니 계수	인구 비율	변수 비중 (S_k)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관리자	0.5442	0.0190	0.0498	0.0005	0.0009	관리자	0.7283	0.0190	0.0509	0.0007	0.0009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5516	0.1144	0.1842	0.0116	0.0193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7155	0.1144	0.1999	0.0164	0.0206
사무종사자	0.5256	0.1118	0.1613	0.0095	0.0157	사무종사자	0.7214	0.1118	0.1906	0.0154	0.0193
서비스종사자	0.5842	0.0651	0.0514	0.0020	0.0032	서비스종사자	0.7581	0.0651	0.0661	0.0033	0.0041
판매종사자	0.5650	0.0688	0.0749	0.0029	0.0048	판매종사자	0.7330	0.0688	0.1009	0.0051	0.006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5347	0.0671	0.0771	0.0028	0.004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8494	0.0671	0.0505	0.0029	0.003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4998	0.0830	0.0640	0.0027	0.004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7262	0.0830	0.0733	0.0044	0.005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4720	0.1083	0.0859	0.0044	0.0073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7042	0.1083	0.0906	0.0069	0.0087
단순노무종사자	0.6197	0.1078	0.0539	0.0036	0.0060	단순노무종사자	0.8381	0.1078	0.0514	0.0046	0.0058
군인	0.4411	0.0018	0.0015	0.0000	0.0000	군인	0.6889	0.0018	0.0019	0.0000	0.0000
미관측	0.6913	0.2531	0.1960	0.0343	0.0568	미관측	0.8897	0.2531	0.1240	0.0279	0.0351
집단내				0.0742	0.1229	집단내				0.0875	0.1100
집단간				0.2066	0.3423	집단간				0.2888	0.3629
증첩(나머지)				0.3227	0.5348	증첩(나머지)				0.4193	0.5270
전체	0.6035	1.0000	1.0000	0.6035	1.0000	전체	0.7957	1.0000	1.0000	0.7957	1.0000

- 직업별 순위 상, 경상소득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있음
- 순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이 있음
-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이 있음

〈표 2-12〉 직업별 인구 집단에 따른 지니계수 순위(전체기간)

	경상소득 순위	순자산 순위	자산 순위	부채 순위	담보대출 순위	신용대출 순위
관리자	3	6	6	6	5	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	5	5	9	11	6
사무종사자	8	7	8	8	10	9
서비스종사자	4	3	3	4	4	8
판매종사자	7	4	4	5	6	1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	8	7	2	2	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9	9	9	7	7	4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	10	10	10	9	7
단순노무종사자	6	2	2	3	3	2
군인	11	11	11	11	8	11
미관측	1	1	1	1	1	1

- Lerman and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결과의 함의(직업별 하위집단)
 -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의 직업별로 불평등도가 다름
 - 집단내 지수계수: 직업별로 인구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집단내 불평등도는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집단간 지니계수: 직업집단간의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순자산 > 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업과 직장에 대한 정보를 사

제할 필요

- 중첩 또는 나머지 요인: 상당히 크며, 우리나라의 가구주의 다른 특성인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업별 순위 상, 경상소득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 순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4. 극화 추정 및 분해

□ 일반화된 ER지수(EGR지수)

- ER(Esteban and Ray, 1994)지수류는 서수적인 다극화 측정법이며, 동질성-이질성 접근법(identification-alienation approach)에 기초
- 극화(polarization)=서로 다른 집단(group)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에 적대감(antagonisms)의 합계
 - 적대감=같은 집단내에서 동질성(identification)+다른 집단간에 소외감 또는

- 이질성(alienation)이 결합된 형태의 결과 → 극화지수로 표현
- 극화의 증감 원인
 - 집단내에서 동질성 증가 → 극화 증가
 - 동질성과 이질성의 결합인 적대감 증가 → 극화 증가
 - 개별 집단의 중앙값 사이에 역진적 소득이전 발생 → 극화 증가
 - 중앙값으로 구분된 개별 집단에서 누진적인 소득이전 발생 → 극화 감소
 - EGR(Esteban, Gradin, and Ray, 1999) 지수는 집단의 수가 결정되면, 집단간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
 - 예를 들어, 소득다극화를 추정하려면 집단의 수가 결정되어야 하고, 집단내 불평등도를 추정해야 함
 - 집단들의 위치를 설정하는 원칙은 개별 집단이 겹치지 않아야 하고, 집단내 불평등도를 최소화하도록 결정해야 함
 - ER지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두게 되는 가중치와 극점의 개수의 집단에 대한 분포에 대한 근사를 활용하여 최적오차를 구함
 - 극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소득계층(소득집단)을 양분화하여 사용: EGR지수를 적용할 때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3개 이상으로 구분되면 계산하기 어려움 → 다극화를 산출하는 ER지수나 EGR지수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양분화된 지수를 주로 산출하므로, 양극화를 계산한 수치가 됨
 - EGR 추정결과
 - 양극화는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채 >> 순자산 > 자산 > 소득 순
 - 앞에서 살펴본 상대적 지니계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 순자산, 자산, 소득 순서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순서 일치

-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을 보면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지니계수의 증감률보다 크게 나타나 양극화의 정도가 커졌음
- 특히 소득의 양극화는 보다 작아졌으나 자산의 양극화는 커졌음

〈표 2-13〉 EGR의 양극화지수

	alpha=1						alpha=1.6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2017	0.1762	0.2547	0.2490	0.4280	0.5242	0.6964	0.0814	0.1322	0.1298	0.2678	0.3477	0.5390
2018	0.1773	0.2603	0.2533	0.4275	0.5227	0.6966	0.0824	0.1368	0.1336	0.2689	0.3443	0.5393
2019	0.1753	0.2640	0.2561	0.4309	0.5264	0.6955	0.0815	0.1397	0.1358	0.2704	0.3476	0.5372
2020	0.1714	0.2644	0.2567	0.4275	0.5261	0.6889	0.0786	0.1391	0.1370	0.2644	0.3460	0.5300
2021	0.1703	0.2719	0.2640	0.4341	0.5379	0.6869	0.0782	0.1443	0.1410	0.2697	0.3610	0.5225
전체	0.1743	0.2641	0.2566	0.4299	0.5275	0.6932	0.0805	0.1393	0.1363	0.2690	0.3485	0.5338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	-1.09%	3.73%	3.06%	0.45%	0.63%	-0.46%	-1.11%	5.40%	4.96%	0.45%	0.22%	-0.97%
지니계수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	-3.67%	2.64%	1.76%	-0.54%	-0.20%	-0.82%	좌동					

- 다극화(3개)의 경우에 2017년대비 2021년의 증감률은 지니계수의 증감률과 유사

〈표 2-14〉 EGR의 다극화지수(3개)

	alpha=1						alpha=1.6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2017	0.1818	0.2582	0.2514	0.4169	0.5108	0.6804	0.1818	0.1129	0.1099	0.2353	0.3272	0.5366
2018	0.1818	0.4944	0.2538	0.4132	0.5090	0.6785	0.0719	0.1164	0.1113	0.2308	0.3247	0.5343
2019	0.1792	0.2650	0.2561	0.4156	0.5100	0.6768	0.0707	0.1176	0.1130	0.2338	0.3259	0.5310
2020	0.1771	0.2641	0.2545	0.4137	0.5110	0.6674	0.0700	0.1153	0.1112	0.2318	0.3274	0.5193
2021	0.1769	0.2713	0.2612	0.4206	0.5281	0.6700	0.0710	0.1220	0.1161	0.2393	0.3490	0.5224
전체	0.1795	0.2648	0.2559	0.4148	0.5127	0.6739	0.0712	0.1170	0.1126	0.2323	0.3293	0.5278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	-1.24%	2.56%	1.80%	-0.49%	0.38%	-0.96%	-60.83%	3.65%	2.50%	-1.24%	0.65%	-1.64%
지니계수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	-3.67%	2.64%	1.76%	-0.54%	-0.20%	-0.82%	좌동					

□ Duclos, Esteban and Ray의 극화지수(DER지수) 추정 및 분해

- Duclos, Esteban and Ray(2004)의 극화지수(DER)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를 정규화하여 사용
 - 가우스 커널 추정치(Gaussian kernel estimator)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할 때 사용
 - 가우스 커널 추정은 비모수통계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분포를 가지고 이 상치를 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Araar(2008)은 Duclos, Esteban and Ray(2004) 극화지수를 인구집단에 따른 분해를 제안
 - 집단내(within group) 불평등도와 집단간(between group) 불평등도로 구분
- DER 극화지수 추정결과
 - DER 극화지수의 크기는 부채 >> 자산 > 순자산 > 소득 순

〈표 2-15〉 DER 극화지수

	alpha=1				alpha=1.6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2017	0.1960	0.3094	0.3452	12.6107	0.1537	0.4828	0.6709	2409.3635
2018	0.1983	0.3118	0.3478	11.9420	0.1566	0.4803	0.6677	2203.3184
2019	0.1969	0.3168	0.3536	11.9069	0.1554	0.4739	0.6307	2180.9900
2020	0.1936	0.3080	0.3472	11.9059	0.1508	0.4303	0.5855	2224.8433
2021	0.1943	0.3296	0.3625	11.6635	0.1531	0.4868	0.6244	1966.6206
전체	0.1946	0.3239	0.3654	26.1329	0.1505	0.5182	0.7239	7977.5698

○ 분해결과(원천별)

- alpha=1에서 순자산: 이질성 정도는 높아졌지만 동질성 정도가 낮아져 2017년의 순자산의 양극화지수는 0.7618에서 2021년에는 0.7845로 높아짐
- 담보대출: 2017년의 담보대출의 양극화지수는 0.0944에서 2021년 0.0861으로 감소
- 신용대출: 양극화지수는 증가
- 경상소득의 양극화지수: 이질성의 정도와 동질성의 정도가 모두 낮아져 감소
- 상대적 기여도: 순자산 >> 담보대출 > 경상소득 > 신용대출 순

〈표 2-16〉 원천별 DER 분해(alpha=1.0)

	원천	변수	집중도	절대적	상대적		변수	집중도	절대적	상대적	
		비중	지수	기여도	기여도		비중	지수	기여도	기여도	
2017	순자산	0.7618	0.2639	0.2011	0.7988	2018	순자산	0.7690	0.2670	0.2054	0.8051
	담보대출	0.0944	0.2641	0.0249	0.0991		담보대출	0.0925	0.2661	0.0246	0.0965
	신용대출	0.0155	0.1762	0.0027	0.0109		신용대출	0.0160	0.1940	0.0031	0.0122
	경상소득	0.1282	0.1792	0.0230	0.0913		경상소득	0.1225	0.1794	0.0220	0.0862
	합계	1.0000		0.2517	1.0000		합계	1.0000		0.2551	1.0000
2019	순자산	0.7697	0.2481	0.1910	0.8083	2020	순자산	0.7663	0.2677	0.2052	0.8060
	담보대출	0.0917	0.2482	0.0228	0.0963		담보대출	0.0934	0.2650	0.0247	0.0972
	신용대출	0.0157	0.1680	0.0026	0.0111		신용대출	0.0170	0.1855	0.0032	0.0124
	경상소득	0.1229	0.1618	0.0199	0.0842		경상소득	0.1234	0.1743	0.0215	0.0845
	합계	1.0000		0.2363	1.0000		합계	1.0000		0.2545	1.0000
2021	순자산	0.7845	0.2805	0.2200	0.8234	전체	순자산	0.7707	0.2709	0.2088	0.8083
	담보대출	0.0861	0.2779	0.0239	0.0895		담보대출	0.0915	0.2696	0.0247	0.0955
	신용대출	0.0166	0.1899	0.0032	0.0118		신용대출	0.0162	0.1878	0.0030	0.0118
	경상소득	0.1128	0.1784	0.0201	0.0753		경상소득	0.1217	0.1793	0.0218	0.0845
	합계	1.0000		0.2672	1.0000		합계	1.0000		0.2583	1.0000

○ 인구 하위집단인 직업별로 전체 양극화(alpha=1.0)를 분해

- 변수 전체적으로, 집단내 요소(Intra-group component) 0.102~0.152로 나타나 집단간 요소(Inter-group component) 0.848~0.898의 상대적 기여도가

훨씬 크며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집단의 인구비중이나 변수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간 극화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 소득이 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집단간 순극화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 빈곤 및 극화에 대한 집단내 격차를 감소시킬만한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나타냄

〈표 2-17〉 직업별 DER 분해(alpha=1.0, 경상소득)

경상소득	인구 비율	변수 비중	극화 지수	비율 R	집단내 극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손실 요소(D)	잉여 요소(S)	비율 (D/S)
관리자	0.019	0.042	0.193	0.960	0.000	0.000	0.001	0.001	0.79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114	0.188	0.177	1.051	0.002	0.013	0.008	0.007	1.282
사무종사자	0.112	0.174	0.164	0.967	0.002	0.010	0.008	0.007	1.093
서비스종사자	0.065	0.059	0.183	0.896	0.001	0.004	0.010	0.003	3.240
판매종사자	0.069	0.075	0.170	0.950	0.001	0.004	0.008	0.004	2.12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67	0.052	0.206	0.790	0.001	0.004	0.012	0.003	4.68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83	0.088	0.156	0.903	0.001	0.005	0.009	0.005	1.85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8	0.121	0.154	0.897	0.002	0.008	0.011	0.006	1.637
단순노무종사자	0.108	0.072	0.176	0.803	0.002	0.008	0.020	0.004	5.165
군인	0.002	0.003	0.232	0.348	0.000	0.000	0.000	0.000	0.475
미관측	0.253	0.125	0.259	0.544	0.009	0.046	0.064	0.006	11.220
전체 집단내					0.020	0.102			
전체 집단간					0.175	0.898			
전체					0.020	0.102	0.150	0.045	3.354
집단 순극화지수	0.033								

〈표 2-18〉 직업별 DER 분해(alpha=1.0, 순자산)

순자산	인구 비율	변수 비중	극화 지수	비율 R	집단내 극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손실 요소(D)	잉여 요소(S)	비율 (D/S)
관리자	0.019	0.050	0.235	1.324	0.000	0.000	0.002	0.001	1.86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114	0.181	0.241	1.300	0.004	0.013	0.019	0.005	3.708
사무종사자	0.112	0.155	0.221	1.159	0.003	0.010	0.017	0.005	3.227
서비스종사자	0.065	0.048	0.252	0.959	0.001	0.003	0.018	0.002	7.919
판매종사자	0.069	0.070	0.250	1.041	0.001	0.004	0.015	0.003	5.4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67	0.083	0.214	1.157	0.001	0.003	0.012	0.003	3.72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83	0.062	0.196	1.011	0.001	0.004	0.020	0.003	5.787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8	0.085	0.194	1.005	0.002	0.007	0.024	0.005	5.178
단순노무종사자	0.108	0.054	0.336	0.680	0.003	0.008	0.043	0.003	13.653
군인	0.002	0.001	0.257	0.631	0.000	0.000	0.000	0.000	4.303
미관측	0.253	0.211	0.917	0.457	0.027	0.083	0.115	0.008	14.453
전체 집단내					0.044	0.135			
전체 집단간					0.280	0.865			
전체	0.044	0.135	0.285	0.039	0.044	0.135	0.285	0.039	7.350
집단 순극화지수	0.024								

〈표 2-19〉 직업별 DER 분해(alpha=1.0, 자산)

자산	인구 비율	변수 비중	극화 지수	비율 R	집단내 극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손실 요소(D)	잉여 요소(S)	비율 (D/S)
관리자	0.019	0.050	0.237	1.302	0.000	0.000	0.002	0.001	1.77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114	0.184	0.234	1.352	0.004	0.011	0.019	0.005	3.571
사무종사자	0.112	0.161	0.226	1.180	0.003	0.009	0.017	0.006	3.144
서비스종사자	0.065	0.051	0.277	0.997	0.001	0.003	0.020	0.002	8.673
판매종사자	0.069	0.075	0.274	1.075	0.001	0.004	0.016	0.003	5.6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67	0.077	0.222	1.175	0.001	0.003	0.013	0.003	4.411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83	0.064	0.204	1.048	0.001	0.004	0.021	0.003	6.11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8	0.086	0.190	1.071	0.002	0.007	0.026	0.005	5.384
단순노무종사자	0.108	0.054	0.407	0.641	0.003	0.008	0.052	0.003	17.441
군인	0.002	0.001	0.281	0.616	0.000	0.000	0.000	0.000	4.228
미관측	0.253	0.196	1.138	0.413	0.030	0.082	0.141	0.007	19.147
전체 집단내					0.048	0.132			
전체 집단간					0.317	0.868			
전체	0.253	0.196	1.138	0.413	0.048	0.132	0.327	0.038	8.494
집단 순극화지수	0.025								

〈표 2-20〉 직업별 DER 분해(alpha=1.0, 부채)

부채	인구 비율	변수 비중	극화 지수	비율 R	집단내 극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손실 요소(D)	잉여 요소(S)	비율 (D/S)
관리자	0.019	0.051	0.670	59.483	0.014	0.001	0.280	0.004	72.097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114	0.200	0.806	37.717	0.398	0.015	1.979	0.021	93.337
사무종사자	0.112	0.191	8.180	3.395	0.347	0.013	1.811	0.020	90.601
서비스종사자	0.065	0.066	0.957	21.418	0.087	0.003	1.307	0.009	144.668
판매종사자	0.069	0.101	8.951	2.879	0.122	0.005	1.200	0.011	107.06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67	0.050	53.169	0.474	0.113	0.004	2.235	0.008	275.65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83	0.073	0.926	18.752	0.119	0.005	1.620	0.011	153.945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8	0.091	0.945	17.019	0.189	0.007	2.070	0.014	146.447
단순노무종사자	0.108	0.051	45.431	0.336	0.177	0.007	3.426	0.009	365.096
군인	0.002	0.002	1.162	16.006	0.000	0.000	0.032	0.000	104.267
미관측	0.253	0.124	178.762	0.109	1.252	0.048	10.042	0.023	429.707
전체 집단내					2.819	0.108			
전체 집단간					23.314	0.892			
전체	2.819	0.108	26.002	0.131	2.819	0.108	26.002	0.131	198.266
집단 순극화지수	0.037								

□ Inaki(2008) 사회적 극화지수 추정 및 분해

○ Inaki(2008)는 사회적 극화지수(social polarization index)를 산출하고 집단 요인으로 분해

○ 사회적 극화지수는 직업별 구분에 대해 추정

- 사회적 극화지수(직업별 구분)

- 부채 >> 경상소득 > 자산 > 순자산 순서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부채의 극화 지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계속해서 증가
- 부채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 증가
- 자산과 순자산의 극화지수는 2019년 이후에 감소

〈표 2-21〉 Inaki 사회적 극화지수(alpha=0.5, 직업별 구분)

	직업별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2017	0.4408	0.3746	0.3900	1.2335
2018	0.4453	0.3983	0.3928	1.2174
2019	0.4486	0.3995	0.4233	1.3237
2020	0.4529	0.3978	0.4216	1.3654
2021	0.4557	0.3781	0.3918	1.5006
전체	0.4449	0.3997	0.4255	1.8442
	연도별 증감			
2017	0.0045	0.0238	0.0028	-0.0161

2018	0.0032	0.0012	0.0305	0.1063
2019	0.0043	-0.0017	-0.0017	0.0417
2020	0.0028	-0.0197	-0.0298	0.1352

○ 사회적 극화지수의 직업별 분해결과

- 전체 변수에 있어서 집단간 요소(Between-group component)가 집단내 요소(Within-group component)보다 크게 나타남
 - 특히 부채의 이질성과 동질성은 매우 크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집단간 요소는 미관측,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순서로 크게 나타남
 - 순자산집단내 요소는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자산의 집단간 요소는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부채의 집단간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직업별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크게 나타남

〈표 2-22〉 직업별 Inaki 사회적 극화지수 분해(alpha=0.5)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인구 비율	변수 비중	집단 내 요소	집단 간 요소	변수 비중	집단 내 요소	집단 간 요소	변수 비중	집단 내 요소	집단 간 요소	변수 비중	집단 내 요소	집단 간 요소
관리자	0.0190	0.0420	0.0000	0.0035	0.0496	0.0001	0.0029	0.0498	0.0001	0.0029	0.0509	0.0001	0.0027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1144	0.1882	0.0027	0.0423	0.1810	0.0035	0.0342	0.1842	0.0035	0.0353	0.1999	0.0064	0.0367
사무종사자	0.1118	0.1737	0.0023	0.0438	0.1553	0.0029	0.0355	0.1613	0.0030	0.0366	0.1906	0.0089	0.0501
서비스종사자	0.0651	0.0592	0.0005	0.0198	0.0485	0.0006	0.0174	0.0514	0.0007	0.0180	0.0661	0.0013	0.0214
판매종사자	0.0688	0.0750	0.0006	0.0219	0.0696	0.0008	0.0180	0.0749	0.0008	0.0187	0.1009	0.0026	0.028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671	0.0523	0.0005	0.0213	0.0826	0.0008	0.0175	0.0771	0.0007	0.0180	0.0505	0.0042	0.079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0830	0.0884	0.0009	0.0301	0.0621	0.0010	0.0251	0.0640	0.0010	0.0261	0.0733	0.0022	0.031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83	0.1215	0.0017	0.0438	0.0850	0.0019	0.0367	0.0859	0.0019	0.0382	0.0906	0.0041	0.0475
단순노무종사자	0.1078	0.0720	0.0015	0.0428	0.0544	0.0020	0.0415	0.0539	0.0021	0.0452	0.0514	0.0098	0.1798
군인	0.0018	0.0028	0.0000	0.0002	0.0014	0.0000	0.0001	0.0015	0.0000	0.0001	0.0019	0.0000	0.0001
미관측	0.2531	0.1249	0.0136	0.1512	0.2106	0.0285	0.1289	0.1960	0.0295	0.1434	0.1240	0.1664	1.1605
전체	1.0000	1.0000	0.0243	0.4206	1.0000	0.0420	0.3577	1.0000	0.0431	0.3824	1.0000	0.2060	1.6382

5.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융불평등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금융극화에 대해 다양한 모형으로 실증분석
 -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불평등을 다루어 왔고, 자산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
 - 그러나 금융과 관련된 불평등과 극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
 - 여기서 우리는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해 2017년~2021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상소득(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그리고 부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항목에 대해 분석

- 기초통계량 분석
 - 가구주 만연령, 순자산, 자산, 부채, 경상소득(소득) 등 증가 추세
 - 부채 중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관련 대출이 가장 높음
 - 변수별 전년대비증감에서 순자산, 자산, 부채의 증감의 원인은 주택 등의 부동산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 2017년~2021년 4년간 연평균증가률: 신용대출 > 순자산 > 자산 >> 담보대출 > 부채 > 경상소득 순
-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018년에 부채, 순자산,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 2021년에 순자산, 자산,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
- 상관관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부채, 자산, 순자산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분위배율과 배율 추정

- 10분위배율 추정결과
 - 경상소득 10분위배율: 2018년~2020년까지 계속 감소 → 소득분배는 개선
 - 순자산의 10분위배율: 소득보다 매우 크며, 계속하여 증가 → 순자산분배는 악화
 - 자산의 10분위배율: 소득보다 크지만 순자산보다 작게 나타나며, 2020년을 제외하고 악화
 -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10분위배율은 2017년~2021년에 산출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 연도별로 증감을 비교할 수 없으나 이미 매우 불평등

○ 배율 추정결과

- 소득배율: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이후 증가
- 순자산배율: 2018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 자산배율은 2018년 감소, 2019년 증가, 2020년 증가, 2021년 감소로 계속 변화
-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배율은 모든 기간 동안에 0으로 나타남

○ 추정에 대한 함의

- 중앙값 이상에서 값이 분포하기 때문에,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무한대, 배율은 모두 0이 되는 이유
- 담보대출금액과 신용대출금액 모두 하위 75%(상위 25%) 정도에서 값이 나타남
- 대출이 있는 경우의 담보대출금액의 하한선이 신용대출금액의 하한보다 낮은 이유는 담보가 신용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
 - 대출할 의도가 아예 없거나, 담보가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다 상위 분위로 이동→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담보대출금액은 35%가 받고 있으며, 신용대출금액은 상위 20% 정도만이 받고 있음

○ 금리가 낮은 시기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정책적으로 분리할 필요

-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에 대해 신용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가격변화에 대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더한 금액을 전체대출로 보고, 주택가격의 경기변동에 따른 2사이클을 계산하여 담보가액을 설정할 수 있음

- 차주의 신용상태는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담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임
- 반면에 신용대출의 기본이 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경우에 주택보유여부를 빼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변수로 활용할 필요

□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 및 분해

○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결과

- 상대적 지니계수에 따른 불평등 정도: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채 > 순자산 > 자산 > 경상소득 순
-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의 지니계수는 0.70 이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
- 2017년대비 2021년 상대적 지니계수 증감률: 순자산 > 자산 > 소득,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는 이미 높은 매우 불평등

○ 상대적 지니계수 분해결과

- Lerman and Yitzhaki의 지니계수 분해결과
 - 담보대출, 신용대출, 경상소득의 집중도지수가 지니계수보다 크고, 전체불평등도지수(자산에 가까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의 직업별로 불평등도가 다름
 - 집단내 지수계수: 직업별로 인구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집단내 불평등도는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집단간 지니계수: 직업집단간의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순자산 > 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업과 직장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필요

- 중첩 또는 나머지 요인: 상당히 크며, 우리나라의 가구주의 다른 특성인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업별 순위 상, 경상소득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 순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의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

□ Esteban, Gradin, and Ray(EGR) 극화지수 추정

○ 양극화는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부채 >> 순자산 > 자산 > 소득 순

- 앞에서 살펴본 상대적 지니계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 순자산, 자산, 소득 순서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순서 일치
-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을 보면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지니계수의 증감률보다 크게 나타나 양극화의 정도가 커졌음
- 특히 소득의 양극화는 보다 작아졌으나 자산의 양극화는 커졌음
- 다극화(3개)의 경우에 2017년대비 2021년의 증감률은 지니계수의 증감률과 유사

□ Duclos, Esteban and Ray(DER) 극화지수 추정 및 분해

○ DER 극화지수 추정결과

- DER 극화지수의 크기는 부채 >> 자산 > 순자산 > 소득 순

○ 분해결과(원천별)

- $\alpha=1$ 에서 순자산: 이질성 정도는 높아졌지만 동질성 정도가 낮아져 2017년의 순자산의 양극화지수는 0.7618에서 2021년에는 0.7845로 높아짐
- 담보대출: 2017년의 담보대출의 양극화지수는 0.0944에서 2021년 0.0861으로 감소
- 신용대출: 양극화지수는 증가
- 경상소득의 양극화지수: 이질성의 정도와 동질성의 정도가 모두 낮아져 감소
- 상대적 기여도: 순자산 >> 담보대출 > 경상소득 > 신용대출 순

○ 인구 하위집단인 직업별로 전체 양극화($\alpha=1.0$)를 분해

- 무직을 포함한 11개의 직업으로 구분
- 변수 전체적으로, 집단내 요소(Intra-group component) 0.102~0.152로 나타나 집단간 요소(Inter-group component) 0.848~0.898의 상대적 기여도가 훨씬 크며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집단의 인구비중이나 변수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간 극화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 소득이 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집단간 순극화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 빈곤 및 극화에 대한

집단내 격차를 감소시킬만한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나타냄

□ Inaki 사회적 극화지수 추정 및 분해

○ 사회적 극화지수 추정

- 사회적 극화지수(직업별 구분)는 부채 >> 경상소득 > 자산 > 순자산 순서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부채의 극화지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계속해서 증가
 - 부채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 증가
 - 자산과 순자산의 극화지수는 2019년 이후에 감소

○ 사회적 극화지수의 직업별 분해결과

- 전체 변수에 있어서 집단간 요소(Between-group component)가 집단내 요소(Within-group component)보다 크게 나타남
 - 특히 부채의 이질성과 동질성은 매우 크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집단간 요소는 미관측,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순서로 크게 나타남
 - 순자산집단내 요소는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자산의 집단간 요소는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부채의 집단간 미관측,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 직업별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크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금리가 안정적인 시기에 금융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극화도 증가
- 이러한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의 증가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부채를 증가시키면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가지고 오고, 자산의 불평등도를 가지고 오고 있음

[참고문헌]

- 김상봉(2022).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불평등도 및 금융극화 이론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16(4), 104-169.
- 김상봉, 김시연, 홍종혁(2023). 금융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 *신용카드리뷰* 17(1), 35-101.
- 김상봉, 김우철, 유종만(2009). 한국의 산업별 경기변동 추이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7(4), 17-41.
- Araar, A.(2008). *On the decomposition of polarization indices: Illustrations with Chinese and Nigerian household surveys*(Cahiers de recherche, 08-06). CIRPEE.
- Duclos, J. Y., Esteban, J. M., & Ray, D.(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Esteban, J. M., Gradin, C., & Ray, D.(1999).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Mimeo].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 Esteban, J. M., & Ray, D.(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Gini, C.(1912). *Variabililita e mutabilita*. Bologna.
- Gini, C.(1936). *On the measure of concen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income and statistics*.(Colorado College Publication, General Series 208, pp. 73-79).
- Lerman, R. I., & Yitzhaki, S.(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Lorenz, M. O.(1905). Methods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wealth.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0), 209-219.

Permanyer, Iñaki(2008). *The measurement of social polarisation in a multi-group context*(UFAE and IAE Working Papers 736.08). Unitat de Fonaments de l'Anàlisi Econòmica(UAB) and Institut d'Anàlisi Econòmica(CSIC).

Rao, V. M.(1969). Two decompositions of concentration ratio.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82, 418-425.

제3장 소득 계층과 금융부채

제3장 소득 계층과 금융부채

□ 문제 제기

- 현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 오늘날 부채를 장려하고 대출을 조장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해서 부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 한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이미 2010년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함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155%로 증가(한영기, 장광수, 박양수, 박승환, 김준태, 김용선, 2012: 45)
 - 2022년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11%(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금융 불평등과 부채
 - 금융부채 규모는 부채자의 경제적 지위와 신용평가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 인다는 점에서, 금융부채는 집합적 금융자원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수익 증진 수단(레버리지)으로 기능한다.
-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의 위기 극복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 금융부채는 가난이나 다른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지책의 산물이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부채가 크면 클수록 상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채는 채무자의 부담(고통)이 된다.
 -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자원인 금융을 이용하는 것인 반면, 부채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소극적인 금융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부채가 미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더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부채자의 경제적 지위와 경제 상태이다. 부채는 미래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현재 빌린 금융 자원이다. 미래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득수준, 직업, 보유 자산의 규모 등이 신용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동성 증가와 부채를 통한 주택시장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비율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그러나, 부채가 있는 가구들에서 평균 부채액과 평균 금융기관 부채가 크게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평균 부채액은 22.6% 증가하였고, 평균 금융기관 부채액은 24.3%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평균 금

용기관 부채액이 8.3% 증가하여 코로나-19와 더불어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 코로나-19 전후 부채 가구 비율과 금융부채 가구 비율의 추이(2018-2022)

(%, 만 원)

비율\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채	63.72	63.81	63.56	63.61	63.30
금융부채	56.93	57.49	57.70	57.42	57.27
부채액	11818.4	12397.4	12970.5	13837.2	14484.8
금융부채액	9556.1	10100.1	10484.2	11350.6	11878.8

- 부채자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 최하층의 경우에도 부채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층의 경우, 부채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소득 하층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경제적인 실패로 인하여 부채비율도 높고, 부채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 불평등의 문제

○ 금융의 복잡성

-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금융 서비스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하는 경제 부문이며, 다양한 금융기관(은행, 보험, 투자회사)들이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경제 영역이다.
- 금융기관은 국민 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원을 결집하고, 그것을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은 국민경

제를 떠받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 한국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금융은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닌 경제 주체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영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은행 외부의 조직의 규제와 관리에 기초하여 (준)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은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영역이다.

○ 금융 불평등

- 금융 불평등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불평등”과 금융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의 불평등” 두 가지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 규모의 격차를 의미하며,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금융 이용의 불평등은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금융 접근성은 정부의 금융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짐
- 금융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금융 불평등을 촉진시켜 경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상호강화 경향을 보여서,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금융 접근성 불평등은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대출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

□ 부채의 성격과 부채 불평등의 의미

○ 현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님

- 첫째,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외상 거래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거래를 하고, 이후에 값을 지불하는 거래 형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경제 행위이다.
- 둘째, 부채는 개인, 가구, 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기대되는 수익 혹은 기대되는 불이익을 예상하고 현재 부족한 자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여 조달하는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한다. 개인 대출이나 국가 차원의 외채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제로 한다.
- 셋째, 부채는 채무자가 대부기관이나 대부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산물이다.

○ 그러므로 부채는 경제 주체들의 태도와 가용한 자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

- 부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부채를 얻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태도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 부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부채는 더 풍족한 소비생활이나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확보 전략(경제적 이익 증대)으로 고려되고 있음
- 저소득 계층에게 부채는 갚아야 할 부담이지만, 부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생계비나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완재로

가능함(생계유지 목적)

- 부채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보다 더 심한 수준을 보이고,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부채 불평등은 부채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함
 -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여러 경제적 불평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자산 불평등은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는 높지만, 부채 불평등보다는 낮은 수준임
 - 부채 불평등은 대단히 높아서, 채무자들 사이의 부채 규모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보여줌
 - 금융부채 불평등은 전체 부채 불평등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임. 금융부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와 더불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짐
 - 가처분소득, 자산, 부채, 금융부채 전 영역에서 2022년 지니계수가 2021년 지니계수보다 더 커져서 전반적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보임
 - 특히 금융부채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0.7694에서 0.8079로 0.0385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금융부채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3-2〉 지니계수 비교(2021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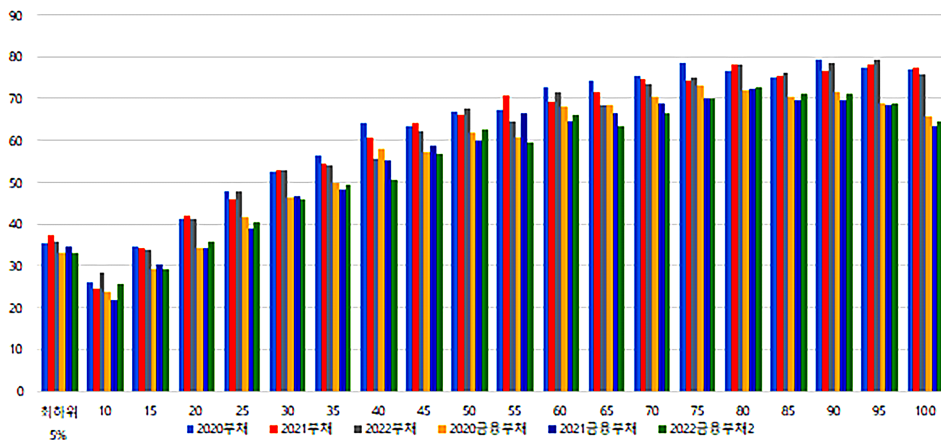
불평등 요소	지니계수			
	2019	2020	2021	2022
가처분소득	0.4389	0.4198	0.4103	0.4329
자산	0.6043	0.5863	0.5860	0.6148
순자산	0.6204	0.6085	0.6079	0.6309

금융자산	0.6558	0.6366	0.6369	0.6585
부채	0.7960	0.7719	0.7636	0.7986
금융부채	0.8051	0.7780	0.7694	0.8079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분석한 결과임. 불평등 원천 중에서 자산과 소득은 조사 직전 연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지니계수는 모두 1년 전의 불평등 실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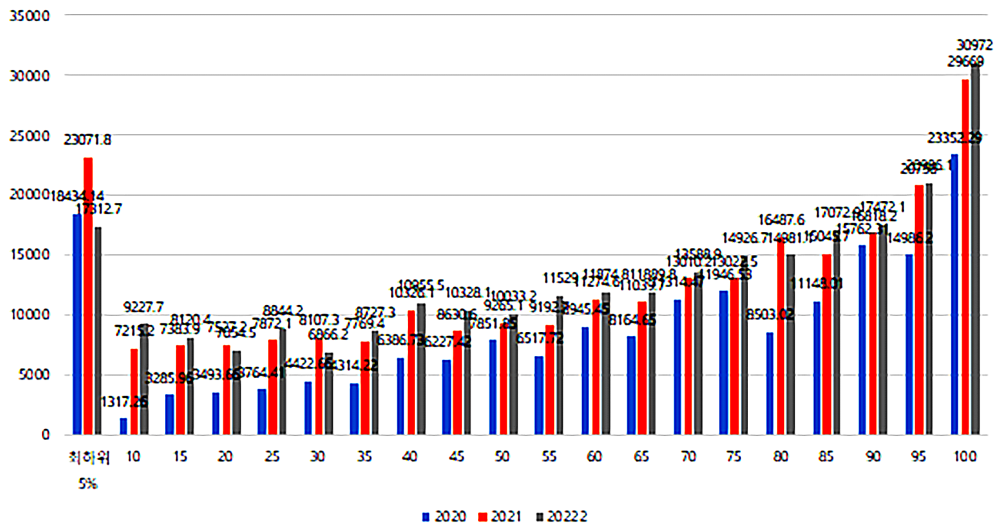
-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처분소득 최하위 5%에서 매우 높았고, 5~10% 분위에서는 낮아졌다가 점차 다시 증가하여 30~35% 분위부터는 절반을 넘고 있음. 50% 분위 이상에서 부채가구 비율은 70% 이상을 보임(그림 3-1) 참고)
- 부채 비율은 최상위 소득 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2020년 최상위 5% 가구 중 77.27%가 부채를 갖고 있었음, 2021년에는 78.1%로, 2022년에는 79.2%로 더 늘어났다.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보다 부채를 통한 자원의 활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1] 가처분소득 20분위별 부채자 비율(2021 및 2022)



- 부채 규모도 가처분소득 최하위 5%를 제외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규모 더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 비대칭적 U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3-2 참조).

[그림 3-2] 가처분소득 분위별 부채자 평균 부채액



- 부채자 평균 부채액은 최하위 5%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는 저소득층(하위 10%~하위 40%)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패널 조사가 코로나-19 시작 단계(3월 31일)에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부채에 미친 영향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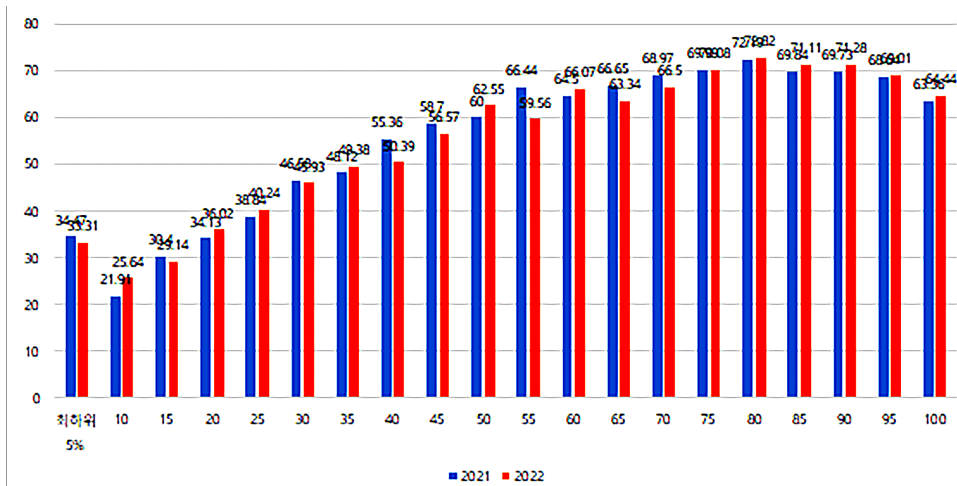
□ 금융부채

- 금융부채 비율도 전체 부채와 마찬가지로 상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위 소득 계층에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줌([그림 3-3] 참고)

- 소득 중상위 계층에서 부채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 계층에서 부채 가구 비율이 낮았다.
- 그러나 부채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소득 최하위 5%에서 금융부채 비율이 매우 높았고, 부채자 1인당 평균 부채액도 커서 가처분소득 수준과 금융부채 그래프는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진 U자형 분포를 보임([그림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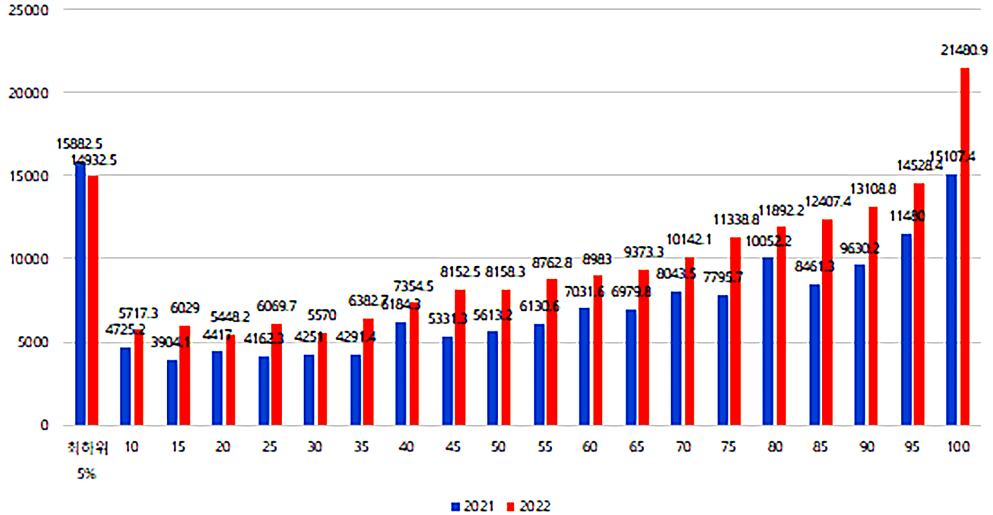
[그림 3-3] 가처분소득 분위별 금융부채자 비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하층에서는 금융부채가 줄었지만, 중간층과 상층에서는 오히려 금융부채가 늘었음
- 최하위 5%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도가 낮은 최저 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하위 5% 소득계층은 대출을 받을 당시는 최하위 소득계층이 아니었지만, 대출을 받은 이후 최하위 소득계층이 된 경우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실패나 실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하락이 이루어져서 소득 최하위 5%로 하향 이동한 경우로 추정됨
- 가처분소득 최하위 5%를 제외하면, 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 수준과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4] 가처분소득 분위별 부채자 평균 금융부채액



□ 금융부채와 위험 가구

○ 가처분소득 하위 5% 분위는 부채 규모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규모도 대단히 큼

- 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 최하위 5%와 최상위 5%에서 가장 큼
- 가처분소득 최하위 5%에서 부채자 비율이 높고, 총대출 부채 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매우 높아서 연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비율이 높음⁹⁾
- 반면, 가처분소득 최상위 5%에서는 부채자 비율도 높고 또한 금융부채 규모도

9)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총소득에서 금융 대출로 발생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는 원리금총액/연소득으로 이루어진다. DSR은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 총부채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총부채 원리금 총액/연소득으로 측정된다.

- 크지만, DSR 비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덜함
- 지난 5년 동안 소득 하위 30%의 DSR 비율은 2019년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2년 모든 소득계층에서 DSR 비율이 높아졌다.
 - 소득 하위 30%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계속해서 높아져서 중소득(30%~70%)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 높은 금융 위험을 안고 있음. 소득 하위 30%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018년 4,740만 원에서 2022년 4/4분기 5,980만 원으로 26.2% 증가하였음. 이는 고소득 계층 대출 잔액 증가율 10.9%와 중소득 계층 대출 잔액 증가율 17.5%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었음(〈표 3-3〉 참조)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을 살펴보더라도, DTI가 40%를 넘는 금융 고위험 집단이 가처분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DTI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DTI 비율이 40% 미만이면 부채상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며, 40% 이상이면 위험 수준으로 그리고 60% 이상은 대출 거부 수준임(이러한 기준은 은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¹⁰⁾
 -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즉 DTI가 0.4를 넘는 경우는 소득 하위 40%에 집중되어 있음([그림 3-5] 참조)

10) DTI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은행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DTI 대출 한도 규제를 통해서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별 은행들은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 대출자들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복합적인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3〉 최근 5년간¹⁾ 소득수준별²⁾ DSR^{3) 4)} 및 1인당 평균 대출잔액⁵⁾
(%, 백만 원)

	DSR			1인당 평균 대출잔액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2018	39.5	35.8	65.2	120.5	53.5	47.4
2019	37.5	34.4	57.5	124.0	55.6	51.4
2020	37.1	34.0	57.6	130.5	59.0	55.2
2021	37.5	35.1	59.5	135.6	62.3	58.6
2022.1/4	37.6	35.6	60.1	135.1	62.3	58.4
2/4	37.7	36.0	61.0	135.1	62.8	59.1
3/4	38.0	36.3	62.2	134.0	62.9	59.5
4/4	39.1	37.7	64.7	133.6	62.9	59.8

주: 1) 기말 기준

2) 고소득(상위 30%), 중소득(30~70%), 저소득(하위 30%) 기준

3) 소득수준별 차주 연간 원리금상환액 합계 / 소득수준별 차주 연간 소득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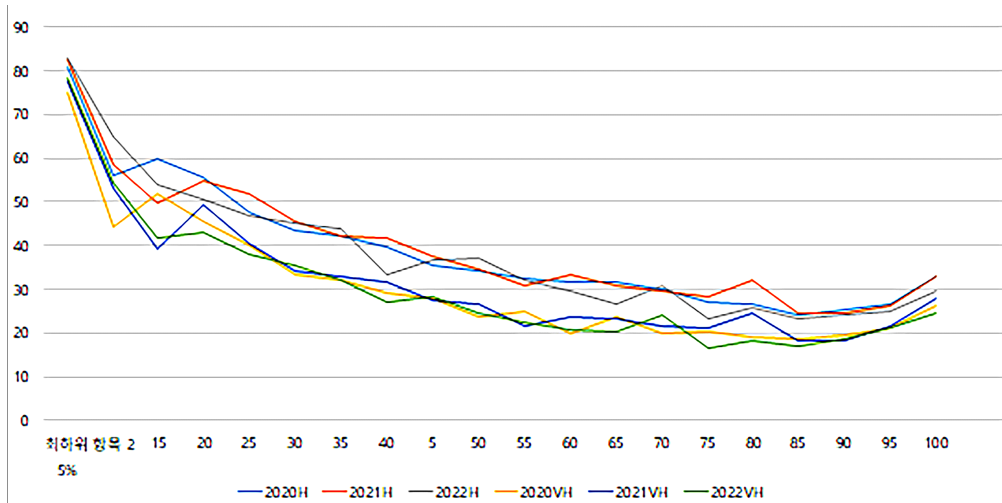
4) DSR 3단계(22.7월 이후) 적용 사항을 반영하여 소급 적용

5) 가계부채 DB 상 표본 데이터를 전체로 환산한 대출잔액 / 가계부채 DB 상 표본 데이터를 모수로 환산한 차주수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경우인 DTI가 1.0 이상인 경우는 소득 하위 10%에 집중되어 있음. 이것은 상당한 규모의 소득 빈곤층이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빈곤층은 부채자 비율이 낮고, 부채 규모도 크지 않지만, 상당수의 빈곤층 부채자들은 가처분소득이 낮아서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 저소득 계층은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과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기 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그림 3-5] 소득 분위별 고위험 채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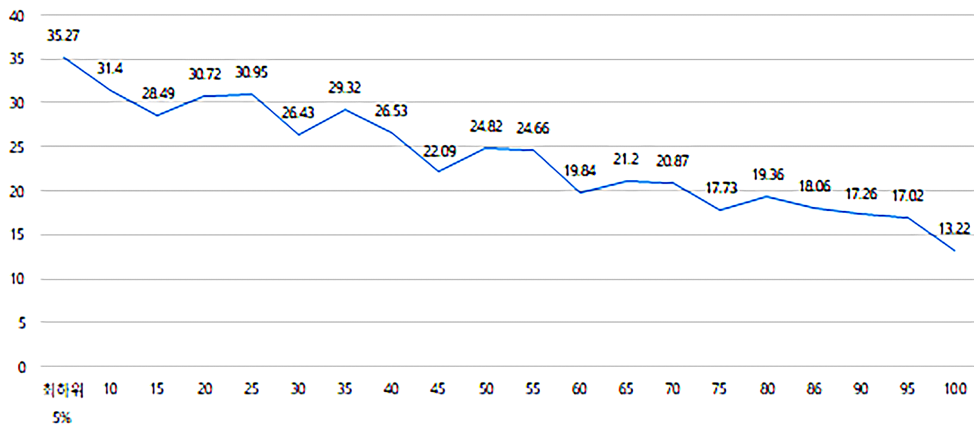


주: 고위험 채무자는 DTI지수 0.4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며, 고도위험 채무자는 DTI지수 0.6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의 질이 나빠짐

- 최하위 5%를 제외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짐. 2021년 최하위 10%의 가처분소득계층의 담보대출 비율은 38.5%, 소득수준 55%~95%는 약 50%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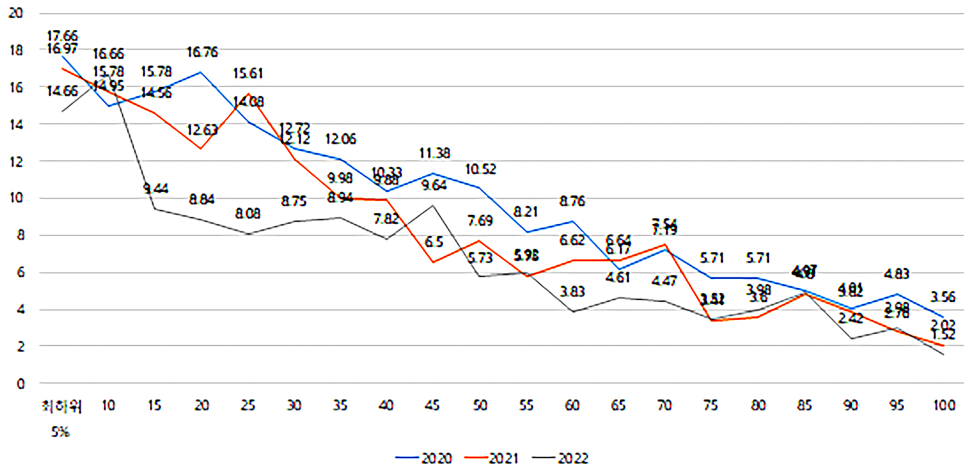
[그림 3-6] 제2/3 금융권 금융부채 비율



참고: 제2/3 금융권은 저축은행, 보험회사,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가처분소득 최하위 5%의 35.27%가 제2/3금융권을 이용한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제2/3금융권 이용율이 낮아져서 최상위 5%는 13.22%만 제2/3금융권 이용하였음([그림 3-6] 참고)
- 이러한 현실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신용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은 부득이하게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금융 불평등을 낳고, 또다시 금융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금융 불평등의 악순환이 존재함
- 그 결과, 원리금 상환 연체 비율은 소득 수준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부채 비율은 낮지만, 상환의 어려움은 가장 커서, 가장 높은 원리금 상환 연체 비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3-7] 참조)

[그림 3-7] 원리금 연체 비율



주: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 자금유통 차질, 소득감소, 가계지출 증가로 원리금 상환 연체가 이루어진 비율

- 이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신용 빈곤층을 관행적으로 배제시키면서 경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누가 부채를 많이 얻는가?

○ 일반적인 부채와 은행 부채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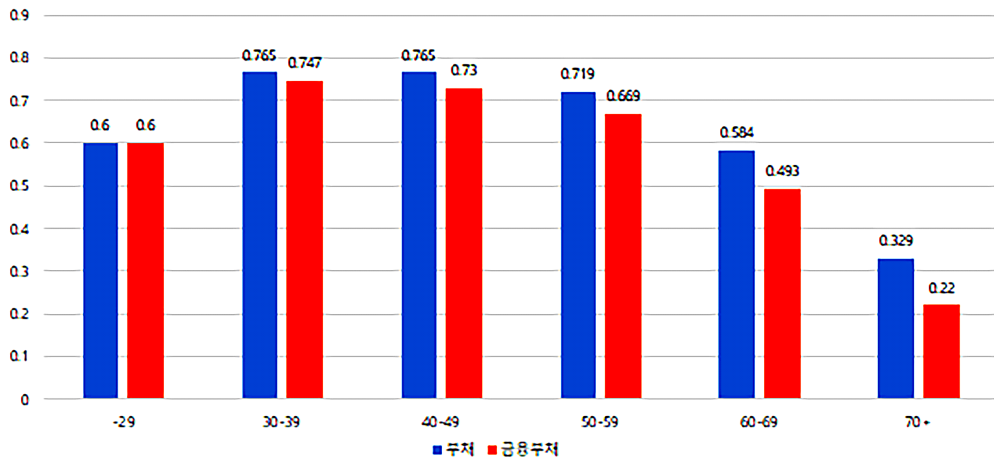
- 부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50대보다 30대와 40대에서,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서, 생산직보다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들에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그리고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거주자가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부채의 경우는 성별과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부채의 경우보다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고용지위, 거주지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처분소득 하위 5%는 소득 최상위 10%와 비슷한 정도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와 부채

○ 세대에 따라서 부채자 비율은 큰 편차를 보임

- 부채자 비율은 30대와 40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그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20대 청년들의 경우는 60대와 70대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임([그림 3-8-1] 참고)

[그림 3-8-1] 연령별 부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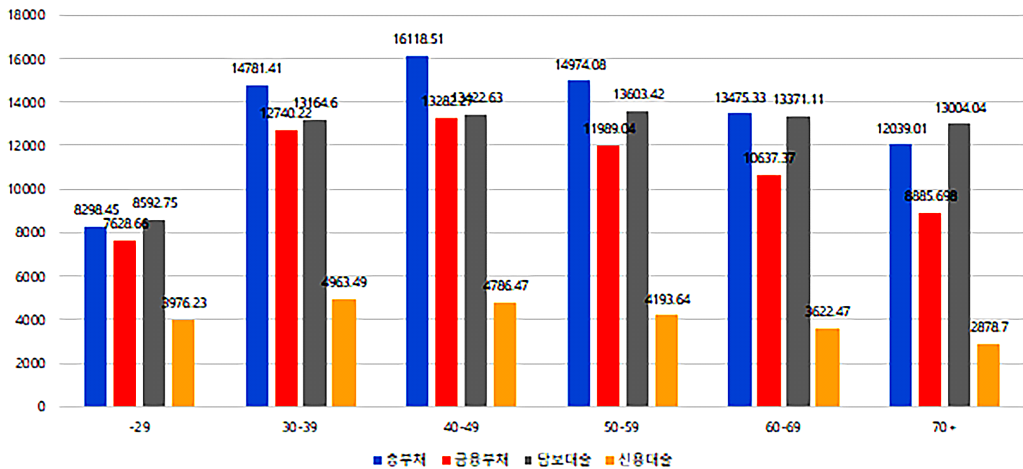
○ 대출 목적은 대단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청년 20대의 경우, 전월세 대출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40대의 경우는 주택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입은 50대와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3-8-2] 참고)
- 이러한 편차는 오늘날 한국의 부채가 한국인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금융 관련 세대 문제로 떠오른 “영끌족”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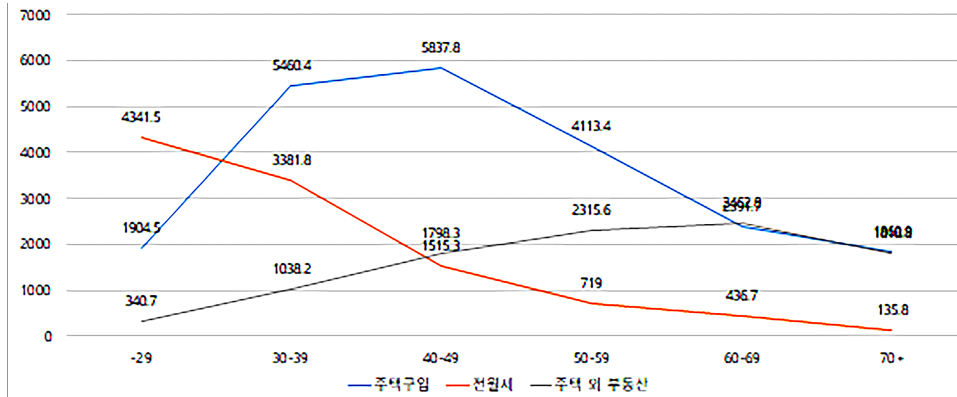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금융부채를 통한 청년 세대(20대와 30대)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
- 20대의 부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부채 규모는 전체 세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음
- 청년 세대 내에서도 20대와 30대는 대단히 다른 행태를 보여, 20대의 경우는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3-8-2] 연령 세대별 부채와 대출 형태(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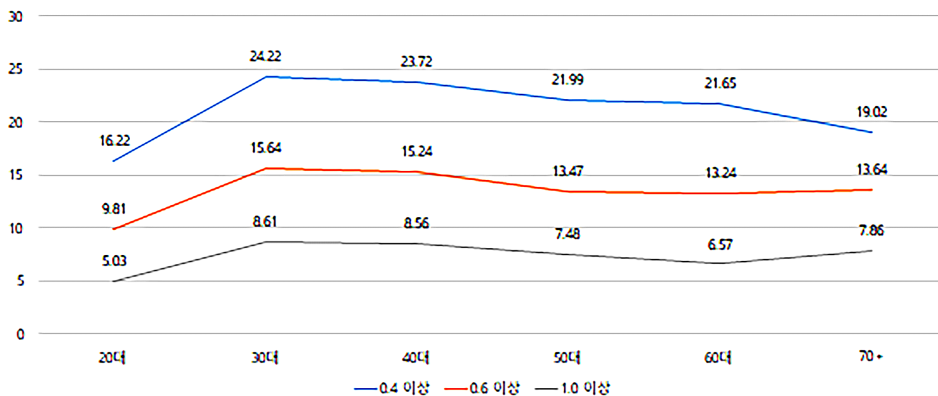
- 대출의 용도는 세대별로 대단히 달라서, 부채자 비율이 높고, 부채액 규모가 큰 30대와 40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액이 가장 컸으며, 20대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얻는 비율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외 부동산 구입용도가 가장 컸다.

[그림 3-9] 연령과 대출용도별 대출액수(2022)



- 위험 수준이 높은 대출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대출 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중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끌족”이라는 용어는 주로 30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20대는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위험 수준의 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 세대별 대출 위험 수준을 살펴보면, DTI 지수가 1.0을 넘는 경우는 20대가 5.03%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았다. 30대가 8.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로 8.56%였다.

[그림 3-10] 세대별 대출 위험 수준별 분포(2022년)



-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DTI 1.0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어서, 전반적으로 가구 수준에서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음의 소득과 저소득 계층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적인 소득집단은 소득이 있지만 (+) 소득이 적은 저소득 집단과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음의 소득 집단이다.
-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2021년 0.37%와 2022년 5.1%로 8만~1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음의 소득 가구 비율 추이(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음의 소득 가구 비율	0.62%	0.52%	0.58%	0.37%	0.51%

- 전체 가구 중에서 2020년 음의 소득 가구에 속하였고, 2022년에도 음의 소득을 보인 가구는 0.05% 정도였으며, 2020년 음의 소득 가구 중에서 2022년 DTI 비율이 0.6을 넘는 고위험 가구 비율은 21%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약 4.5만 가구로 추정된다(2020년 센서스 가구 총수 2,148만 가구 기준).
- 2022년 음의 소득 가구의 원리금 상환 연체 가능성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 비해서 2.16배 더 높았다. 참고로 주거 상태에 따른 차이가 가장 컸다. 주택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는 3.28배,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는 2.28배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았다(〈부록 1〉 참고).

□ 정책적 대안

- 금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은 먼저 부채가 레버리지인 계층, 부채가 상환에 부담이 되는 계층과 신용 빈곤으로 인하여 부채를 얻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세대 간 부채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다른 금융 불평등 대책이 필요함
 - 20대 부채는 주로 전월세가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30대와 40대의 경우는 내집 마련이 주된 부채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거 안정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저소득층의 부채율이 낮고, 부채 액수도 작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변형하여 “메조크레딧(mesocredit)”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이크로크레딧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제도로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도입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빈곤층에게 적은 규모의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한다. 비영리 은행으로 빈곤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과 같은 발전국가에서는 적은 규모의 창업 지원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창업자금의 지원 및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탈빈곤을 돕는 것이 “메조크레딧(mesocredit)”이다. 메조크레딧은 민간 후원과 정부 지원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과 투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부담보 무이자 대출과 장기간(20년~30년) 상환을 통하여 부채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여 저소득 탈출의 가능성을 높임

○ 음의 소득 가구 지원제 도입

- 저소득 가구와 구분하여 음의 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마이너스 소득 가구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음의 소득 가구는 기존의 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맺음말

- 부채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한 가지 의미는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회나 수단으로, 다른 한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그러므로 어떤 집단에게는 집합적인 사회적 자원인 금융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으로, 또 다른 집단에겐 희생을 통하여 갚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부채자 비율은 최하위 소득 5%를 제외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높아져서 부채는 능력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 소득 최하위 5%에서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은 이유는 최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기 이전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위 소득 분위에서 대출을 받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소득이 하락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로 인한 한계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고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가계부채가 많거나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의 부채 문제가 더 큰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 가구로 본다면, 위험 가구의 비율은 소득 하위 40%에서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 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 전체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에 쓰는 위기 가구는 2022년 4.74%로 100만 가구가 넘으며, 가처분소득 하위 10%에 1/5이 집중되어 있다.
- 이 분석에 사용된 가장 최근 자료(2022년)는 기준금리가 1.25%이었던 2022년 3월에 수집된 자료이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금리가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가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가계부채로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도 급증하였을 것이다.
- 빈곤층 가계부채 대응책이 필요하다. 빈곤층은 부채 비율이 낮고, 부채 액수도 적지만, 부채로 인한 가계부담은 대단히 크다.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메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빈곤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음의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함. 음의 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음의 소득 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서 금융정책보다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23년 자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부록 1〉

원리금 상환 연체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연체 있음=1, 없음=0)

delayrepay	Odds ratio	Robust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여성	1.259944	.1430539	2.04	0.042	1.00857 1.573971	
연령세대	(20대 기준)					
2	1.966873	.728175	1.83	0.068	.9520176 4.063571	
3	2.087797	.7480671	2.05	0.040	1.034425 4.213836	
4	2.137006	.7639848	2.12	0.034	1.060472 4.30638	
5	1.680221	.6199346	1.41	0.160	.8152806 3.462788	
6	1.356573	.5365726	0.77	0.441	.6248315 2.945259	
교육	(무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 기준)					
2	.8569608	.1222559	-1.08	0.279	.6479279 1.133431	
3	.7991865	.1519272	-1.18	0.238	.5505956 1.160015	
4	.61932	.1158901	-2.56	0.010	.4291748 .8937087	
5	.6354098	.1961545	-1.47	0.142	.3469631 1.163656	
음의 소득	2.164427	1.058779	1.58	0.114	.8297711 5.645828	
은퇴여부	(경제활동참가 기준)					
은퇴	.5983675	.1485079	-2.07	0.039	.3678829 .9732545	
DTI	1.021533	.0155005	1.40	0.160	.9916 1.05237	
주거조건	(자가 기준)					
2	.9068734	.1505462	-0.59	0.556	.6550015 1.255599	
3	2.280426	.2504782	7.51	0.000	1.838745 2.828203	
4	3.379557	.9870734	4.17	0.000	1.906548 5.99062	
5	2.415411	.5082552	4.19	0.000	1.599115 3.6484	
직업	(관리직 기준)					
2	1.346801	.6165645	0.65	0.515	.5490651 3.303565	
3	.9708498	.4428011	-0.06	0.948	.3971202 2.373461	

4		1.732466	.7790282	1.22	0.222	.7176454	4.182344
5		2.415035	1.066	2.00	0.046	1.016721	5.736476
6		1.055189	.5163548	0.11	0.913	.4043862	2.753368
7		2.005029	.8804085	1.58	0.113	.8479256	4.741146
8		1.721439	.752884	1.24	0.214	.7304872	4.056681
9		2.591886	1.134251	2.18	0.030	1.0993	6.111045
10		4.179509	1.912518	3.13	0.002	1.704593	10.24778
_cons		.0212633	.0132012	-6.20	0.000	.0062975	.0717952
R ²		0.0628					
N		9,031					

[참고문헌]

- 고동우·윤성민(2023). 한국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KDAS)* 25(2), 639-650.
- 박양수 편집(2012). *부채의 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한국은행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 Brubaker, Ralf, Robert M. Lawless, Charles J. Tabb(2012). *A Debtor Worl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Deb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pstein, Gerald A.(2005). "Introduction: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 by Gerald A. Epstein, Cheltenham: Edward Elgar, pp. 3-16.
- Jones, Paul A.(2008). "From tackling poverty to achieving financial inclusion — The changing role of British credit unions in low income communitie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2141-2154.
- Krippner, Greta R.(May 2005).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Oxford Journals 3(2): 173-208
- Palley, Thomas I.(2007). "Financializati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Working Papers wp153,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_____ (2013). *Financialization: the Economics of Financial Dominance*, Palgrave MacMillan.

제4장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부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및 부채상환
부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제4장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부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및 부채상환 부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1. 서론

-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 증가에 의한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러한 자산 가격상승은 다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금융불안정성을 강화함.
- 외환위기 이후 가계 금융이 제도적으로 자유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신용의 가용성이 높아졌음.
- 이는 외환위기 이전 기업금융 위주의 금융시스템과 다른 방향으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작동하는 계기가 됨.

- 지난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초저금리의 상황을 겪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특히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상승의 결합이 이루어져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들어 미국 연준이 인플레를 진정하기 위해 초단시간 내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급격히 올림으로써 그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도 국내 인플레 진정과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이탈 방지와 환율 안정을 위해 미 연준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금리를 인상해 왔음.
-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0~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부채가 가계의 순자산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를 요인 분해하고, 가계부채 상황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가계 순자산의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방법을 이용할 것임.
 - 둘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의 주관적 부담 정도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가계부채 위험 정도가 가구주의 주관적인 부채상환 부담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2. 순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순자산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의 상대적 역할

1)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방법

-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sources)별로 순자산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할 수가 있음.
- 이처럼 구성 항목별 순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를 파악하는, 즉 순자산 원천별로 불평등 정도를 요인 분해하는 작업은 불평등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방법임(Sastre and Trannoy, 2002).

- 이 글에서는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를 위해 Lerman and Yitzhaki(1985) 요인 분해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Shorrocks(1982)의 요인 분해법을 지니계수에 적용한 것임(〈부표 1〉 참조).

- Shorrocks(1982)의 불평등 지수의 요인 분해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전체 자산(Y)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 등 하나 이상의 자산 항목(f)별로 구성된다고 하면, 전체 자산의 불평등 지수(I_Y)는 자산 항목별 기여도(S_f) 합계와 같음($I_Y = \sum_f S_f$).

- Lerman and Yitzhaki(1985)은 이러한 Shorrocks(1982)의 분해법을 지니계수에 적용하였음.
- 총자산 지니계수 G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가 있음.

$$- G = \sum_{k=1}^K S_k G_k R_k$$

- 여기서 S_k 는 자산 항목 k 의 비중을 나타내고, G_k 는 자산 항목 k 의 지니계수이며, R_k 은 자산 항목 k 와 총자산 지니계수 G 간의 지니 상관계수 ($R_k = Cov[y_k F(y)] / [Cov(y_k, F(y_k))]$ 를 의미함($F(y)$ 와 $kF(y_k)$ 는 총자산과 자산 항목 k 의 누적 분포임).

- 이 글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지니계수에서 부채 항목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둘 것임.
- 이를 통해 부채가 순자산 불평등에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자료가 가용한 2010~2022년 기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주로 자산 투자(특히 부동산)와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예: 정세은·박종선, 2023)에 기반하여 자산 불평등과 부채 간에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임.

2) 순자산 지니계수의 자산과 부채 항목별 요인 분해 결과

- 이하에서는 순자산 요인 분해의 주요 분석 결과를 부채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 여기서 관심사는 시간 변동에 따라 부채 항목이 순자산의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채 항목의 순자산 불평등 심화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임.
- 함준호 외(2015)는 가계부채가 실물경기 및 주택경기와 상관성이 높아 부채의 경기 순응성이 존재하며, 특히 주택가격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10년대 중반 이후 부채 항목이 순자산 불평등 심화에 기여한다면, 이는 가계 부채가 경기 순응적이면서 부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순자산 불평등 심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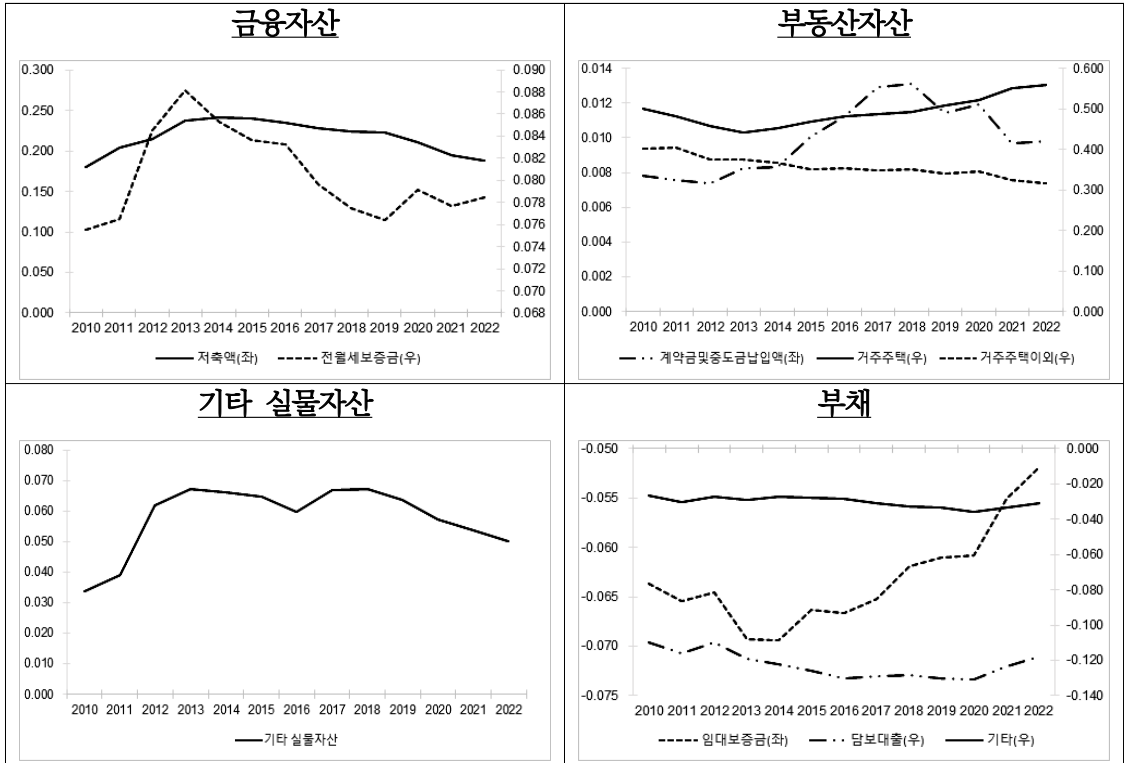
□ 총자산과 순자산의 구분

- 2010~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순자산 지니계수의 자산과 부채 항목별 요인 분해를 하였음.
- 여기서 총자산과 순자산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의 관심사는 순자산을 구성하는 각 자산과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 그리고 부채의 합계이지만,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임.
-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부채는 부(-)로 처리하여, 즉 ‘순자산 = 총자산 - 부채’의 등식을 이용해야 함.
- 따라서 부채 항목은 부(-)로 나타나 순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부채 항목의 부(-)의 상대적 기여도가 줄어들면, 이는 순자산의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순자산의 구성 항목별 비중

- 2010~2022년 기간에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4-1] 참조).

[그림 4-1]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비중(×100, %)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은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자산 항목임.
- 2010~2022년 기간에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의 몫은 각각 18.0~24.1%와 7.6~8.8% 사이에서 변동하며, 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몫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201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다 2020년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음.
- 부동산자산은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기간에 이들 자산 항목이 차지하는 몫은 각각 44.2~55.9%, 31.6~40.3%,

- 0.7~1.3%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을 합산한 부동산자산의 몫은 82.5~91.1% 사이에서 변동했음.
- 부동산자산의 몫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은 '순자산 = 총자산 - 부채'라는 등식을 사용하여 자산 항목별 비중을 구했기 때문임.

 - 기타 실물자산은 자동차, 자동차 이외 기타 실물자산, 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이들 항목의 합계를 사용하고 있음.

 - 기타 실물자산의 몫은 동 기간에 3.4~6.7% 사이에서 변동하며, 2010년대 초반 이후 대체로 그 몫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줌.

 - 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할부미상환금, 계탄후불입금, 개인직장빌린금으로 구성된 기타,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순자산 = 총자산 - 부채'라는 등식을 사용하므로 이들 부채 항목의 비중은 부(-)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들 항목을 절댓값으로 표시하면 동기간에 각각 11.0~13.1%, 2.7~3.6%, 5.2~6.9%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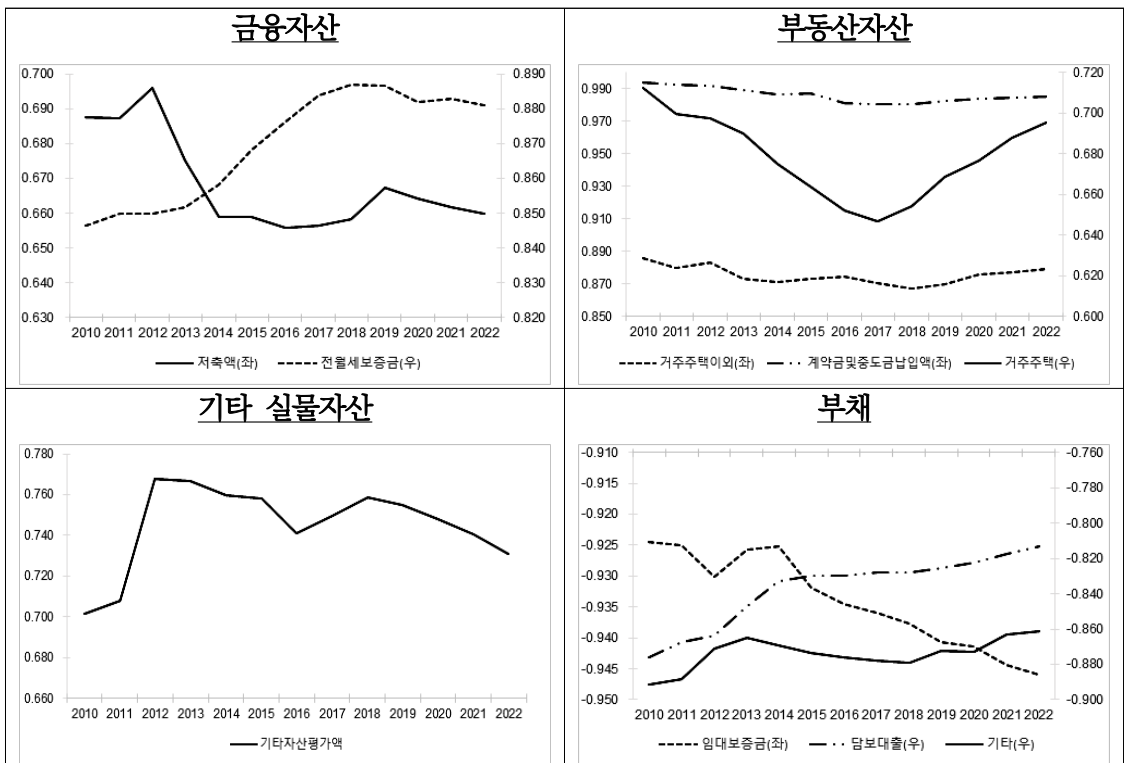
 -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임대보증금의 몫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계 자산 항목의 각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자산이 순자산의 불평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구성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지니계수

- 2010~2022년 기간에 각 자산과 부채 항목의 지니계수는 [그림 4-2]와 같음.
- 동 기간에 저축액의 지니계수는 0.656~0.696 사이에서 변동하고, 전월세보증금의 그것은 0.846~0.887 사이에 있음.
- 저축액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급격한 내림세고, 전월세보증금의 그것은 오름세이며, 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다가 2019년 이후 다시 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상승하다가 2019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그림 4-2]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별 지니계수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거주주택의 지니계수는 동기간에 0.647~0.712 사이에서 변동하고,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은 0.867~0.886, 중도금·계약금 납입액도 0.994~0.981 사이에서 변동하였음.
- 중도금·계약금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음.
- 부동산자산을 구성하는 자산 항목의 지니계수 모두가 2017년 이전까지는 하락하다가 그 이후 반전하여 상승했는데, 이는 자산시장 붐과 연관되어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자산이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임.

- 기타 실물자산의 지니계수는 동 기간에 0.702~0.768 사이에서 변동했음.
- 2010년대 초반 이후 대체로 이 자산 항목의 불평등도는 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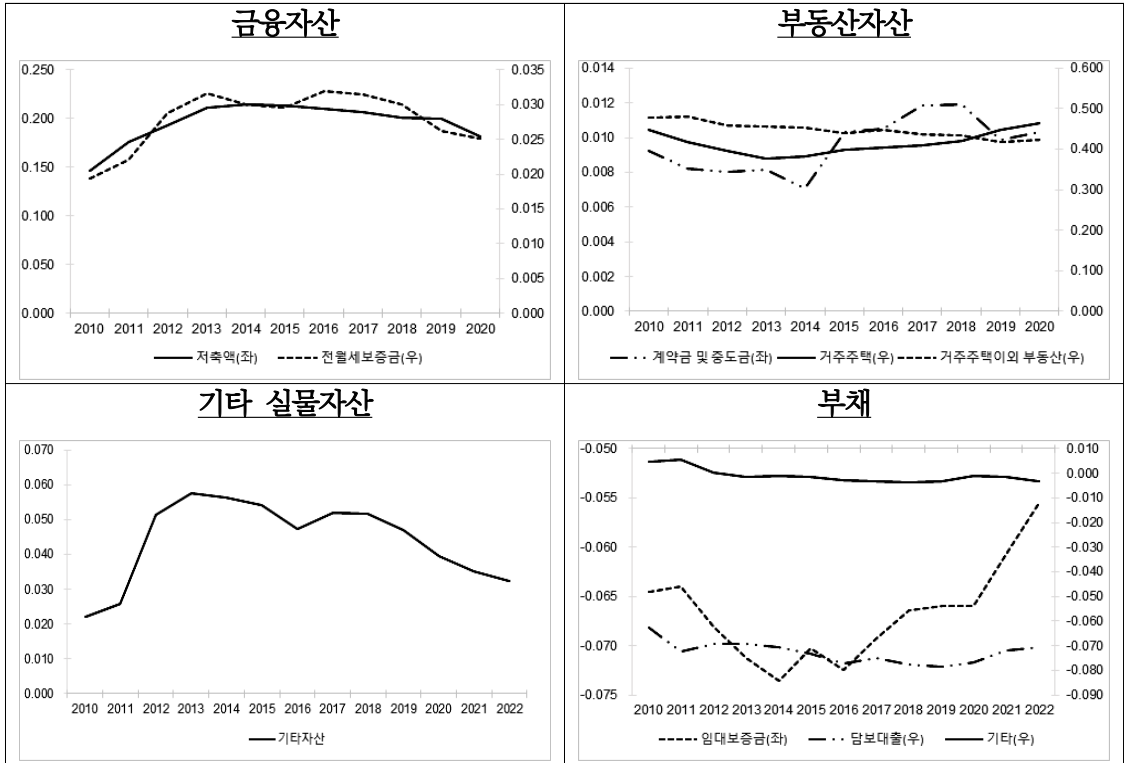
- 부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순자산 등식의 정의상 부(-)로 나타나지만,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절댓값으로 표시하면, 동 기간에 담보대출의 지니계수는 0.813~0.876 범위 내에 있으며, 기타는 0.861~0.892 사이에서,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0.924~0.946 사이에서 변동했음.
- 담보대출의 불평등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는 불평등도의 기울기가 그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졌는데, 이는 그 당시 초저금리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용 가용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임대보증금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
- 기타의 경우 2013~2018년 기간에는 지니계수가 떨어지다가 2018년 이후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음.

- 부채 측면에서 보면, 임대보증금의 가구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가와 저가 등 가격대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전세금 차이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각 자산과 부채 항목의 상대적 기여도

- 자산과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를 요인 분해한 것이므로, 여기서 요인 분해의 분석 초점은 바로 자산과 부채 항목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각 자산과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그림 4-3]과 같음.
-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자산이 순자산의 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함.
-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최상위층에서 금융자산을 크게 빠뜨려 이를 과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김낙년, 2019).
- 2010~2022년 기간에 저축액의 순자산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14.7%~21.5% 내에 있으며, 반면 전월세보증금의 그것은 1.9~3.2% 사이에서 변동했음.
- 금융자산의 순자산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대략 1/5 안팎임.

[그림 4-3] 자산과 부채 항목별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100, %)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중도금·계약금 납입액의 그것도 201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주주택의 순자산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세여서 순자산 지니계수의 변동을 좌우하는 것은 거주주택 자산임.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동 기간에 37.8~48.0%, 중도금·계약금 납입액의 그것은 0.7~1.2%, 그리고 거주주택의 경우 37.6~53.4%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음.
- 부동산자산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상대적 기여도를 모두 더해보면, 그것이 거의 80~90% 안팎에 이르는데, 여기서 부채 항목의 부(-)의 효과가 참작되어야 함.

- 기타 실물자산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계속해서 2010년대 초반 이후 내림세를 보여줌.
- 이러한 자산의 상대적 기여도는 동 기간에 2.2~5.8% 내에서 변동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부채 항목은 순자산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에서 부(-)의 역할을 하며, 이는 순자산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정의상 부채 항목인 담보대출과 기타는 순자산 불평등도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후자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와 달리 반전하다 그 이후 다시 반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반면에 전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로 순자산 불평등 완화에 덜 기여했음.
- 임대보증금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기간에 절댓값으로 표시된 담보대출의 상대적 기여도는 6.3~7.9%, 기타의 그것은 0.4~0.6%,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경우 5.5~7.4% 내에서 변동하고 있음.
- 이들 부채 항목을 합산한 부채의 상대적 기여도는 대략 12~15% 내외로 순자산 불평등도를 줄여주다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반전되어 순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가령,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깎투자 및 금융 대출이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순자산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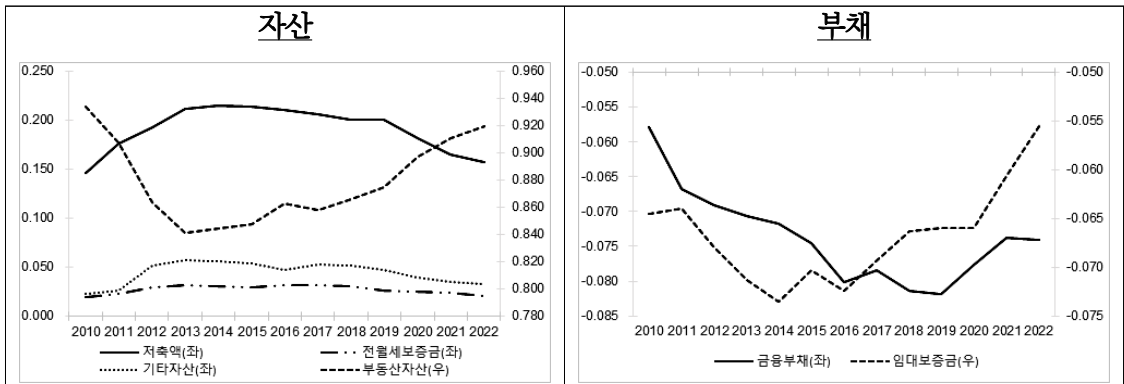
□ 요약과 함의

-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과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2010~2022년 기간에 자산과 부채 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변동했음.
-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순자산의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부동산자산은 이와는 달리 2010년대 초반 이후 순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음.

- 부채의 경우 정의상 부(-)의 효과가 기대되고, 그 절댓값이 커지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와는 달리 그림자 금융을 대표하는 임대보증금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그리고 금융부채는 2019년 이후 상대적으로 순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반전했음.

[그림 4-4] 자산과 부채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100, %)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이처럼 최근 금융부채가 가구의 순자산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 정부 시기의 부동산가격 급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한 부채주도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은 근로(사업)소득, 부채조달, 상속과 증여, 그리고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되는데, 초저금리 상황에서 값싼 부채조달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며, 이것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부채조달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정준호, 2022).

3. 부채 가구의 현황: 과다부채 가구, 부채 용도, 그리고 상환 부담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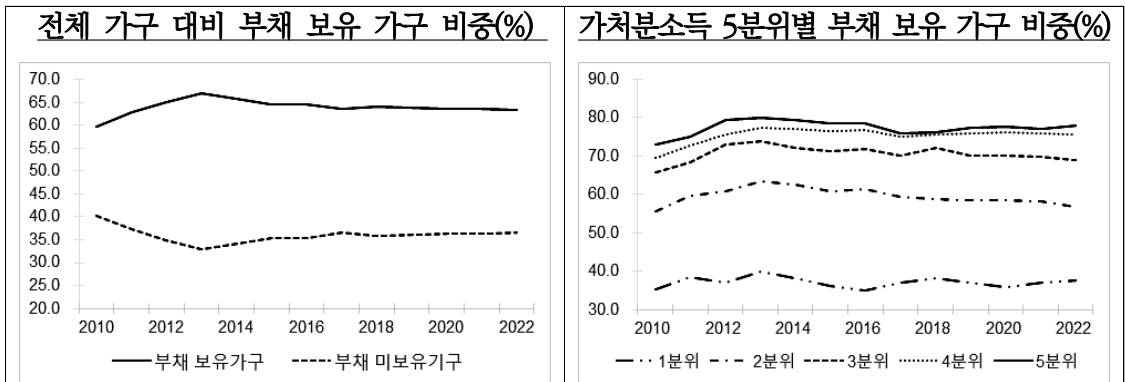
- 부채 보유 가구의 주관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가지고 과다부채 가구 비중, 부채 용도, 그리고 상환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부채 가구의 현황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분석 기간은 2010~2022년 기간이며, 이는 과다부채 가구 비중이 그 기간에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부채의 용도, 그리고 이에 따른 주관적인 부채 상환 부담 정도를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임.
- 이 작업은 가처분소득 분위별로 과다부채 가구 비중, 부채 용도, 그리고 주관적 부채상환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 가구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임.

□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

- 2013년 이후 전체 가구 대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그림 4-5) 참조).
- 전체 가구 대비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2022년 현재 63.3%이고, 부채 미보유 가구 비중은 36.7%임.
- 하지만 2010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59.8%이고, 2022년 그 비중이 63.3%이므로 12년 동안 그 비중이 3.5%p 늘어나 가구의 부채 보유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님.
- 현재 분석 단위가 가구주이므로, 이를 개인 단위로 하면 그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가구 대비 약 2/3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가구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상당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음.
-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순으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4분위와 5분위의 경우 그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1분위의 경우가 제일 낮음.
- 2010~2022년 기간에 가처분소득 1분위는 35~40%, 2분위는 55.6~63.5%, 3분위는 65.9~73.8%, 4분위는 69.6~77.5%, 5분위는 72.9~80.0% 내에서 부채 가구 보유의 비중이 변동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 3분위 이상은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약 2/3를 넘어서고 있음.
- 따라서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부채 보유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 분위별로 부채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4-5] 부채 보유 가구 비중(%) 추이: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018~2022년 기간에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는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음.
- 5분위는 76.0%에서 77.8%로 늘어났지만, 1분위는 38.1% → 37.6%, 2분위는

58.9% → 56.9%, 3분위는 72.0% → 68.8%, 4분위는 75.7% → 75.5%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소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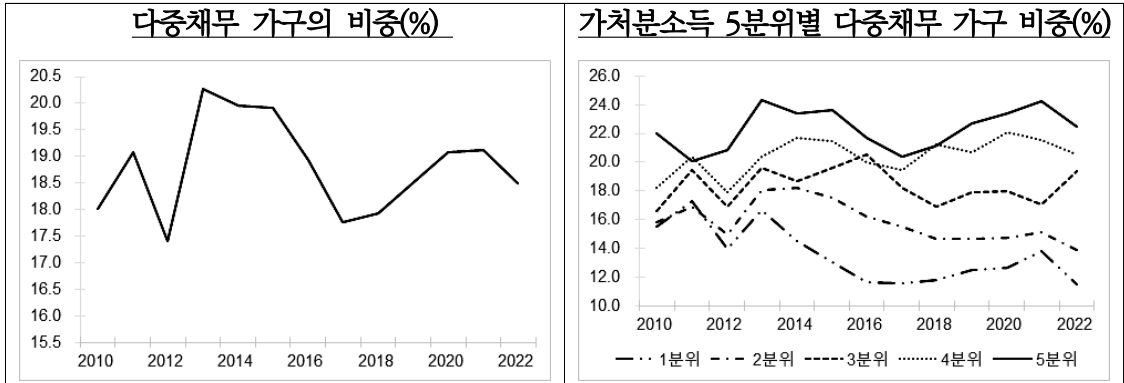
- 2018~2022년 기간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했는데, 가처분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은 가용한 부채를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했지만, 그 정책 효과가 상위 소득 20% 계층에게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

- 여기서 다중채무 가구는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둘 이상의 부채 항목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말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서 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임대보증금, 외상할부미상환금액, 계탄후불입금액, 개인직장빌린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부채 항목을 가진 가구를 다중채무 가구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함.
- 다중채무 가구의 경우 금리나 소득 변동이 심할 경우 원리금 상환을 순조롭게 못할 가능성이 커서 가계부채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음.
-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은 수도권 주택시장 경기와 대략 연동되어 있음(그림 4-6) 참조).
- 2013~2017년 기간에는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에 수도

- 권의 주택시장 경기는 하강기였으며, 2015년 전후로 주택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소위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러한 정책의 여파로 2017년에 들어와서 수도권 주택시장 경기가 일반인 누구나 인지할 정도로 회복된 것이 사실임.
 - 2010년 중·후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으며, 이는 다시 비수도권지역으로 확산하였고, 이에 따라 '영끌'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이를 반영하듯이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이 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가파른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2022년에는 그 추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임.
- 가처분소득 5분위별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을 보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다중채무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추세는 전체 추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
- 특히 2010년 후반 들어 5분위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그 추세가 반전되었으며, 4분위도 거의 유사하지만 그 추세가 더 일찍 꺾였음.
 - 3분위의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 추세는 다른 분위와 달리 변동이 있으며, 2022년에도 상승했음.
 - 2분위는 다른 분위와 달리 2010년 초반 이후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2018년 이후에도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여 전반적 추세로는 내림세고, 반면에 1분위의 경우 5분위처럼 2010년 후반 들어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2022년에는 그 추세가 반전되었음.

[그림 4-6]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 추이: 2000~2022년



주: 다중 채무자는 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부채 항목이 두 개 이상인 가구의 비중을 말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가처분소득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분위일수록 신용 접근성이 좋고 이를 활용하여 자산 투자에 활용할 기회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하위 20% 계층(1분위)의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상위 20%(5분위)의 그것보다는 작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전자의 다중채무 가구의 비중이 후자의 그것처럼 증가했다는 것임.
- 따라서 상위 20%는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 목적으로, 반면에 하위 20%는 생계비 등 다른 목적으로 초저금리로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중채무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임.

□ 가계의 부채 위험 지표

- 부채 위험 지표는 통상적으로 가처분소득 또는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사용하는 데, 저량(stock) 지표와 유량(flow) 지표로 구분됨(김현정, 2010).
- 저량 지표는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반해, 유량 지표는 가처분소득 또는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부채의 원리

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현금흐름 관련 위험도를 측정할 수가 있음.

- 대표적인 저량 지표로는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DTA(Debt to Asset) 등이 있으며, 담보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는 지표들임.
- 가령 금융위기와 같이 금리 상승기에 자산처분이 쉽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힘들어서 가계부채 위험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저량 지표는 가계 부채 위험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유량 지표로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등이 있으며, 이는 소득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는 지표들임.
- 또한, 저량과 유량 지표를 혼합한 금융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LTI(Loan to Income) 등이 있음.
-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 만기 내 상환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유량 지표가 더 적실성이 있음.

□ 과다부채 가구와 부채위험 가구의 선정 기준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다부채 가구’와 ‘부채위험 가구’를 구분하는데, 대체로 전자는 하나의 부채 위험 지표로 정의하거나 여러 부채위험 지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반면에 후자는 둘 이상의 부채위험 지표가 모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함.
- 예를 들면, 백은영·성영애(2012)는 ‘과다채무 가구’를 $DTA(\text{총부채}/\text{총자산} \geq 0.7)$, $DFA(\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geq 0.5)$, $DSR(\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geq 0.4)$ 등의

세 가지 지표로 정의하고, 반면에 ‘부채 취약 가구’는 이 세 가지 지표의 특정 구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로 정의했음.

- 한편, 한국은행은 DTA 100%와 DSR 40%인 경우를 100으로 설정하는 ‘가계 부실 위험지수’(HDRI)를 산정하고 이 지수가 100 이상인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다부채 가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

- 김현정 외(2009)는 DTI 300%, DFA 500%, DTA 70%를, 백은영·성영애(2012)는 DTA 70%, DFA 500%, DSR 40%를, 전승훈·임병인(2013)은 DTI 300%, DFA 500%, DTA 70%, DSR 40%를, 배영목(2015)은 DSR 40%, DTI 300%, DTA 70%를, 현대경제연구원(2016)은 DSR 40%, DFA 100%를 사용했음.
- 최근 연구로 정세은·박종선(2023)은 DFA 500%, DTA 70%, LTI 300%, DSR 40%를 적용하여 과다부채 가구를 조작적으로 정의했음.

○ 이처럼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를 종합하여 김재용(2014: 116)은 <표 4-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DSR의 경우 20% 이하를 안정적, 40% 이상을 위험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경우 40%, 저축은행의 경우 50%를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LTI의 경우 200% 이하를 안정적, 300% 이상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DTA 경우에는 60% 이하를 안정적, 80% 이상을 위험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음.
- 여기서 DTA 기준이 70%가 아니라 80%라는 점이 기존 연구와 그것과 약간 다르고, 그 외에는 대체로 거의 같음.

〈표 4-1〉 가계부채 위험의 평가 기준

단계	등급	DSR	LTI	DTA
제1단계	안정적	20% 이하	200% 이하	60% 이하
제2단계	저위험	20~40%	200~300%	60~80%
제3단계	중위험	40~60%	300~500%	80~100%
제4단계	고위험	60~100%	500~800%	100~200%
제5단계	초고위험	100% 이상	800% 이상	200% 이상

자료: 김재용(2014: 116)에서 수정·보완.

- 〈표 4-1〉에 따르면 과다부채 가구는 DTA, DSR, LTI 지표 기준으로 중위험 등급 이상을 말하는 것임.
- DTA 100%, DSR 40% 이상 가구를 일컫는 한국은행의 위험 가구는 위험 등급이 각각 고위험과 중위험 등급 이상임.
- 이 글에서는 〈표 4-1〉의 기준에 따라 과다부채 가구 비중과 위험 가구 비중을 산정하고자 함.
- 위험 가구의 조작적 정의는 한국은행과 그것과 같음.
- 여기서는 대표적인 저량, 유량, 그리고 그 혼합 지표 등 세 가지를 사용함.
- 저량 지표로 대표적인 것이 LTV이지만,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경우 분모의 담보가치(예: 부동산자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 지표 대신에 DTA 지표를 사용함.
- 유량 지표로는 부동산 대출에 한정된 DTI보다 부채 전반을 포괄하는 DSR을 활용함.
- 유량과 저량 지표를 혼합한 LTI를 사용하고자 함.
- 이들 지표가 가구별로 편차가 워낙 커서 이를 평균치로 나타내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김재용(2014)처럼 위험 등급별로 나누어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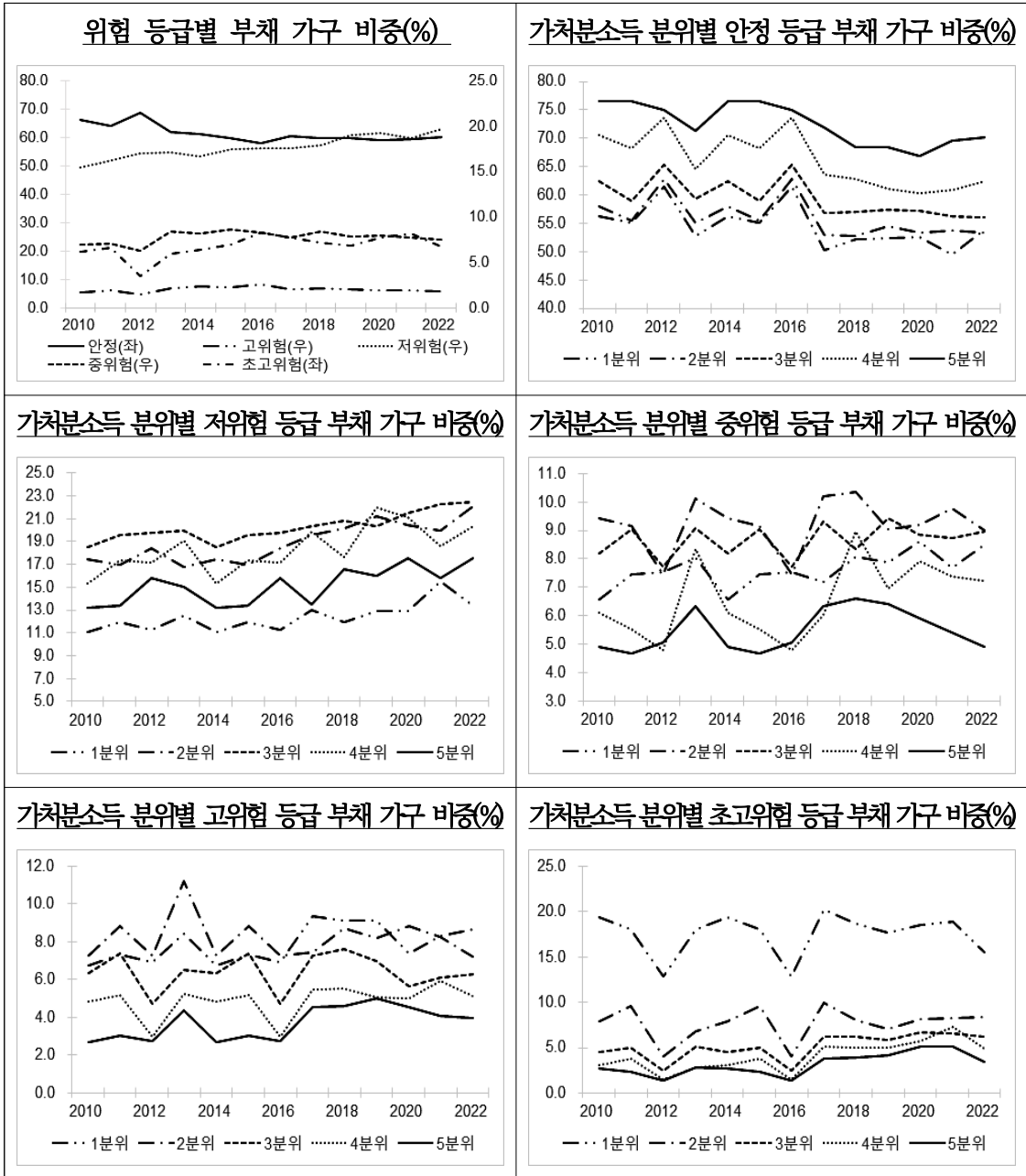
□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추이

- 이하에서는 2010~2012년 기간에 세 가지 지표별로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자 함.

— ① DSR

- 유량 지표를 대표하는 DSR을 보면 2010~2022년 기간에 안정 등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 대신에 저위험 등급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음(그림 4-7 참조).
- 안정 등급이 동 기간에 57.8~68.7%에서 변동하여 이 등급이 부채 보유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위험과 고위험, 초고위험 등급 비중은 동 기간에 대체로 횡보하고 있으며, 초고위험 등급 비중이 고위험 등급 비중보다 더 높고 중위험 등급 비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 초고위험 등급 비중은 2010년 초·중반에 걸쳐 상승하고, 2010년대 후반에는 다소 감소하고 그 이후 다시 상승과 반복을 거듭하고 있음.

[그림 4-기] DSR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2010~2022년 기간에 소득 측면에서 부채상환의 위험 수준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저위험과 초고위험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 중위험 이상의 등급을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2012~2015년 사이에는 중위험 이상 등급 비중이 14.3%에서 24.6%로 상승했지만, 그 이후 하락하여 2022년 20.1% 수준임(그림 4-7기 참조).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저위험 등급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위험 이상 등급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여 가계부채 위험이 전면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는 초저금리 효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에 기인하지만, 경제 위기를 통해 소득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금리 인상이 급격할 경우 저위험 등급이 중위험 등급 이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계부채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가령,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득수준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2022년의 통계치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자산통계가 집계된 것이고, 소득자료는 2021년 연말 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보면, 거의 모든 분위에서 안정 등급이 2010~2022년 기간에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최근 들어 반등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 가계대출 강화 조치와 초저금리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저위험 등급도 거의 모든 분위에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중위험 등급 이상에서는 분위별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처분소득 5분위의 경우 변동이 있지만 중위험 이상의 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가계대출 조치의 강화와 초저금리 상황으로 최근에 내림세로 전환했음.
- 하지만 중위험 이상 등급 비중을 절댓값 측면에서 보면 5분위의 경우 그 등급 비중이 제일 낮고, 1분위와 2분위의 등급 비중이 5분위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분위일수록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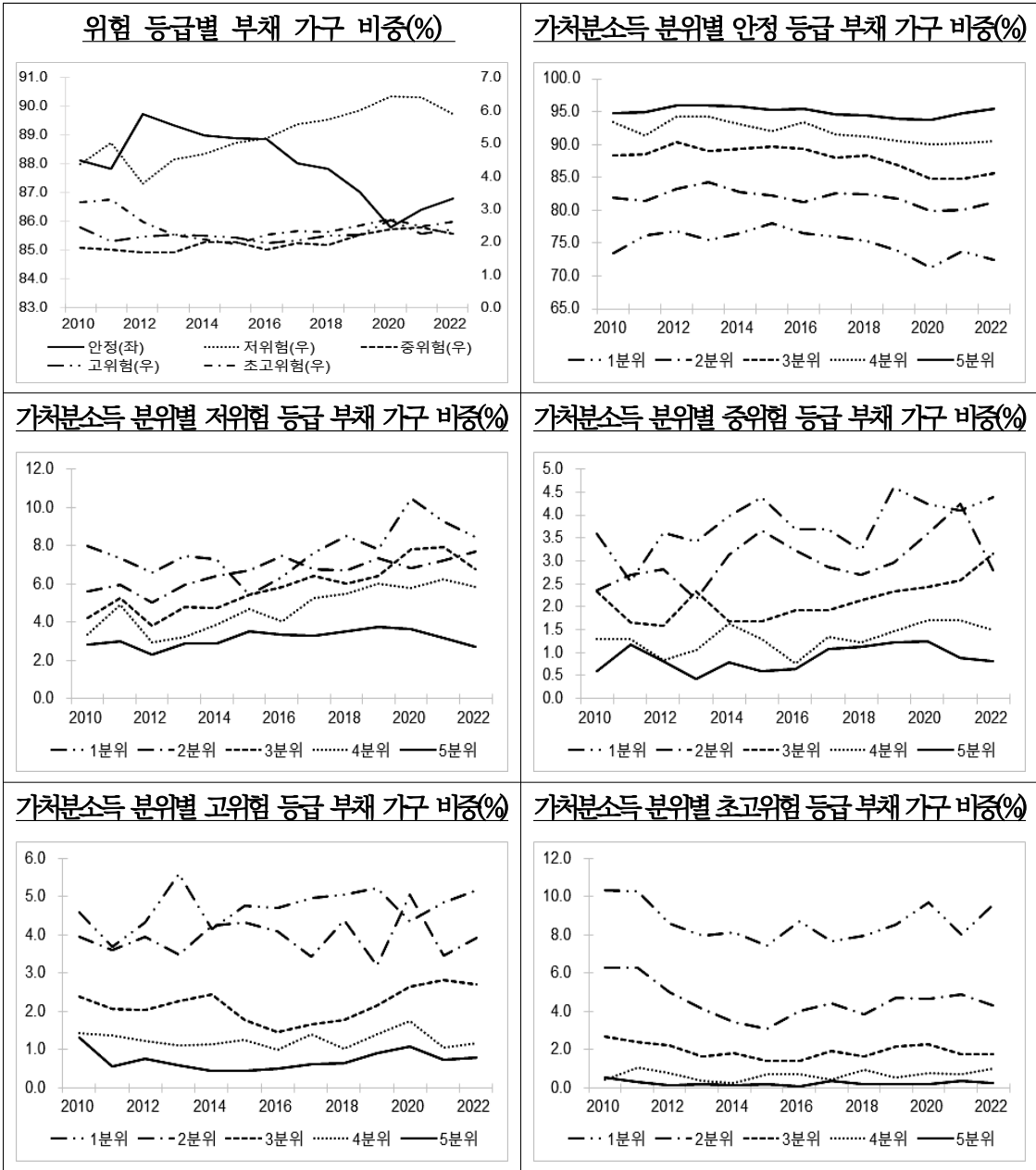
- 요약하면, DSR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위험 이상 등급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저위험 등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소득충격에 따라 중위험 등급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가계부채 위험은 가처분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 높으며, 5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후자에서 추세적으로 중위험 등급 이상의 비율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반전하였음.

— ② DTA 지표

- DTA 지표는 저량 지표로 가계부채 위험 정도를 측정하며, 담보를 기반으로 한 부채조달과 자산시장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보여줌.
- 저량 지표를 나타내는 DTA를 보면 2012~2020년 기간에 안정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 반전되었으며, 저위험 등급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졌음(그림 4-8] 참조).
 - 안정 등급이 동 기간에 89.7%에서 85.8%로 하락했으며, 이 등급이 부채 보유 가구의 2/3 이상을 넘어서고 있음.
 - 중위험과 고위험, 초고위험 등급 비중은 2010~2022년 기간에 대체로 횡보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이며,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순으로 등급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반전되었음.
 - 초고위험 등급 비중은 2010년 중반 이후 상승하다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지만, 저위험 등급 다음으로 초고위험 등급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비중은 DSR의 초고위험 등급보다 낮은 편임.

- 2010~2022년 기간에 대체로 담보 관리 측면에서 부채상환의 위험 수준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저위험뿐만 아니라 중위험 등급 이상의 증가세도 나타났음.
- DSR처럼 중위험 이상의 등급을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하다고 평가한다면, 2010~2016년 사이에 DTA의 중위험 이상 등급 비중이 7.5%에서 6.0%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반전하여 2020년 7.8%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다시 반전하여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음([그림 4-8] 참조).
- 이처럼 2016년 전후로 중위험 이상 등급 가구 DTA의 U자형 추세는 DSR의 역 U자형 추세와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댓값 측면에서 보면 전자의 비중이 후자의 그것보다 훨씬 낮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대 초반 이후 저위험 등급이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중위험 등급 비중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여주어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음.

[그림 4-8] DTA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이 전면화될 수가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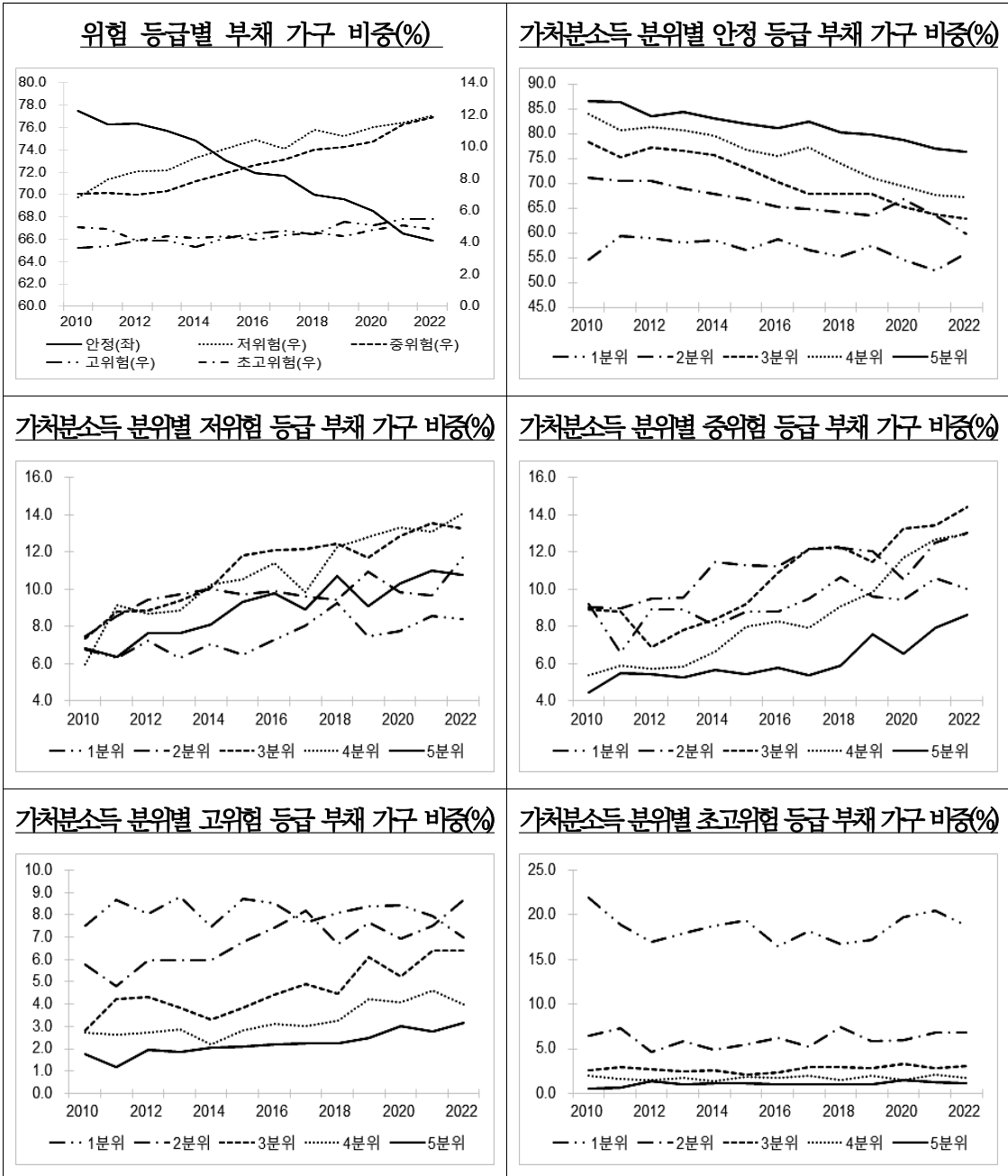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 등급 비중이 내림세이기는 한데, 그 비중이 워낙 높아 가계부채 위험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여 부동산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할 경우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가 높아질 수가 있음.
-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보면, 거의 모든 분위에서 DSR의 경우처럼 안정 등급이 2010~2022년 기간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초저금리와 자산시장 붐으로 최근 들어 반등했음.
 - 저위험 등급은 분석 기간에 거의 모든 분위에서 대체로 상승세이며, 중위험 등급 이상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반전 추세가 나타났음.
 - 중위험 이상 등급 비중을 절댓값 측면에서 보면 5분위의 경우 그 등급 비중이 제일 낮고, 1분위와 2분위의 등급 비중이 5분위의 그것보다 매우 높아 저소득 분위일수록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요약하면, DTA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저위험 등급 비중뿐만 아니라 중위험 등급 이상 비중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했지만, 최근에 반전했음.
 - DTA는 저량 지표이므로 부동산시장 가격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이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음.
 - 하지만 안정 등급의 가계 비중이 매우 높아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단언할 수가 없지만, DSR처럼 저소득분위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③ LTI 지표

- 유량과 저량 측정치를 혼합하여 가계부채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LTI를 보면 2010~2022년 기간에 안정 등급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 대신에 저위험과 중위험 등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고위험과 초고위험 등급 비중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4-9) 참조).
- 안정 등급이 동 기간에 65.8~77.5%에서 변동하여 이 등급이 부채 보유 가구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저위험과 중위험 등급 비중이 나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위험과 초고위험 등급 비중도 증가하지만, 이들 비중의 절댓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중위험 이상의 등급 비중은 2012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는데, 그 비중이 15.2~22.2%에서 변동하고 있음.
- 특히 눈여겨볼 점은 LTI의 경우 가계부채 위험 정도가 표면화되는 중위험 등급 비중이 7.0~11.9%로 DTA의 중위험 등급 범위 1.7~2.4%보다 높고, DSR의 중위험 등급 범위 6.3~8.6%와 유사하거나 좀 높은 편임.

[그림 4-9] LTI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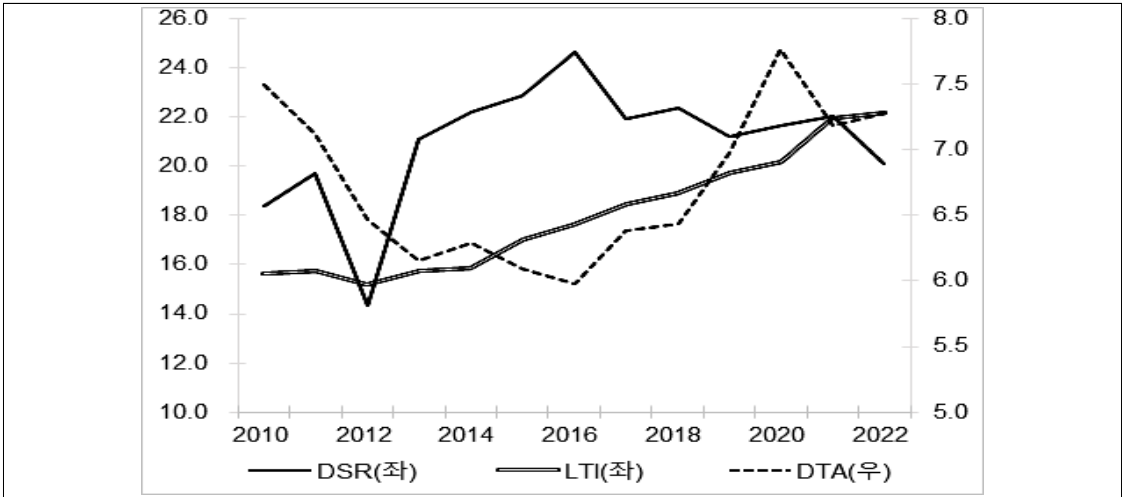
- 2010~2022년 기간에 저량과 유량 측면을 혼합하여 보면 부채상환의 위험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저위험 등급과 특히 중위험 등급 비중이 나란히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험이 표면화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안정 등급 비중이 여전히 약 2/3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부채 위험이 전면화됐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임.
- 하지만 정세은·박종선(2023)은 LTI 지표가 자산시장 붐과 저금리 인한 이자 부담의 일시적 하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이므로 2020년에 이 지표의 상승했다는 것은 과다부채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중위험 등급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다부채 가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또한, 경제 침체와 같이 소득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충격이 있을 경우, 저위험 등급이 중위험 등급 이상으로 전환되거나 중위험 등급 이상의 비중이 현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위험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문제임.
-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보면, 거의 모든 분위에서 안정 등급 비중이 2010~2022년 기간에 대체로 내림세이며, 또한 4분위와 5분위의 하락하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름.
- 동 기간에 저위험 등급 비중도 거의 모든 분위에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중위험 등급과 고위험 등급 비중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고위험 등급 비중은 대체로 횡보하고 있음.
-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 즉 LTI 비중 정도는 고소득분위일수록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요약하면, LTI 지표로 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DSR과 DTA와 달리 중위험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④ 과다부채 가구 비중 추이: DSR, DTA, LTI의 비교

- DSR, DTA, LTI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측면에서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 중위험 등급 이상을 가계부채 위험이 표면화될 수 있는 과다부채 가구라 본다면, 세 가지 상이한 지표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 [그림 4-10]임.
- 2016년을 기점으로 DSR과 DTA의 추이는 상반된 추세를 보여주는데, 전자는 역 U자형을, 반면에 후자는 U자형을 보여주며, LTI는 계속해서 선형 증가했음.
- DTA와 DSR 지표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일시적 경감 등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은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무관한 LTI 지표는 선형 증가하고 있음.
- DTA와 DSR 지표가 상이하게 움직이는 것은 변동금리 담보대출 위주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음(정준호, 2022).

[그림 4-10] 과다채무(중위험 이상 등급) 가구 비중(%): DSR과 DTA의 비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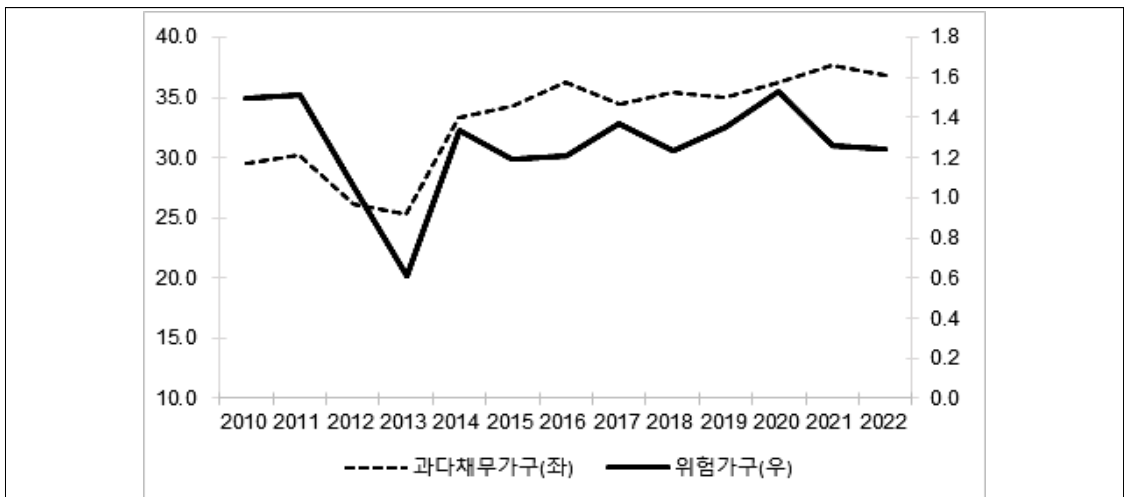
- 절댓값 측면에서 보면 DTA로 측정된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 비중이 가장 낮지만, 그 추세는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부채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
- 반면에 DSR로 측정된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 비중이 동 기간에 14.3~24.6% 내에서 변동하고, 그 평균이 21.0%로 부채 보유 가구의 약 1/5 정도가 되어 작지 않은 수치이지만 그 추세는 2016년 이후 하락하여 DSR의 그것과 상반됨.
- LTI로 측정된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 비중이 2010년 15.6%에서 2022년 22.2%로 줄곧 상승했음.
- 2016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DSR로 측정된 가계부채 위험 지표가 그 반대로 움직인 것은 변동금리의 원리금 상환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수출 대기업의 호조로 인한 중상층 가구의 지속적인 근로소득 증가, 초저금리 상황이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했을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의 거치식 상환방식이 주종을 이루어 고정금리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방식보다 원리금 상

환 부담이 덜했기 때문으로 보임(정준호, 2022).

— ⑤ 위험 가구 비중 추이: DTA 100%, DSR 40% 이상 가구

-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위험 가구를 DTA 100%, DSR 40% 이상 가구, 즉 위험 등급이 각각 고위험과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를 일컫고 있음.
- 위험 가구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매우 미미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보건 위기 시기에는 하락하였음([그림 4-11] 참조)
-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DTA와 DSR 지수가 자산시장 붐과 금리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임.
- 참고로 DSR, DTA, LTI 지수 중 어느 하나가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를 과다채무 가구로 규정하면, 그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4-11] 위험 가구 비중(%): DTA 100%, DSR 40% 이상 가구



주: 과다채무 가구는 DSR, DTA, LTI 지수 중에 어느 하나가 중위험 등급 이상인 경우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표 4-2>는 유량과 저량 지표의 대표적인 DSR과 DTA의 등급별 결합 분포를 2010년과 2022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 이는 DSR과 DTA 등급별로 각 쌍에 동시에 속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2000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각 행렬 사이에 눈에 띄는 큰 변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DSR 측면에서 중위험 등급 이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감지되지만, DTA 측면에서는 안정 등급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가령, 중위험(DSR)-안정(DTA) 등급 쌍이 2010년과 2022년 모두 84%로 높음.

<표 4-2> DSR과 DTA 등급별 결합 분포(%): 2010년과 2022년 비교

2010년		DTA				
		안정적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D	안정적	91.0	3.0	1.0	2.0	3.0
	저위험	89.0	5.0	2.0	2.0	2.0
S	중위험	84.0	8.0	3.0	2.0	3.0
	고위험	84.0	8.0	3.0	3.0	2.0
R	초고위험	71.0	11.0	4.0	6.0	7.0
2022년		DTA				
		안정적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D	안정적	89.0	4.0	2.0	2.0	3.0
	저위험	87.0	6.0	2.0	2.0	2.0
S	중위험	84.0	8.0	3.0	3.0	3.0
	고위험	81.0	9.0	4.0	3.0	3.0
R	초고위험	80.0	9.0	4.0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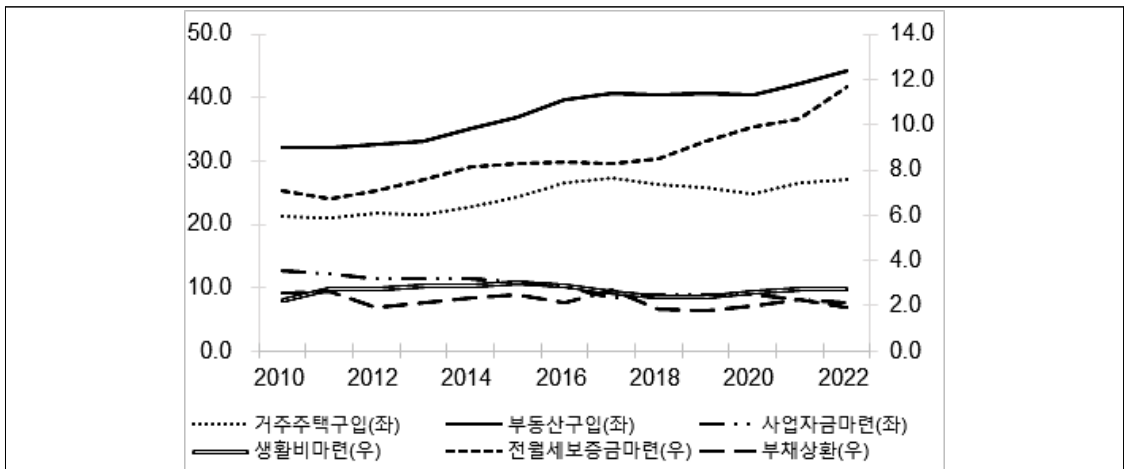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이처럼 유량 지표 수준은 과다부채 가구이지만, 저량 기준으로는 과다부채 가구가 아닌 쌍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이용한 자산시장 투자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이러한 대출이 원활한 소득상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시장 붐이 꺼지면 자산 가격 하락으로 DTA 지표로 상승하고, 부채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가계부채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함의함.

□ 가계대출 용도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 용도는 거주주택구입,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마련, 생활비마련, 기타용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기타 용도를 제외하고 그 추세를 나타내면 [그림 4-1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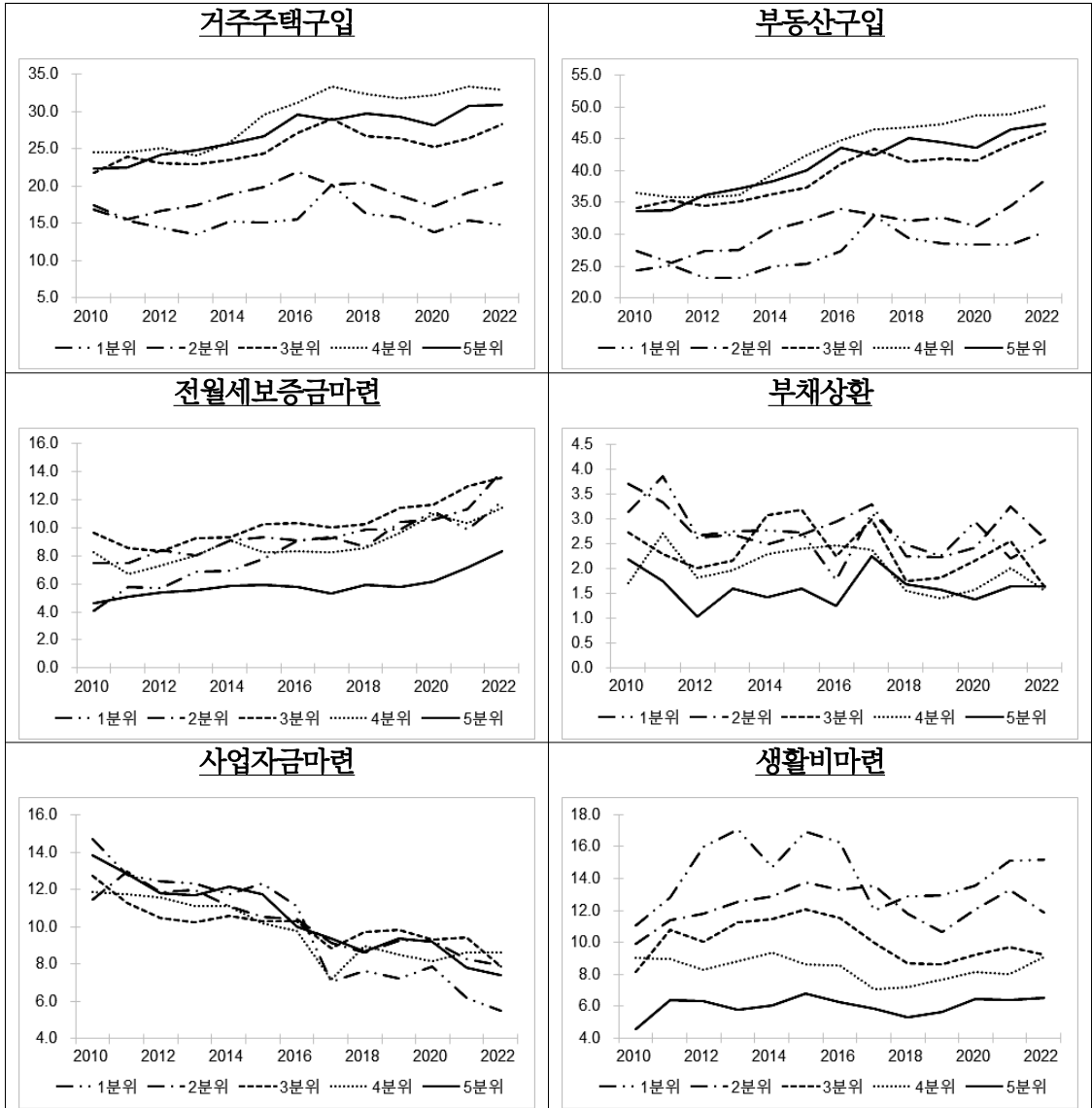
[그림 4-12] 가계대출 용도별 비중(%) 추이: 201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2010~2022년 기간에 부채 보유 가구의 전체 부채액에서 거주주택구입, 거주주택 이외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마련 등 부동산 구입과 임대차 관련 용도로 사용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8~55.8% 내에서 변동했음.
-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 용도 비중은 2012~2012년 사이에 10.9%에서 1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다소 줄어들어 횡보하기도 했음.
- 이는 거주주택구입 용도 이외의 부동산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전월세보증금 마련 용도 비중은 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는 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승하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음.
- 사업자금마련 용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부채상환 용도 비중은 대체로 횡보하고 있으며,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도 서서히 201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시 미세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가계대출 용도 비중을 살펴본 것이 [그림 4-13]임.

[그림 4-13] 가처분소득 분위별 가계대출 용도 비중(%) 추이: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거주주택 용도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가 5분위가 아니고 4분위이고,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임.
- 그 다음이 5분위와 3분위 순이고 2분위와 1분위의 경우 그 용도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임.

- 대체로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대체로 상승세이나 2010년대 후반에는 다소 그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보건 위기 시기인 202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증가세임.
- 이는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 급등기에서 구매력이 있는 많은 중상류층 가구가 부동산 구입에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함.

- 거주주택구입과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용도 비중을 보면 3, 4, 5분위 등의 중상층의 소득분위에서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1분위와 2분위에서도 2020년 이후 부동산 구입 용도 비중이 상승했음.
- 따라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분위에 무관하게 거의 모든 가구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부동산 구입에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

- 전월세보증금마련 용도 비중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특히 3분위에서 두드러짐.
-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3분위 다음으로 2분위, 1분위, 4분위의 순으로 전월세보증금마련 용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서민 중산층 가구가 전월세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많이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부채상환 용도 비중은 분위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이한 분위별로 공통된 패턴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그 비중이 가장 작은 편임.

- 사업자금마련 용도 비중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내림세인데, 이는 자영업의 축소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빚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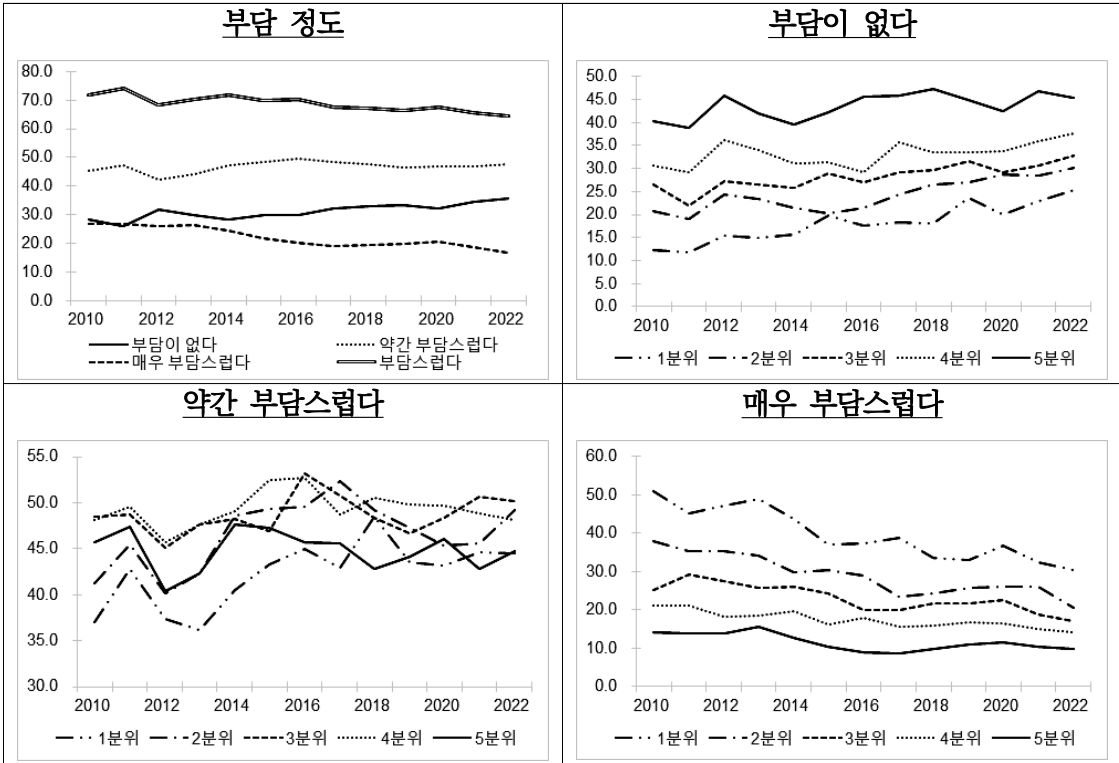
-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 201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모든 분위에서 상승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저소득분위일수록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저소득분위에서는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이나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나 절댓값에서 서로 거의 차이가 없음.
- 요약하면,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이외 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용도 비중이 제일 높으며, 가처분소득별로 보면 대출 용도가 분위별로 상이하지만, 저분위일수록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 꽤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의 주관적인 부담 정도를 드러내며, 가구주의 가계부채 위험 판단에 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생계비 부담 정도는 ‘부담이 없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고 구분되어 있음.
- [그림 4-14]에서 보듯이, 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약간 부담스럽다’와 ‘매우 부담스럽다’를 포함한 부담이 있다는 가구 비중이 2010~202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약간 부담스럽다’의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에는 상승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소 하락하다 다시 2020년대 이후 미세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갔음.
- ‘매우 부담스럽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내림세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원리금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약 70% 안팎으로 매우 높기 때문임.
- o 가처분소득 5분위별로 보면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이 없다고 대답한 가구 비중이 어느 소득분위에서나 지속적으로 상승세이며, 고소득분위일수록 부담이 없다고 대답한 가구 비중이 약 45% 내외로 매우 높으며, 반면에 1분위의 그것은 약 25% 내외임.
- o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대답한 가구 비중이 거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대체로 상승세이지만, 그 이후에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음.
- 가령, 2, 3, 4분위는 대체로 2010년대 초반에는 상승세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전을 보여주며, 5분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내림세임.
- 하지만 1분위의 경우 다른 분위와 달리 201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 o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대답한 가구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내림세이지만, 저소득분위일수록 그 비중의 절댓값은 매우 큼.

[그림 4-14] 원리금 상환의 부담 정도에 따른 가구 비중(%) 추이: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3.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

- 여기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위험 측정 지표가 주관적인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가 주관적인 부담 정도에 미치는 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 자료 및 방법

□ 자료

-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00~2022년 전체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하고 자 함.
- 동 기간에 부동산경기 사이클이 상승과 하강을 모두 경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편의(bias)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분석 대상은 부채 보유 가구이고, 이에 대해 주관적 부담 정도를 응답한 가구이지만, 모든 부채 보유 가구가 이러한 설문에 대답하지 않아 무응답 문제가 발생하므로, 즉 표본 선택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통제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것임.
- 또한, 2016년 이후 DSR과 DTA로 측정된 가계부채 위험 지표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므로 2016~2022년 기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함.
- 김현정(2010), 김현정·김우영(2009), 김재용(2014), 박윤태·노정현(2017) 등의 기존 연구에 따라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의 연령, 종사상 지위, 점유형태, 거주지역, 성별, 혼인상태, 가처분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 DSR, DTA, LTI와 같은 가계부채 위험 지표, 대출 비중과 대출 용도와 같은 대출 특성 변수들이 활용될 것임.
- 가계부채 위험을 측정하는 DSR, DTA, LTI 지표의 경우 가구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이상치(outlier)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분석에서 제거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남.
- 이를 감안하여, 변수 내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위험 지표를 전술한 바와 같이 5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함.

□ 분석 방법

- 종속 변수가 주관적인 부담 정도이고, 이것이 순서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순서형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주관적인 부담 정도에 대해 무응답을 한 가구가 작지 않아 이를 제외하면 정보 손실과 표본 선택 편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헤크먼의 표본 선택 모델을 사용하고자 함(Heckman, 1976).
 - 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주관적 부담 정도에 무응답을 한 가구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중도절단된 자료(censored data)로 볼 수가 있음.
- 헤크먼은 이러한 표본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추정 방법을 제시했음(Heckman, 1976).
 - 절단된 관측치를 표본에서 제외하면 실제로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으므로 추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 특히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이러한 관측치를 제외하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님.
 - 헤크먼은 무응답이 일어난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종 회귀분석에 반영하는 2단계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무응답 관측치 제거에 따른 편이 문제를 회피하고 관측치의 무응답 여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부표 2〉 참조).

3) 분석 결과

□ 회귀분석 결과

- <표 4-3>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가용한 2010~2022년과 동 기간에 가계부채 위험 지표에서 변곡점이 나타난 2016~2022년 기간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단순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것보다 표본 선택 편의를 교정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Wald test는 5%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후자 모형을 선택한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10~2022년 표본에 대해서는 [$\chi^2(1) = 13.10$; p값 $\chi^2 = 0.0003$]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결과 방정식과 선택 방정식의 오차항이 상호 연관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
 - 2016~2022년 표본에 대해서도 [$\chi^2(1) = 5.30$, p값 $\chi^2 = 0.0214$]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결과 방정식과 선택 방정식의 오차항이 상호 연관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

<표 4-3>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2010~2022		2016~2022	
		결과 방정식	선택 방정식	결과 방정식	선택 방정식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수도권	-0.038 (-1.69)*	-0.509 (-51.12)***	-0.045 (-1.75)*	-0.467 (-35.57)***
	남성	-0.072 (-3.24)***	0.150 (9.09)***	-0.094 (-3.41)***	0.127 (96.07)***
	가구원수	0.154 (23.18)***	0.095 (17.45)***	0.165 (18.56)***	0.106 (14.35)***
	대출 이상	-0.194 (-14.86)***	-0.123 (-10.73)***	-0.169 (-10.24)***	-0.099 (-6.49)***
	연령	0.005 (1.01)	0.056 (18.13)***	0.009 (1.51)	0.058 (14.75)***
	연령 제곱	0.000 (-0.06)	0.000 (-8.08)***	0.000 (-0.62)	0.000 (-7.50)***

	상용직	-0.139 (-6.91)***	0.236 (15.81)***	-0.159 (-6.45)***	0.214 (10.96)***
	자영업	-0.042 (-2.25)**	0.155 (10.40)***	-0.031 (-1.34)	0.128 (96.48)***
	배우자	-0.025 (-1.15)	0.141 (8.11)***	-0.039 (-1.42)	0.150 (6.71)***
	가처분소득 2분위	-0.143 (-6.00)***	0.060 (3.02)***	-0.103 (-3.36)***	0.124 (4.92)***
	가처분소득 3분위	-0.203 (-7.87)***	0.233 (11.20)***	-0.149 (-4.51)***	0.270 (10.13)***
	가처분소득 4분위	-0.276 (-9.14)***	0.437 (19.87)***	-0.198 (-5.09)***	0.507 (17.81)***
	가처분소득 5분위	-0.479 (-13.65)***	0.590 (25.32)***	-0.423 (-9.59)***	0.642 (21.09)***
가계부채 위험도(음)	DSR_저위험	0.229 (13.57)***	0.281 (20.87)***	0.194 (9.34)***	0.272 (15.48)***
	DSR_중위험	0.258 (11.86)***	0.272 (14.20)***	0.234 (8.37)***	0.266 (10.54)***
	DSR_고위험	0.283 (12.14)***	0.250 (11.70)***	0.247 (8.20)***	0.215 (7.68)***
	DSR_초고위험	0.239 (9.81)***	0.168 (7.21)***	0.179 (5.95)***	0.145 (4.93)***
	DTA_저위험	0.343 (7.60)***	-0.808 (-37.03)***	0.329 (6.01)***	-0.822 (-30.15)***
	DTA_중위험	0.480 (5.44)***	-1.326 (-37.77)***	0.533 (4.92)***	-1.356 (-30.38)***
	DTA_고위험	0.620 (5.17)***	-1.671 (-42.86)***	0.773 (5.04)***	-1.676 (-33.87)***
	DTA_초고위험	0.854 (3.45)***	-2.556 (-39.71)***	1.000 (2.54)**	-2.724 (-27.56)***
	LTI_저위험	0.380 (14.83)***	0.650 (36.78)***	0.346 (11.42)***	0.598 (26.68)***
	LTI_중위험	0.463 (15.92)***	0.793 (39.35)***	0.425 (12.27)***	0.733 (29.13)***
	LTI_고위험	0.536 (14.78)***	0.931 (32.19)***	0.484 (11.04)***	0.879 (24.06)***
	LTI_초고위험	0.502 (11.82)***	1.079 (34.01)***	0.492 (9.48)***	1.040 (25.20)***
대출 특성	다중채무 가구	0.342 (25.10)***	-	0.305 (17.59)***	-
	담보대출 비중	0.005 (19.40)***	-	0.003 (9.52)***	-
	신용대출 비중	0.003 (10.94)***	-	0.001 (3.29)***	-
	신용카드 대출 비중	0.009 (14.15)***	-	0.011 (11.93)***	-
	부동산 임대보증금 비중	0.001 (4.06)***	-	0.000 (-0.10)	-
	거주주택구입	0.001 (5.61)***	-	0.002 (5.52)***	-
	전월세보증금마련	0.000 (0.35)	-	0.001 (0.98)	-

	부채상환	0.005 (11.42)***	-	0.005 (9.07)***	-
	사업자금마련	0.002 (7.91)***	-	0.003 (8.07)***	-
	생활자금마련	0.003 (9.87)***	-	0.003 (9.12)***	-
	상수	-	-2.727 (-33.97)***	-	-3.213 (-30.43)***
	/cut1	0.526 (2.66)***	-	0.822 (3.18)***	-
	/cut2	2.038 (10.91)***	-	2.362 (9.51)***	-
	/athrho	0.269 (3.62)***	-	0.208 (2.30)**	-
	연도 더미	○	○	○	○
	표본수	47,704	54,086	25,730	34,239

주: 1) 괄호 안 수치는 z 값이고, *, **, ***는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2010~2022년의 경우, Wald test of indep. eqns.(rho = 0): $\chi^2(1) = 13.10$, p값 $\chi^2 = 0.0003$; 2010~2022년의 경우, Wald test of indep. eqns.(rho = 0): $\chi^2(1) = 5.30$, p값 $\chi^2 = 0.0214$ 임.

○ ‘자가 여부’에 관한 선택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두 기간 모두에 대해 설명변수의 부호 측면에서 동일한 추정 결과를 보여줌.
- 수도권, 대출 이상, DTA 등급 변수들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어 수도권에 거주하고, 대출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이고, DTA 등급이 높을수록 자가 보유 확률이 떨어진다는 시사함.
- 반면에 남성, 가구원수, 가처분소득, 상용직, 자영업, 배우자, DSR, LTI 등급 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어 가구주가 남성이고, 가구원수가 많고, 자영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용직에 종사하고, 가처분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DSR 등급이 낮을수록 LTI 등급이 높을수록 자가 보유 확률이 높고, 연령과 연령 제곱이 정(+)과 부(-)로 나타나 생애주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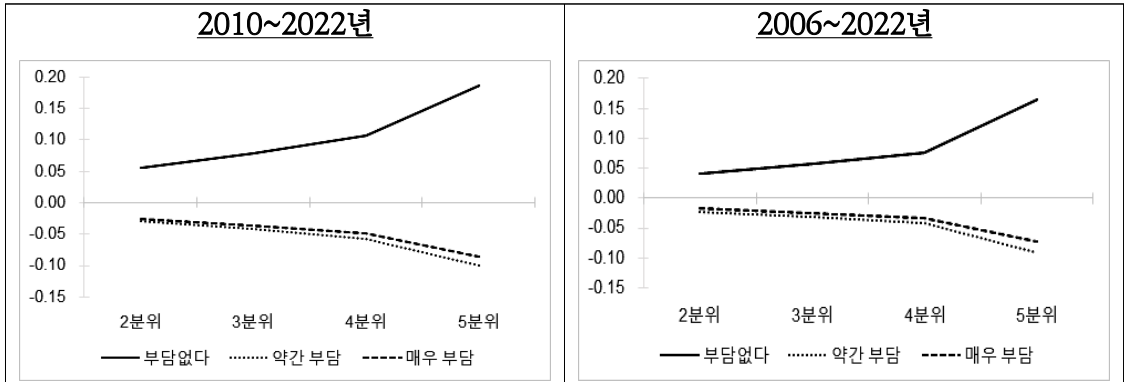
-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관한 결과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두 기간 모두에 대해 설명변수의 부호 측면에서 동일한 추정 결과를 보여줌.
 - 수도권, 남성, 대졸이상, 상용직, 자영업, 가처분소득 변수들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구주가 남성이고,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상용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가처분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이 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가구원수, DSR, DTA, LTI, 다중채무 가구, 유형별 금융채무 비중,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채무 사용 변수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어 가구원수가 늘수록, 가계부채 위험 등급 지표가 올라갈수록, 다중채무 가구일수록, 유형별 금융채무 비중이 있고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채무 사용이 있으면 원리금 상환에서 생계비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균에서의 조건부 한겻값의 비교

- 주어진 설명변수를 평균으로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부 한겻값을 구하여 특정 설명변수가 주관적인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의 경우 고분위로 올라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그림 4-15) 참조).
- 2010~2020년 경우 ‘부담없다’는 것에 대한 한겻값이 1분위에 비해 고분위로 갈수록 한겻값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약간 부담’과 ‘매우 부담’에 대한 한겻값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으며, 1분위에 비해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한겻값이 감소하는데, ‘약간 부담’의 한겻값이 ‘매우 부담’의 그것보다 약간 더 큼.

- 2016~2020년 경우에도, 전체기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분위 간 한겻값의 차이가 전체기간의 그것보다 줄어들었음.
- 2016년 이후 - 자산자료 기준이 발간 연도 3월이므로 사실상 2015년 이후 - 부동산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초저금리 상황이 나타났음.
- 이에 따라 개별 가구는 부채조달이 더욱더 쉬워지면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15] 조건부 한겻값: 가처분소득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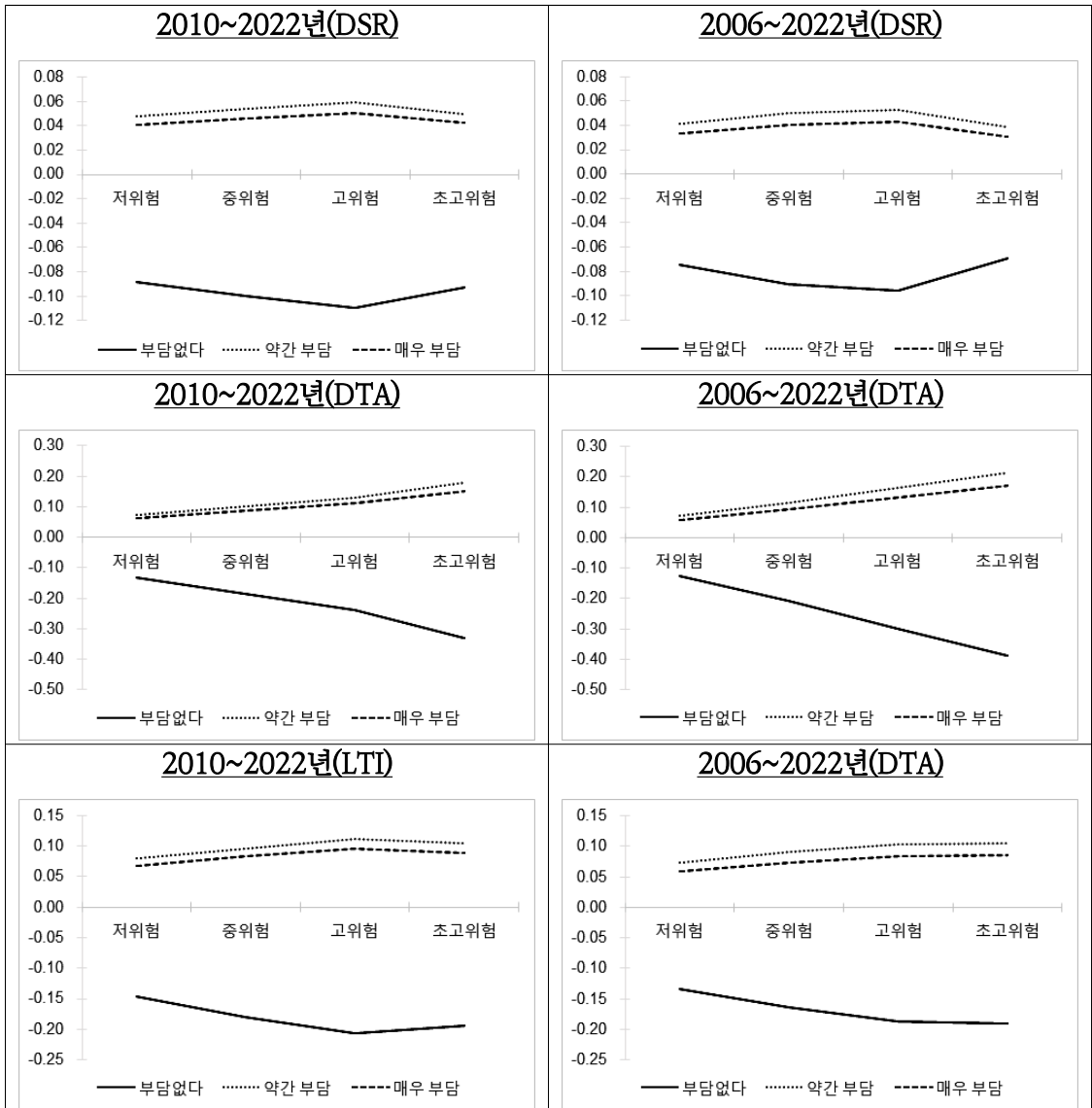
자료: <표 2>에서 도출함.

- DSR, DTA, LTI 등급에 따른 조건부 한겻값의 변동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음(그림 4-16) 참조).
- 이는 전체기간이나 2010년대 후반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DSR과 LTI의 경우 등급이 저위험에서 고위험으로 올라가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데 반해, 초고위험 등급에서는 그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약간 부담의 한겻값이 매우 부담의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DSR과 LTI의 한겻값의 절댓값을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므로 후자가 주관

적인 상환 부담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기간별로 보면 DSR과 LTI의 경우 2010년대 후반 이후의 조건부 한갯값이 전체기간의 그것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 초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그림 4-16] 조건부 한갯값: 가계부채 위험 등급의 경우



자료: <표 2>에서 도출함.

- 저량 지표인 DTA는 DSR과 LTI와는 약간 상이한 패턴을 따르고 있음.
- 저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DSR과 LTI와 같이 선형적으로 주관적인 상황 부담의 조건부 한계값이 증가하고 있음.
- DSR의 조건부 한계값의 절댓값이 DSR과 LTI의 그것보다 훨씬 커서 이 지표가 주관적인 상황 부담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또한 2016년 이후 기간의 조건부 한계값이 전체기간의 그것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시장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의 증가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

- 가계부채 위험 지표 중에서 DTA > LTI > DSR 순으로 주관적인 상황부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DTA 지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의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
- DSR과 LTI 지표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그 시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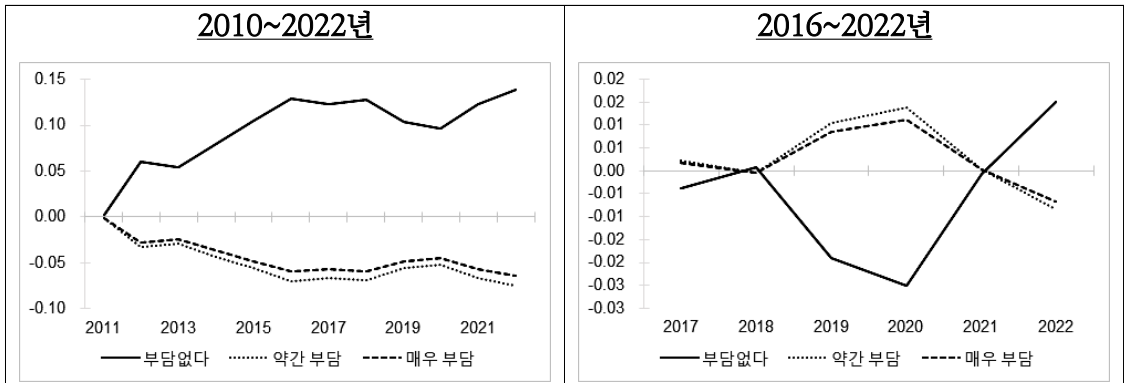
- 한국의 가계는 소득상환보다는 담보 중심의 부채조달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지만, 초저금리가 계속될 것이고 자산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경기가 달아오르면 변동금리의 거치식 분할 상환이 주종을 이루면서 소득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위험 지표는 오히려 가구의 주관적 상황 부담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시기별 효과를 보면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한갯값의 변동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2020년 이후 주관적 상황 부담이 떨어지고 있음(그림 4-17) 참조)
 - 반면에 2016~2020년 사이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부채를 조달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따른 초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기대가 팽배했음을 시사함.

- 2010년대 후반 이후를 분석 대상으로 하면, 전체기간의 그것과는 달리 상황 부담 정도가 2018~2020년 사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여 초저금리 상황이 발생한 2020년 이후 이는 반전되었음.
 - 이는 앞서 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
 - 다른 측면에서, 이는 2020년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정도의 대출 규제를 단행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
 - 결국, 낙관적 기대, 아니면 대출 규제의 효과 모두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 중위험 이상의 DSR 등급 비중은 떨어지고, 반대로 DTA의 그것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낙관적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금리 변동이나 소득 변동에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쉽게 꺾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해서 소득상환 기반 DSR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7] 조건부 한계값: 연도의 경우



자료: <표 2>에서 도출함.

-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주관적인 가계 행태와 객관적인 가계부채 위험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음.

4. 정책적 함의

1) 요약

□ 분석 결과의 요약

-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에 따르면,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 항목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순자산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했음.
-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가구 대비 약 2/3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상당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여 있음.
- 주택가격이 급등한 2010년대 후반 이후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음.

- 다중채무 가구 비중은 2010년대 후반 이전에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늘어나 주택시장 경기와 대략 연동되어 있음.
-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가처분소득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순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분위의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상위 5분위의 그것보다는 작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전자의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후자의 그것처럼 증가했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DSR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위험 이상 등급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저위험 등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계부채 위험은 가처분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 높으며, 5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후자에서 추세적으로 중위험 등급 이상의 비율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반전하였음.
- DTA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저위험 등급 비중뿐만 아니라 중위험 등급 이상 비중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했지만, 최근에 반전했음.
- 안정 등급의 가계 비중이 매우 높아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단언할 수가 없지만, DSR처럼 저소득분위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가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LTI 지표로 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DSR과 DTA와 달리 중위험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DSR과 DTA의 추이는 상반된 추세를 보여주는데, 전자는 역 U자형을, 반면에 후자는 U자형을 보여주며, LTI는 계속해서 선형 증가했음.
- DTA와 DSR 지표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일시적 경감 등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은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무관한 LTI 지표는 선형 증가하고 있음.
- DTA 100%, DSR 40% 이상 가구인 위험 가구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매우 미미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보건 위기 시기에는 하락하였음.
- 이는 DTA와 DSR 지수가 자산시장 붐과 금리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임.
- DSR, DTA, LTI 지수 중 어느 하나가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를 과다채무 가구로 규정하면, 그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DSR과 DTA의 결합 분포를 보면, DSR 측면에서 중위험 등급 이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감지되지만, DTA 측면에서는 안정 등급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계부채의 용도를 보면,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이외 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용도 비중이 제일 높으며, 가처분소득별로 보면 대출 용도가 분위별로 상이하지만, 저분위일수록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 꽤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주관적인 부채상환 부담 정도는 내림세이기는 하지만, 원리금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약 70% 안팎으로 매우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음.

-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대답한 가구 비중이 5분위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내림세이지만, 1분위의 경우 다른 분위와 달리 201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대답한 가구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내림세이지만, 저소득분위일수록 그 비중의 절댓값은 매우 큼.
- 주관적인 부채 상환부담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 지표 중에 DTA > LTI > DSR 순으로 주관적인 상환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DTA 지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의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
 - DSR과 LTI 지표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그 시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한국의 가계는 소득상환보다는 담보 중심의 부채조달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지만, 초저금리가 계속될 것이고 자산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임.

2) 함의

□ 자산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경기 순응적인 가계부채

- 함춘호 외(2015)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특히 주택경기에 대한 경기 순응성이 있음을 분석한 바가 있음.
- 이 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0년대 중·후반 박근혜 정부의 ‘빚내고 집 사라’

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2020년대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한 초저금리 등으로 가계의 부채조달 비용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전 국민의 재테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순자산의 지니계수 상승과 부채 항목이 이에 기여하였음.

- 정의상 ‘순자산 = 총자산 - 부채’의 등식을 사용하면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0년대 중·후반 초저금리 금융환경은 실증적으로 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부채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경기 순응적인 가계부채는 ‘금융주도 부채경제’를 상정할 수가 있음.

□ ‘금융 주도 부채경제’의 등장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큼(심영, 2020).
- 정부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그 이후 가계대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는 가계의 부채 행태에 영향을 미쳤음.
-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경제’로 이해할 수가 있음(박찬종, 2018).
-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대출 중심의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그 이후에는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주도 부채경제’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라는 것임.

- 가계 금융 자유화에 따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이 좋아진 상황에서(Aalbers, 2016), 강력한 ‘주택-금융’ 주기가 형성될 수가 있음(Ryan-Collins, 2022: 92).
 - 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의 금융 수요를 견인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강력한 피드백을 일컫는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자산 구매력은 소득, 대출, 상속과 증여, 자산처분 등에서 나오는데, 가계대출이 구매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성은 주택가격 변동과 강한 연계성을 가짐.
 - 이처럼 주택시장 변동과 가계대출 간 주기적 연관이 강화되어 부채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부채주도 성장에서, 가계는 합리적인 자산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조세부담 가중과 같은 주거 관련 비용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소위 ‘구성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음(정준호, 2022).

- 저성장이 만연하고 실질 금리가 부(-)인 상황에서는 생산적 투자가 거의 없으며, 이 경우 잉여 자본은 주택 등과 같은 자산 투자 붐을 창출할 수가 있음(Summers, 2016).
 - 이처럼 생산적 자본의 수익률이 낮아서 발생한 ‘자산 거품’은 자본이 생산적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며,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산 거품’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음(Tirole, 1985).
 - 이에 따라 자산 가격 거품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금융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택-금융’ 간의 연관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통한 거시적인 통화정책과 금융기관 규제를 이용하는 미시적인 금융정책 간의 연관을 맺는 방식을 달리하는 일련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거시적인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더라도 미시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이에 동조화되

는 것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원리금 균등 분할 고정 담보대출은 차주의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여주고, 금융기관의 차주에 대한 소득상환 여력에 대한 대출 심사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채무상환 능력을 강화하는 DSR의 운용을 통해 금융기관이 차주의 가계대출 총량을 고려함으로써 다중 채무자의 양산을 막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대출 심사 시스템을 담보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어야 함.

□ 양극화된 가계대출

- 고소득 가구는 고신용을 이용하여 부채를 많이 내고 이를 자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생활비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소득수준별 상이한 대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예를 들면, 급증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신용 접근성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저소득층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와는 상이한 ‘two track’ 접근이 필요함.
 - 가령,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저소득 가구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무 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침체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자산시장 투자를 위해서 과도한 부채를 이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정세은·박종선, 2023).
- 현재 중산층 가구도 소득상환 측면에서 부채위험이 크며, 이는 자산시장의 변동 여부에 따라 그 위험이 클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재 중상류층의 가계부채 위험은 부동산경기가 경착륙하지 않거나 경기침체가

- 가시화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부채상환 부담으로 금융불안정성이 고조될 수가 있음.
- 특히 가처분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가 많은데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이 가구들이 쉽게 상환 불능에 처할 수 있음.

 - o 회귀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가계는 담보 중심의 DTA 지표를 소득상환 중심의 DSR 지표보다 가계의 대출 행태에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소득 중심이 아니라 담보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청년층의 대출 기회가 제약되고, 장년층의 추가적인 자산 투자로 대출이 이용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담보 중심의 대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함.
 -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낙년(2019),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43(3), 437~482.
- 김재용(2014), 『주택자산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현정(2010),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권 제3호, 77~94.
- 김현정·김우영(2009),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5권 제3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김현정·김우영·김기호(2009),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66호, 한국은행.
- 박윤태·노정현(2017), “가구의 소득 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145~158.
- 배영목(2015), “가구주 고용유형별 가계부채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발전연구』 21(3), 1~28.
- 백은영·성영애(2012), “부채취약가계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1(2), 225~240.
- 심영(2020), “가계의 부채 행동에 대한 신용정책의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3), 47~79.
- 전승훈·임병인(2013),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분석,” 『한국경제연구』 31(1), 97~124.
- 정세은·박종선(2023), “코로나19 위기와 과다부채 가구 문제,” 『사회경제평론』 70호, 83-112.
- 정준호(2022),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의 원인과 효과,” 『경제와 사회』 제135호, 70~117.
- 함준호·조현철·권영철(2015), “가계부채의 경기 순응성과 거시정보결합 신용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21(1), 1~63.
- 현대경제연구원(2016),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제684호.

- Aalbers, M. B.(2016),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London: Routledge.
- Heckman, J. J.(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4), 475~492.
- Heckman, J.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Lerman, R. I. and Yitzhaki, S.(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51~156.
- Ryan-Collins, J.(2022), "Mortgage debt and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in C. Harker and A. Horton(eds.), *Financing Prosperity by Dealing with Debt*, London: UCL Press, 89~101.
- Sastre, M. and Trannoy, A.(2002), "Shapley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some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Economics* 9(1), 51~89.
- Shorrocks, A. F.(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1
- Summers, L. H.(2016), "The age of secular stagnation: what it is and what to do about it," *Foreign Affairs* 95, 2~9.
- Tirole, J.(1985), "Asset bubbles and overlapping generations," *Econometrica* 53(6), 1499~1528.

〈부표 1〉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방법

- Shorrocks(1982)의 불평등 지수의 요인 분해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전체 자산(Y)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 등 하나 이상의 자산 항목(f)별로 구성된다고 하면, 전체 자산의 불평등 지수(I_Y)는 자산 항목별 기여도(S_f) 합계와 같음($I_Y = \sum_f S_f$).
- 여기서 $S_f > 0$ 이면 해당 자산 항목은 불균형 효과를 초래하고, 반면에 $S_f < 0$ 이면 균형 효과를 나타낸다고 봄.
- $s_f \equiv \frac{S_f}{I_Y}$ 라고 정의하면 $\sum_f s_f = 1$ 이며, s_f 는 자산의 불평등(I_Y)에 대한 자산 항목별 f 의 절대적 기여도이고, s_f 는 상대적 기여도 ‘불평등의 요인 가중치’(component inequality weight)라고 함.
- Shorrocks(1982)은 s_f 가 전체 자산의 분산으로 조정된 각 자산 항목과 전체 자산 간 공분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에 적용했음.
- $s_f = \frac{cov(f, Y)}{\delta_Y^2}$
- 이러한 Shorrocks(1982)의 분해법은 다음과 같이 다른 불평등 지수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음.
- $I_Y^{t+1} - I_Y^t = \sum_f (s_f^{t+1} I_Y^{t+1} - s_f^t I_Y^t)$

○ Lerman and Yitzhaki(1985)은 Shorrocks(1982)의 분해법을 지니계수에 적용하였음.

- 총자산의 지니계수 G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G = \sum_{k=1}^K S_k G_k R_k$$

- 여기서 S_k 는 자산 항목 k 의 비중을 나타내고, G_k 는 자산 항목 k 의 자산 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이며, R_k 는 자산 항목 k 와 총자산 지니계수 G 간의 지니 상관계수 ($R_k = Cov[y_k F(y)] / [Cov(y_k, F(y_k))]$)를 의미하며, $F(y)$ 와 $kF(y_k)$ 는 총자산과 자산 항목 k 의 누적 분포임.

○ 총자산에서 특정 자산 항목의 비중이 크면 그 자산 항목은 당연하게도 총자산의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자산 항목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G_k = 0$), 그 비중이 커도 전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S_k \times G_k$ 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자산 분포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 가구가 그 자산 항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총자산의 불평등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음.

○ 특정 자산 항목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 특정 자산 항목이 전체 자산 분포의 상위에 집중되어 있으면(R_k 가 정(+)이고 크면), 불평등이 확대될 것임.

- 이와는 반대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자산 항목이 저자산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면, 불평등이 완화됨.

○ 집중 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는 $C_k = R_k \cdot G_k$ 는 가구를 총자산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의 자산 항목 k 의 지니계수를 의미함.

-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자산 항목별 집중 계수의 가중 합계임.

〈부표 2〉 헤크먼 표본 선택 모형

- 헤크먼 표본 선택 모형은 선택(selection) 방정식과 결과(outcome) 방정식 두 개로 구성되며, 순차적으로 추정함.
- 선택 방정식은 이항 프로빗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회귀분석 결과가 결과 방정식에 반영됨(Heckman, 1979).
- 여기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은 표본 선택 편의를 통제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이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결과(outcome) 방정식 추정: 순서형 프로빗 모형
$$Y_i^* = x_i\beta + \epsilon_i$$
$$Y_i = j \text{ if } \mu_{j-1} < Y_i^* \leq \mu_j$$
$$S_i = 1 \text{ 일 경우 } (Y_i, x_i) \text{ 이 관측됨.}$$
- 표본 선택 방정식
$$S_i^* = z_i\gamma + \mu_i$$
$$S_i = 1 \text{ if } S_i^* > 0, Y_i = \mu_{j-1} < Y_i^* \leq \mu_j$$
$$S_i = 0 \text{ if } S_i^* \leq 0, Y_i \text{ 는 비관측}$$
- 여기서 Y^* 는 잠재(latent) 변수, z_i 는 표본 선택 과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γ 는 추정 계수임. 그리고 Y 는 결과를 나타내는 순서형 종속 변수, x_i 는 Y 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β 는 추정 계수, μ_i 와 ϵ_i 는 두 방정식의 오차항임.
- 무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표본 선택 방정식의 종속 변수로 여기서는 자가여부 변수를 사용하고, 결과 방정식의 종속 변수는 원리금 상환의 생계비 부담 정도임.
- 전술한 바와 같이, 부채 용도 중에서 부동산 구입이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문제가 주로 부동산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표본 선택 방정식의 종속 변수로 '자가 여부' 변수를 사용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 불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세계화로 인하여 금융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은 대단히 커져서, 국민 생활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금융 불평등의 핵심 요소인 부채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채는 개인이나 가계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된 대출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부채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부채의 역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고소득층에게 부채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인 레버리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현재 부족한 생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채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 가구의 부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신용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저소득층은 신용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더 나아가 사금융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 제도하에서는 고소득 계층이나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금융자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금융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자원을 이용하기가 더 어렵고,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 시스템은 경제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는 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정책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달라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지원, 복지와 재무 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은 원리금 상환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혹은 정부 보증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부채로 고소득을 올리는 가구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조크레딧(mesocredit)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제도라면, 메조크레딧은 선진국에서 신용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의 그라민 은행(Grammeen Bank)는 빈곤층에게 적은 규모의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한다. 비영리 은행으로 빈곤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적은 규모의 창업 지원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창업자금의 지원 및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탈빈곤을 돕는 것이 메조크레딧이다. 메조크레딧은 민간 후원과 정부

지원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과 투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음의 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구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음의 소득 계층은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하며, 가구의 생계 자체가 어렵다. 이들은 4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애과정을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연령 세대에 따라서 대출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많았고, 30대와 40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았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입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대출 목적에 따른 차등적 금리를 제도화하여 청년기와 중장년기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생애 단계 맞춤형 금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전월세나 내집 마련이 부채의 주된 동기라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주택정책이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2023 연구보고

한국의 금융불평등

2023년 5월 인쇄 · 발행

발행처: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서울시 중구 정동길3, 12층(경향신문사, 본관)

전화 02-6382-3427~8

팩스 02-6365-3429

홈페이지 <http://www.ubuntufund.or.kr>



연구보고서01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02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 카드, 증권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03
한국의 금융불평등